

연구 결과 요약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본 연구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범국민안보의식조사 30년간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범국민안보의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의식의 장·단기 변화 추세를 분석함
- 둘째, 다섯 가지 분야(국민안보의식, 한미동맹, 대주변국 인식, 남북관계, 국방정책)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안보의식의 변화요인을 파악함.
- 셋째, 다섯 개 분야별로, 안보의식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국방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아울러 분명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그래프, 도표를 활용한 안보의식 데이터 및 통계분석 결과의 시각화를 구현함.

2.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안보의식의 변화추세를 그래프, 이미지, 도표 등으로 정리해 국방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국민안보의식과 주요 개인차원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국방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통계적 근거자료를 마련함.
- 안보의식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국방정책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및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3. 안보의식 변화추세 분석

국민안보의식

-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부정적인 인식(“불안정하다” 또는 “낮은 편이다”)이 우세하였으나, 2018년부터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일반인의 안보의식과 전문가의 안보의식을 비교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일반인은 “보통이다” 등의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가의 경우에는 “높은 편이다” 혹은 “낮은 편이다”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임.
- 둘째, 두 집단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편이나, 전문가의 응답에서 해당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셋째, 시기별로 응답의 변화는 전문가의 경우 더욱 명확히 나타남.
- 한편 시기별 응답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과거 전문가들은 일반인의 안보인식을 비교적 ‘낮은 편’ 이라고 응답했으나, 최근 5년 동안에는 ‘매우 높다’라는 의견이 증가했음.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진 최근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둘째,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하여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017년에는 매우 낮았으나, 2018년에 높아졌음.
 - 이러한 응답은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등이 반복되었던 2017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
 - 더불어 2018년에는 북미대화 및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등의 정치적 사건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대주변국 인식

- 대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는 전 시기에 걸쳐 미국을 안보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
- 2009년부터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로 중국을 선택하는 국민과 전문가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논란과 중국의 경제 보복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주변국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인보다 전문가의 의식에서 우호의 정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둘째,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률의 시기별 변화는 일반인의 응답률 변화보다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일반인과 비교해) 외교적 갈등이 군사적 협력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함.
- 시기별 응답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남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남한에 우호적 입장이라는 응답이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201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다가 2017년부터 북한과 미국 두 국가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등의 환경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둘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의 태도가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최근 3년간은 급격히 감소하였음. 한국과 일본 간 외교관계 악화가 미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한미동맹

-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전문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돈독하다는 것이었음.
- 다만 2016년부터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하다’는 응답이 다소 줄어든 반면 ‘불편하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음.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이와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은 한미 군사동맹, 경제협력, 문화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음.
- 따라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남북관계

- 남북관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북한정권을 위협 요인 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음.
- 더불어 북한주민을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중도 증가하였음.

- 또한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인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최근 크게 증가한 반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음.
- 특이점은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오히려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변화는 최근 3년간 북한의 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와 한미관계가 화해 무드로 귀결된 경험적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한편 가까운 미래의 통일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5년 이내 통일을 전망하기보다는 20년 이내 통일을 전망하는 경우가 많았음.

국방정책

-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주제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대다수의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은 국민개병제에 대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와 일반인들 모두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했으며, 군 내 인권 보장정도에 대해서도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편이며, 그 이유는 투명성에 대한 문제부터 소통부재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 있음.
- 국방비 사용에 대한 평가 역시 호의적이지 않았음.
-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첨단무기 체계 확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우리 군의 해외파병에 대해 과반수의 일반 국민들은 국제평화 증진, 국가이익 창출 기반 강화라는 명목 하에 찬성하고 있음.
- 국방홍보 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접촉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 국방 홍보 매체와 발표에 대한 투명성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안보의식 결정요인 분석

- 안보의식 결정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한·미·일 군사협력,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지역 간의 인식차가 크게 나타났음.
 - 특히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주민들의 인식은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차이를 보임.
 - 문제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변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의 60%가 북한을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는 광주/전라에 비해 약 40%나 높은 수치임.
 - 이 결과는 모든 지역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대북정책 추진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 둘째,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남북 간 군사력 비교,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군에 대한 신뢰 등의 이슈에서 남녀 간 인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군과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국방 관련 이슈도 젠더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셋째, 전 연령층이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
- 넷째, 20대 이하 청년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이는 20대 청년들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
- 다섯째, 20/30대 청년들과 여성들이 (장년층과 남성에 비해) 우리 군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함.
- 여섯째, 「국방개혁 2.0」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음. 일반국민들이 「국방개혁 2.0」의 내용을 평가하기엔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비해, 20-30대 청년층은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이러한 편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최근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 군사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상한 사실과는 별개로 다수 국민들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일 간 군사협력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장기적 연구는 필요할지라도 아직 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이 모병제보다 개병제를 지지하고 있음.
-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와 일반인들 모두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했으며 군 내 인권 보장정도에 대해서도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따라서 군 복무 환경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군은 향후 국방력의 첨단화와 동시에 G20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현대식 장병복지 시설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우리 군의 해외파병에 대해 과반수의 국민들은 국제평화 증진, 국가이익 창출 기반 강화라는 명목 하에 찬성하고 있음. 국민들이 제고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한국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국방개혁 2.0」에 대한 미진한 시민 인지도와 인식은 향후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국방부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며, 「국방개혁 2.0」의 추진 필요성과 추진 경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조사가 실시된 대부분의 연도에 걸쳐 우리 국민들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이 가장 중요한 안보 확립 방안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 한미동맹체제 강화 순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우선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되, 동시에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방어능력을 정립해 나가야 함.
-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첨단무기 체계 확보’가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동일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보면, ‘첨단무기 체계 확보’를 선택한 비중이 50.7%에 달해 조사에 참여한 절반 가까운 전문가들이 향후 국방비의 우선 투자 분야로 첨단무기 체계 확보를 선호하고 있음.
- 대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첨단무기 및 기술개발 등에 국방비를 투자하는 데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과 ICT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어 군의 정예화를 추진해야 함.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시민의 안보의식과 여론은 가장 대표적인 외교정책결정요인 중 하나임.
-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시민의 안보의식은 국방과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외정책 자체가 안보의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 (김계동 외 2016: 36-37).
- 따라서 시민의 안보의식 변화 추세와 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의식의 추이와 대한민국 외교·안보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나아가 시민과 정책결정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와 안보의식을 반영,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범국민안보의식조사 30년간의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안보의식의 중장기적 추세와 변화요인을 파악함.
 - 둘째, 안보의식의 거시적 방향성을 예측하고, 시민의식과 지지에 바탕을 둔 국방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1.2. 선행연구

- 이옥연(2004)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국민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 간 안보의식의 차이점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음. 연구 결과 남성과 여성의 안보의식 차이가 구체적 정책이나 현안이 아닌 추상적 정책기조나 안보상황에 대한 일반적 평가에서 두드러짐을 발견하였음.
- 용도(2005)은 국민안보의식 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에서 국내외 안보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용현·박영주(2011)는 대학생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국군의 전투력, 경제성장, 안보교육, 북한의 대남 도발 여부,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력, 남북교류 확대, 한미동맹 강화 여부 등의 변수를 제시하였음.

- 정병삼·조상근(2011)은 사관생도들의 안보의식 구성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242명의 생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사관생도들이 일반 시민보다 안보의식을 군사정책에 더 많이 연결 짓고 있으며, 자아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 김재홍(2012)은 국민의 안보의식과 전투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며, 총력전의 성격을 가진 현대전에서 시민의 안보의식이 정신적 전투력과 물질적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김관호·김순태(2014)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6개 정부에서 실시된 범국민안보의식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환경, 북한 위협, 한미동맹 그리고 국방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정부별·세대별로 차별화되는 ‘안보문화’의 특징을 파악하였음.
- 이동수·전상조(2014)는 대학생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 2,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분석 결과, 대학생 안보의식의 주요 결정요인은 국가체제에 대한 지지도, 사회질서의 중요성, 국방역량강화의 필요성, 문화에 대한 자긍심, 북한 위협에 대한 위기감 등으로 나타났음.
- 이상의 선행연구는 국민안보의식의 변화추세만을 파악하거나, 대학생·사관생도와 같은 특정 사회집단의 안보의식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음.
- 본 연구는 계량적 연구방법을 통해 국민안보의식의 장단기 변화추세와 변화요인을 시대, 지역, 성별, 소득수준, 학력, 직업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 나아가 시민의식과 국방정책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국방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에 비해 정책적 활용가치가 높음.

1.3. 연구의 내용과 범위

- 본 연구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범국민안보의식조사 30년간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범국민안보의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의식의 장·단기 변화 추세를 분석함
 - 세부 분야별 변화 추세를 도표 및 그래프 등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나타냄
 - 주요 정치·군사적 사건들(예를 들어, 정권교체, 촛불혁명, 남북정상회담,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이 안보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둘째, 다섯 가지 분야(국민안보의식, 한미동맹, 대주변국 인식, 남북관계, 국방정책)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안보의식의 변화요인을 파악함.
 -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 연령, 성별, 군복무, 최종학력, 출신지역, 소득수준, 직업 등의 요인들이 안보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분석함.
- 셋째, 다섯 개 분야별로, 안보의식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국방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
 - 분야별 국방정책이 시민의 인식과 지지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인지, 시민들의 안보의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함.
 - 안보의식의 미래 방향성을 예측하고, 시민의 의식과 지지에 바탕을 둔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함.
- 넷째, 국민안보의식의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식과 조사문항의 수정, 삭제 및 보완사항을 제안함.
 - 장기간에 걸친 시계열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과 문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데이터 구조와 질문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를 위해 안보의식과 외교정책에 대한 학문적/이론적 발전보다 30년간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즉, 연구의 일차적 목표는 학문적 발전이 아닌 연구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에 있음.
- 아울러 분명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그래프, 도표를 활용한 안보의식 데이터 및 통계분석 결과의 시각화를 구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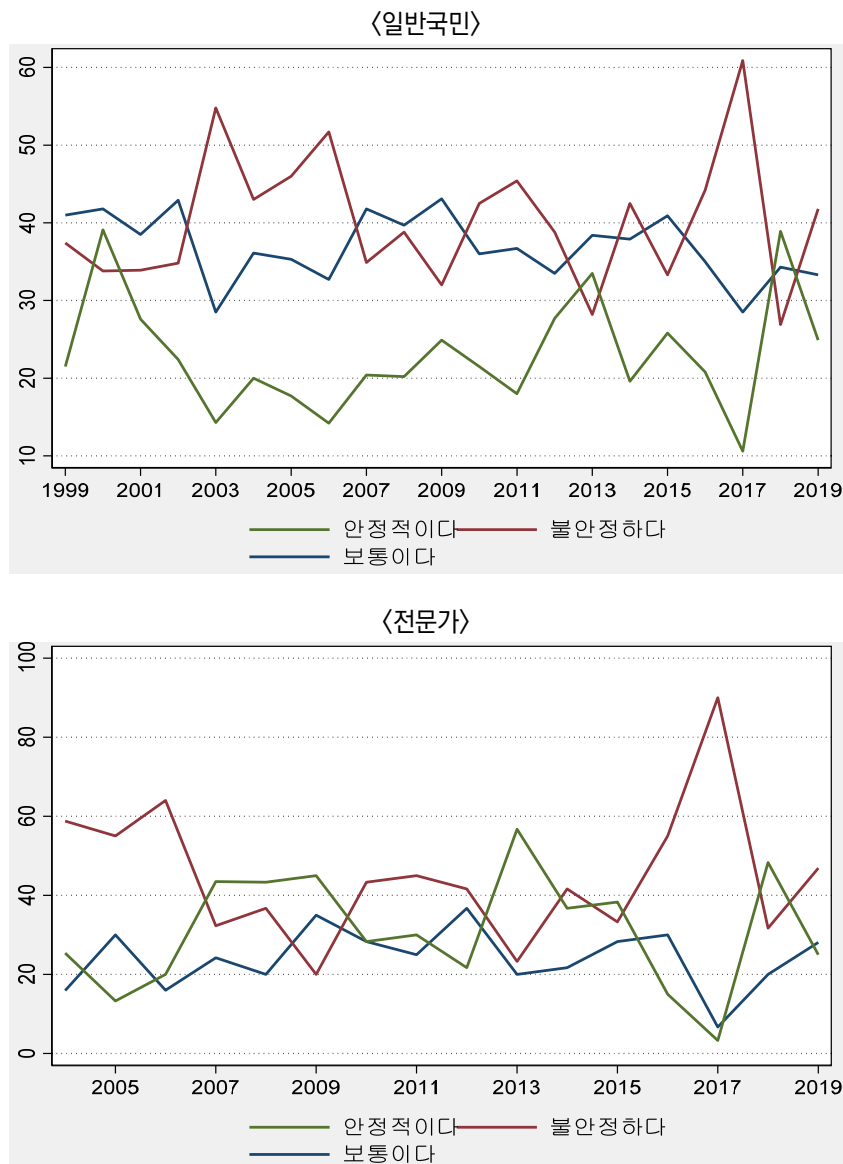
1.4.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안보의식의 변화추세를 그래프, 이미지, 도표 등으로 정리해 국방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국민안보의식과 주요 개인차원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국방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통계적 근거자료를 마련함.
- 안보의식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국방정책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및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제2장 안보의식 변화추세 분석

2.1. 국민안보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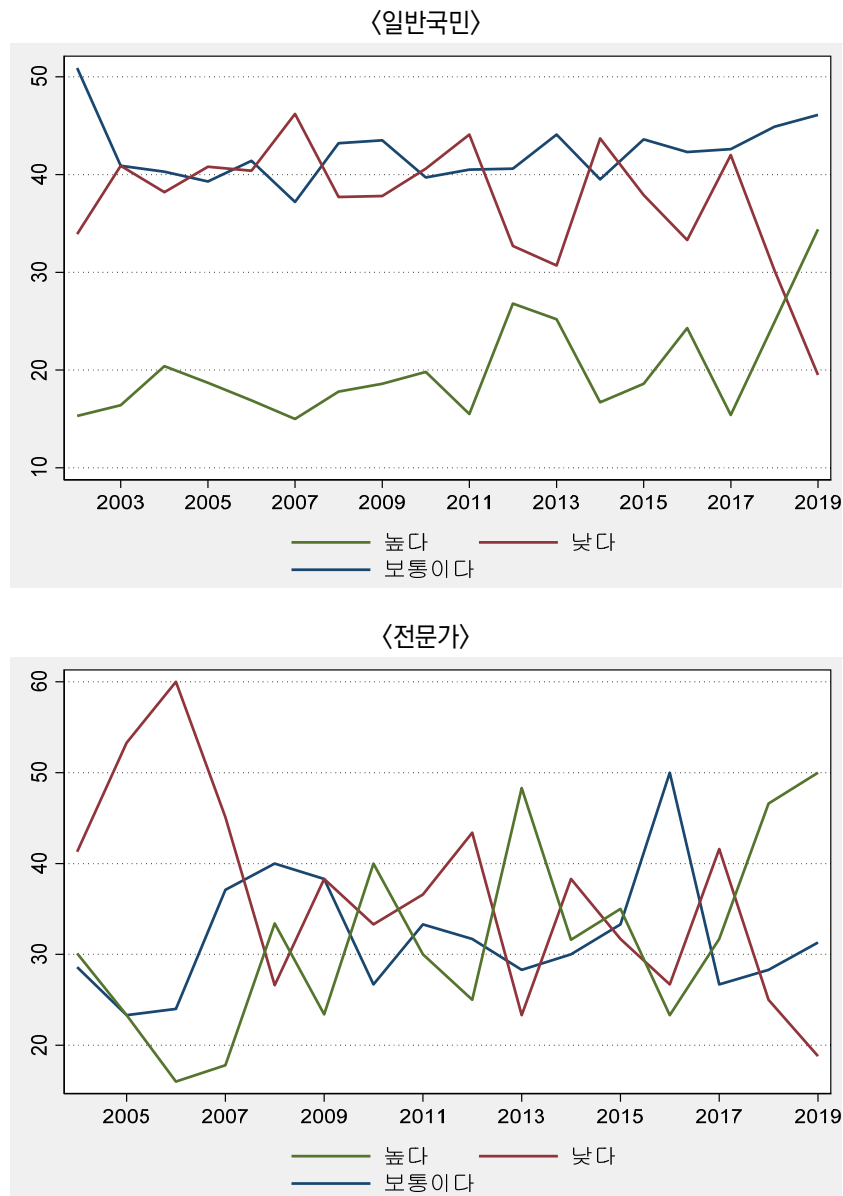
2.1.1.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그림 2-1]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단위: %)

-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일반 국민들은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하여 불안정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음. 구체적으로 안보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는 기간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는 기간이 3-4년을 간격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보임.
 - 예를 들어,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보통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다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불안정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통,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시 불안정, 이후 보통과 불안정이 반복되었음.
- 둘째, 2018년에는 처음으로 안정적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보통과 불안정이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남.
- 셋째, 2002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사 대상 년도에서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음. 2011년의 경우 해당 응답의 비중이 0.4%로 매우 낮았음.
- 한편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문가 의식 조사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첫째,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안정적 혹은 불안정적인 편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임. 즉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하여 불안정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은 일반인 의식과 구별됨.
- 더불어 안보상황을 안정적 편이라고 응답하는 비중과 불안정적인 편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의 증감폭이 매우 큰 편임.
 -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안정적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3%였으나, 2018년에는 40.0%를 기록하였음.
 - 또한 2009년에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불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6.7%였으나, 2010년에는 40.0%를 기록하였음.
- 둘째, 일반인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가장 낮음.
- 셋째,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응답하는 비중의 변화 패턴은 전문가와 일반인이 유사하지만, 비중 자체는 전문가가 일반인 보다 높게 나타남.
- 예를 들어 2019년에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일반인은 8.5%, 전문가는 14.1%를 기록하였음.

2.1.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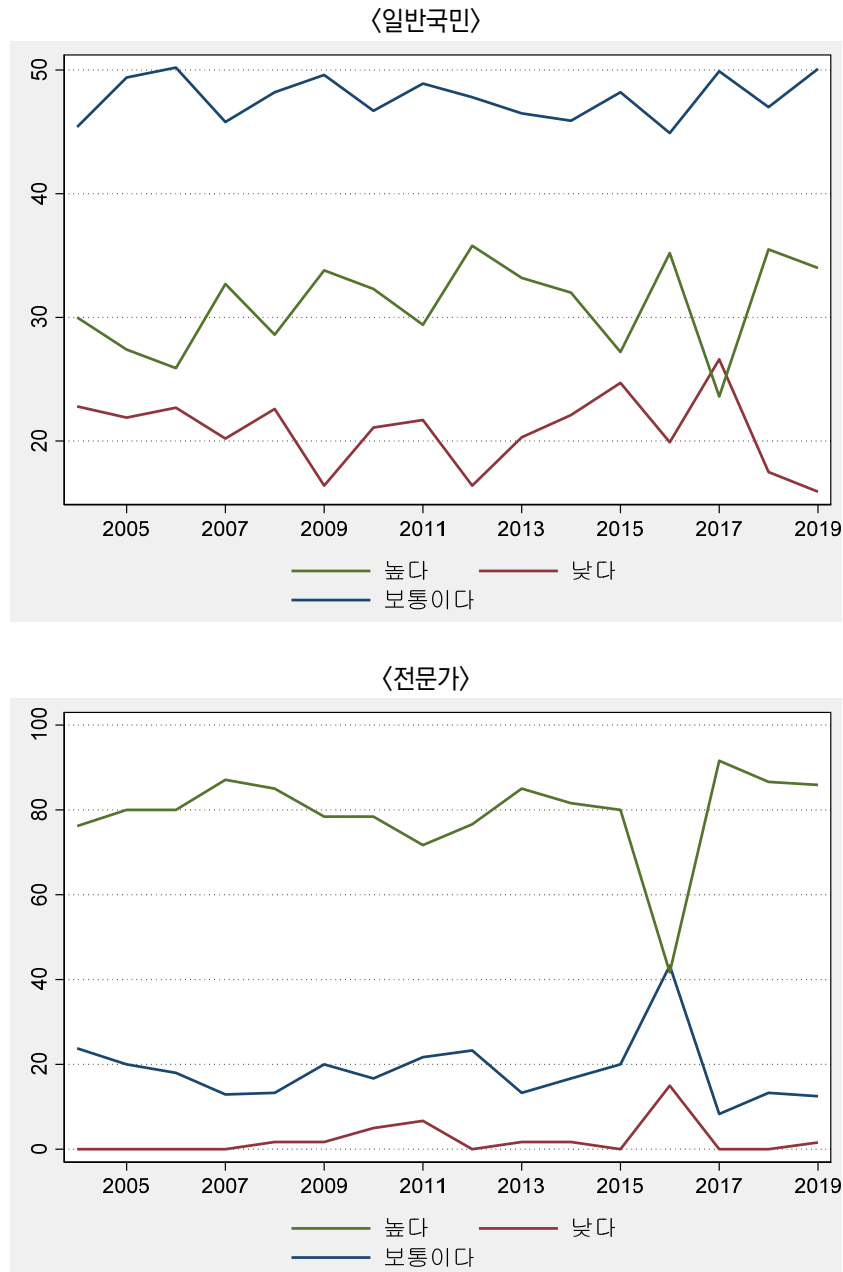


[그림 2-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은 2002년부터 2019년도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2007년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2002년에는 보통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50.9%에 달했으며, 이후 일정 수준 감소하여 2007년에는 37.2%를 기록하였고, 이후 다시 증감을 반복하다 2019년에는 46.1%를 기록하였음.
- 둘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은 편이라고 답한 비중은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2년 14.5%에서 2019년에는 32.7%를 기록하였음.
- 셋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2년 이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11년까지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 처음으로 20%대로 진입 후 2019년에는 17.1%를 기록하였음.
- 넷째, 매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보다 항상 낮게 나타났음.
- 한편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문가 의식 조사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2012년 이전까지는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해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등 다수 발견됨.
 -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일반인 조사와 구별됨.
- 둘째, 일반인 조사 결과에서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해가 한해도 없었으나, 오히려 전문가들은 2010년, 2013년, 2015년 등의 조사에 대하여 일반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2.1.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그림 2-3] 본인들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

-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냄.
- 첫째, 모든 기간 동안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비중은 5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둘째,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 내외 수준이었었는데, 2019년도에는 감소하여 14.7%를 기록하였음.
- 한편 조사 전 기간에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최소 0.4%에서 최대 4.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한편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문가 의식 조사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일반인은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을 대부분 보통이라고 의식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을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둘째,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의 안보의식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일반인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본인의 안보의식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일반인이 2.2%였으나, 전문가는 35.9%가 본인의 안보의식이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음.

2.1.4.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

〈표 2-1〉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북한의 군사적 위협	59.9	61.1	53.4	58.8	68.8	47.9	40.8
북한의 체제 불안	44.9	50.9	50.7	50.1	38.5	39.8	24.5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	29.8	19.1	23.8	18.2	22.0	27.8	40.8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	21.8	21.4	22.0	18.5	30.0	27.3	24.7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16.5	19.3	18.6	18.9	15.8	23.5	29.0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	12.8	11.3	16.8	13.5	11.1	17.8	25.4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의 위협	9.5	11.8	10.4	18.9	10.3	11.3	11.0
주변국 영토분쟁	4.7	4.7	4.0	2.8	2.3	3.8	3.7

〈전문가〉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북한의 군사적 위협	65.0	58.3	63.3	58.3	85.0	40.0	65.6
북한의 체제 불안	50.0	53.3	50.0	45.0	16.7	25.0	17.2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	15.0	13.3	10.0	16.7	40.0	38.3	51.6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	13.3	10.0	10.0	16.7	33.3	46.7	9.4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21.7	20.0	25.0	25.0	11.7	21.7	32.8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	10.0	18.3	16.7	11.7	6.7	18.3	12.5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의 위협	0.0	1.7	8.3	20.0	1.7	5.0	3.1
주변국 영토분쟁	16.7	13.3	10.0	1.7	0.0	3.3	1.6

-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 관련 일반인들의 응답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첫째, 모든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비중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으로 꼽았음.
 -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60.0% 내외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 답하였음.
 - 2018년과 2019년에는 해당 응답의 비율이 40%대로 감소하였음.
- 둘째, 북한의 체제 불안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0.0% 내외를 유지하다 최근 3년간 크게 감소하여 2019년에는 17.2%를 기록하였음.
- 셋째,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 및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도 20.0% 내외의 응답자들로부터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으로 꼽혔음.
- 특히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음이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에는 27.8%였으나, 2019년 급격히 증가하여 40.8% 기록하였음.
- 한편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문가 의식 조사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비중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으로 꼽혔음.

- 둘째, 북한의 체제 불안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최근 크게 감소한 특징을 보이는데, 이것 또한 일반인들의 의식 변화와 동일한 패턴임.
- 셋째,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음이고 응답한 비중의 증가도 일반인 의식 조사 결과와 유사함.
 -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음이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40.0%, 38.3%, 51.6%를 기록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1.5.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

〈표 2-2〉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정치의 불안	52.8	50.1	46.7	48.9	53.3	49.4	44.3
국내 경제의 불안	44.3	36.3	50.5	46.7	37.9	45.4	48.1
사회 불평등의 심화	26.1	24.9	31.3	35.3	23.1	31.3	29.8
국민 안보의식 해이	39.5	43.3	34.4	31.7	41.2	29.1	29.6
반미감정	14.3	15.3	11.3	11.8	17.8	16.3	17.4
불충분한 국방비	9.3	11.4	5.8	6.5	7.9	5.7	12.3
이념갈등	9.8	14.0	11.7	12.9	14.6	17.3	14.4
치안불안	3.5	4.0	8.3	5.9	2.9	4.3	4.3
기타	0.3	0.6	0.2	0.1	0.8	0.5	0.0

〈전문가〉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정치의 불안	30.0	25.0	31.7	45.0	45.0	15.0	51.6
국내 경제의 불안	18.3	11.7	23.3	18.3	8.3	35.0	29.7
사회 불평등의 심화	45.0	55.0	45.0	31.7	26.7	51.7	29.7
국민 안보의식 해이	30.0	35.0	23.3	33.3	28.3	23.3	20.3
반미감정	10.0	11.7	11.7	16.7	26.7	15.0	15.6
불충분한 국방비	6.7	8.3	8.3	10.0	6.7	3.3	0.0
이념갈등	53.3	41.7	45.0	20.0	50.0	51.7	48.4
치안불안	1.7	0.0	10.0	13.3	0.0	1.7	1.6
기타	1.7	8.3	0.0	5.0	5.0	3.3	3.1

-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응답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첫째, 일반인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국내 정치의 불안, 국내 경제의 불안, 사회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국민 안보의식 해이 등을 꼽았음.
- 둘째, 국내 정치의 불안 요인을 한국 국가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은 2013년 52.8%에서 201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19년에는 44.3%를 기록하였음.
- 셋째,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을 한국 국가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은 2013년에 44.3%에서 매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에는 48.1%를 기록하였음.
 - 특이점은 다른 해와는 달리 2015년과 2019년은 국가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경제 요인에 대한 응답률이 정치 요인에 대한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국가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은 30.0% 내외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국민 안보의식 해이를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은 29.1%에서 43.3%까지 범위에서 비교적 높은 편차로 비중의 증감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문가 의식 조사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 국내 경제의 불안, 사회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이념갈등 등을 꼽았음.
- 둘째, 전문가들은 일반인과 달리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국내요인으로 이념갈등을 꼽았음.
 - 해당 응답의 비중은 2013년 53.3%였으며,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19년에는 48.4%의 응답자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이념갈등을 선택하였음.
 - 해당 응답은 일반인의 경우, 10% 내외의 응답률을 가짐.
- 셋째, 국내 정치의 불안 요인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응답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음. 2013년 해당 응답의 비중은 30.0%였으나, 2019년에는 51.6%를 기록하였음.
- 넷째,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의 경우 일반인들의 응답과 달리 전문가들의 최근 응답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017년 8.3%였으나, 2019년 29.7%로 증가하였음.

2.1.6.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표 2-3〉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북 교류협력 확대	28.8	28.3	30.3	33.8	36.0	28.9	27.2	22.0	39.3	20.8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	43.4	39.2	39.4	33.8	34.3	38.5	36.9	40.8	28.0	40.1
한미동맹체제 강화	11.4	18.2	17.8	21.8	17.4	22.3	18.9	25.6	22.0	27.8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15.8	13.8	11.3	10.5	11.7	9.9	17.0	11.2	10.3	11.3
기타	0.6	0.6	1.1	0.1	0.6	0.4	0.0	0.5	0.4	0.0

〈전문가〉

척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북 교류협력 확대	26.7	16.7	26.7	36.7	48.3	33.3	38.3	15.0	35.0	18.8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	33.3	45.0	28.3	31.7	18.3	33.3	21.7	31.7	23.3	23.4
한미동맹체제 강화	26.7	20.0	31.7	23.3	23.3	23.3	23.3	45.0	38.3	43.8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13.3	15.0	11.7	8.3	10.0	10.0	13.3	6.7	3.3	12.5
기타	0.0	1.7	1.7	0.0	0.0	0.0	3.3	1.7	0.0	1.6

-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일반인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안보위협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요 응답은 남북 교류협력 확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 한미동맹체제 강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응답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2014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에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이 가장 높은 비중의 응답으로 기록되었음.
 - 해당 응답률은 2010년 43.4%를 기록한 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과 2019년에 재차 40.0% 내외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 둘째,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안보위협 요인 감소방안으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2018년 39.3%로 급격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셋째, 한미동맹체제 강화는 2010년 11.4%의 응답자가 선택한 안보위협 요인 감소방안이었음. 이후 2019년에는 27.8%의 응답자가 한국의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으로 한미동맹체제 강화를 선택하기도 하였음.
- 넷째,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가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최근 3년간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한편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문가 의식 조사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한국의 안보위협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으나, 이후 3년 동안은 남북교류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였음.
- 최근 3년 동안은 한미동맹체제 강화가 한국의 안보위협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혔음.
- 둘째, 2019년에는 한국의 안보위협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남북교류 확대가 급격히 감소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응답한 비중이 12.5%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도 3.3% 대비 약 4배 증가하였음.

2.1.7. 전쟁 발생 시 대처방법

〈표 2-4〉 전쟁 발생 시 대처방법 (단위: %)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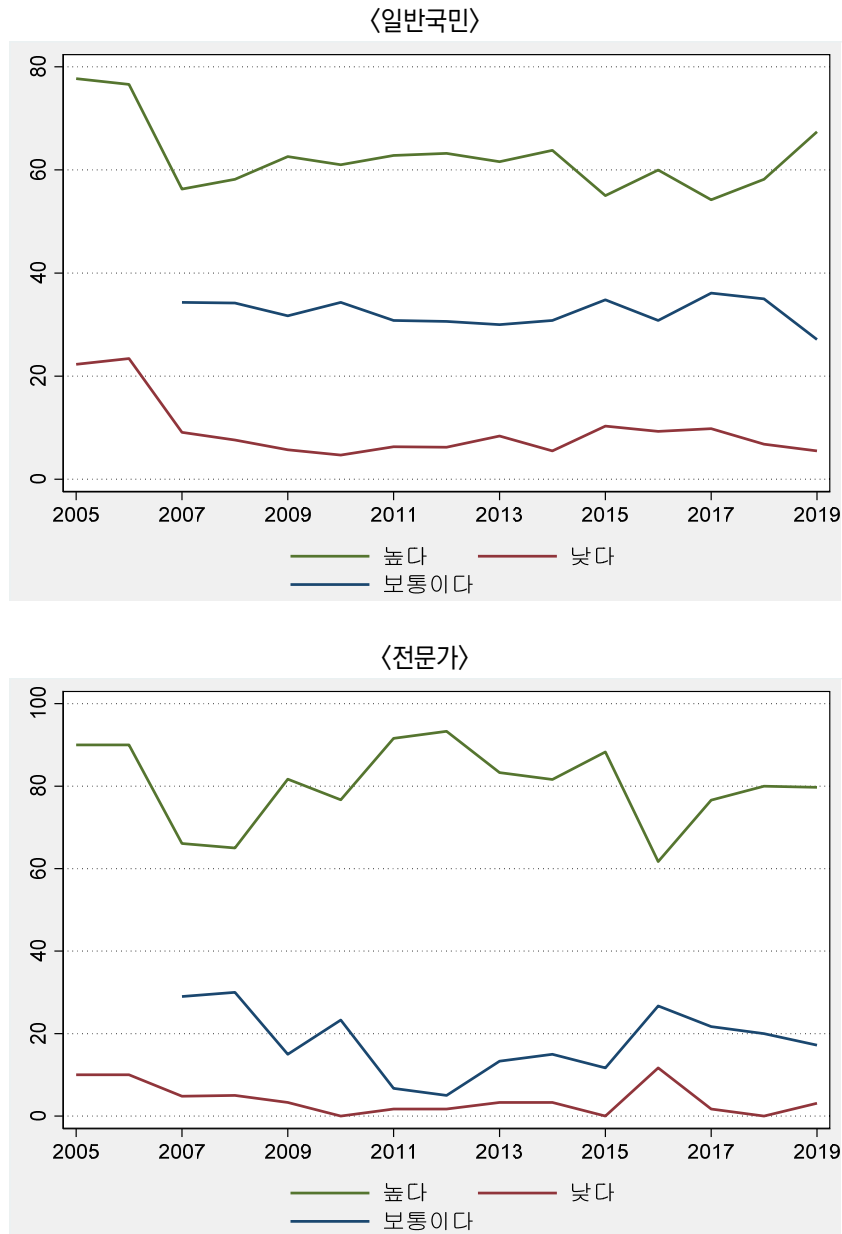
척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 하겠다	21.8	26.8	20.6	29.1	20.6	24.7	19.5	15.0	17.8	12.4	22.7	17.7	19.6	21.3	16.2	16.7
전투에 직접 참여 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 하겠다	41.1	33.3	40.5	47.6	42.7	47.6	48.4	48.9	49.1	46.0	43.6	47.1	40.6	41.6	43.5	42.0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22.3	25.6	25.8	14.5	28.0	22.7	27.5	31.2	29.3	34.6	28.9	29.8	25.0	25.5	28.7	31.3
외국으로 가겠다	4.9	5.5	4.4	4.7	3.7	4.8	4.6	4.6	3.8	7.0	4.8	5.5	5.3	5.8	4.3	3.9
잘 모르겠다	9.9	8.8	8.7	4.2	5.1	-	-	-	-	-	-	-	9.6	5.8	7.4	6.2

〈전문가〉

척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 하겠다	19.0	18.3	22.0	25.8	21.7	13.3	13.3	16.7	23.3	20.0	10.0	33.3	11.7	6.7	13.3	23.4
전투에 직접 참여 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 하겠다	66.7	71.7	64.0	58.1	68.3	85.0	78.3	73.3	71.7	70.0	75.0	58.3	38.3	80.0	73.3	62.5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3.2	1.7	8.0	4.8	5.0	1.7	6.7	8.3	3.3	8.3	13.3	6.7	20.0	5.0	6.7	6.3
외국으로 가겠다	3.2	1.7	2.0	1.6	1.7	0.0	0.0	1.7	1.7	1.7	1.7	1.7	6.7	0.0	0.0	1.6
잘 모르겠다	7.9	6.7	4.0	9.7	3.3	0.0	-	-	-	-	-	-	23.3	8.3	6.7	6.3

- 전쟁 발생 시 대처방법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식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 ‘전투에 직접 참여 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외국으로 가겠다,’ 등의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모든 해에 ‘전투에 직접 참여 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비중은 평균 45.0% 내외 수준임.
- 둘째, 전쟁 발생 시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의 비중은 2003년 23.6%에서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9년에는 16.7%를 기록하였음.
- 셋째,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는 응답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20.0~30.0% 수준에서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며, 외국으로 가겠다는 응답의 비중도 5.0%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한편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쟁 발생 시 대처방법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식 조사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모든 해에 전쟁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만 해당 응답의 비중이 일반인들보다는 높아 60.0-70.0%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둘째, 전쟁 발생 시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긴 하나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17년 6.7%, 2018년 13.3%, 2019년 23.4%를 기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쟁 발생 시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의 비중은 일반인의 응답 비중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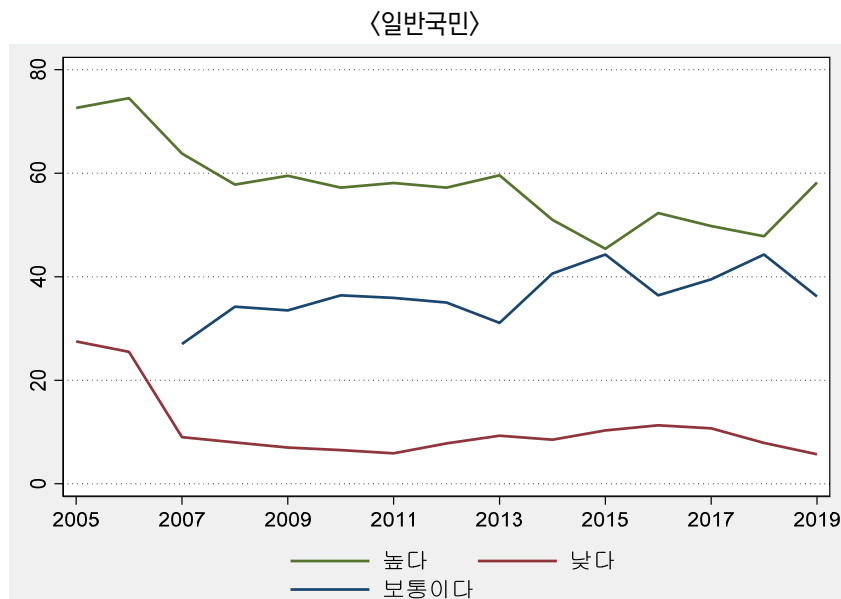
2.1.8. 국가정체성 평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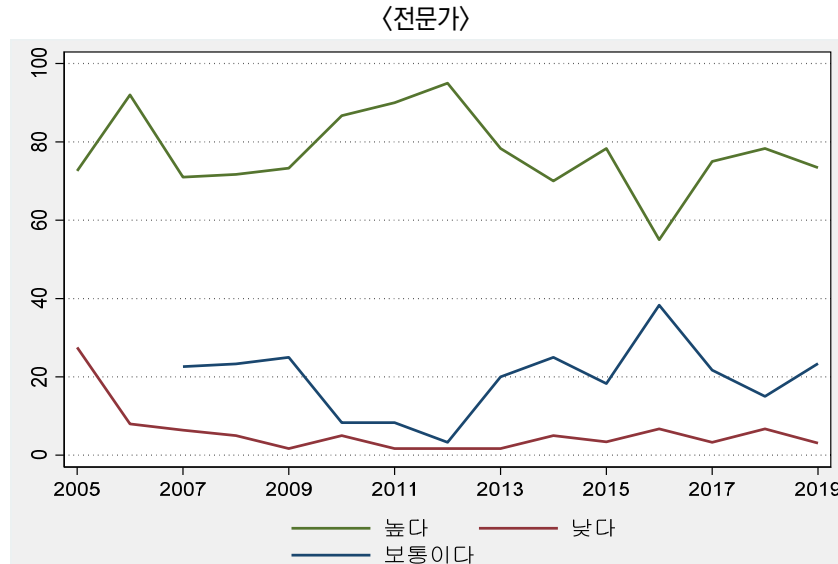


[그림 2-4] 국가정체성 평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단위: %)

- 국가정체성 평가와 관련,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모든 해에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의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해당 응답의 비중은 2007년 40.8%에서 2019년에는 54.5%로 증가하였음. 약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둘째,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최소 4.2%에서 최고 9.7%까지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해왔음. 더불어 ‘매우 낮은 편이다’의 경우는 2007년 제외 1.0% 이하의 수준이며, 2019년에는 0.0%를 기록하였음.
- 셋째,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34.3%였으며, 2019년에는 27.1%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수준을 평가한 결과,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응답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다’ 이었음. ‘보통이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던 일반인과 비교해 차이점이 발견됨.
- 더불어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보통이다’는 응답은 일반인과 비교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1.9. 국가정체성 평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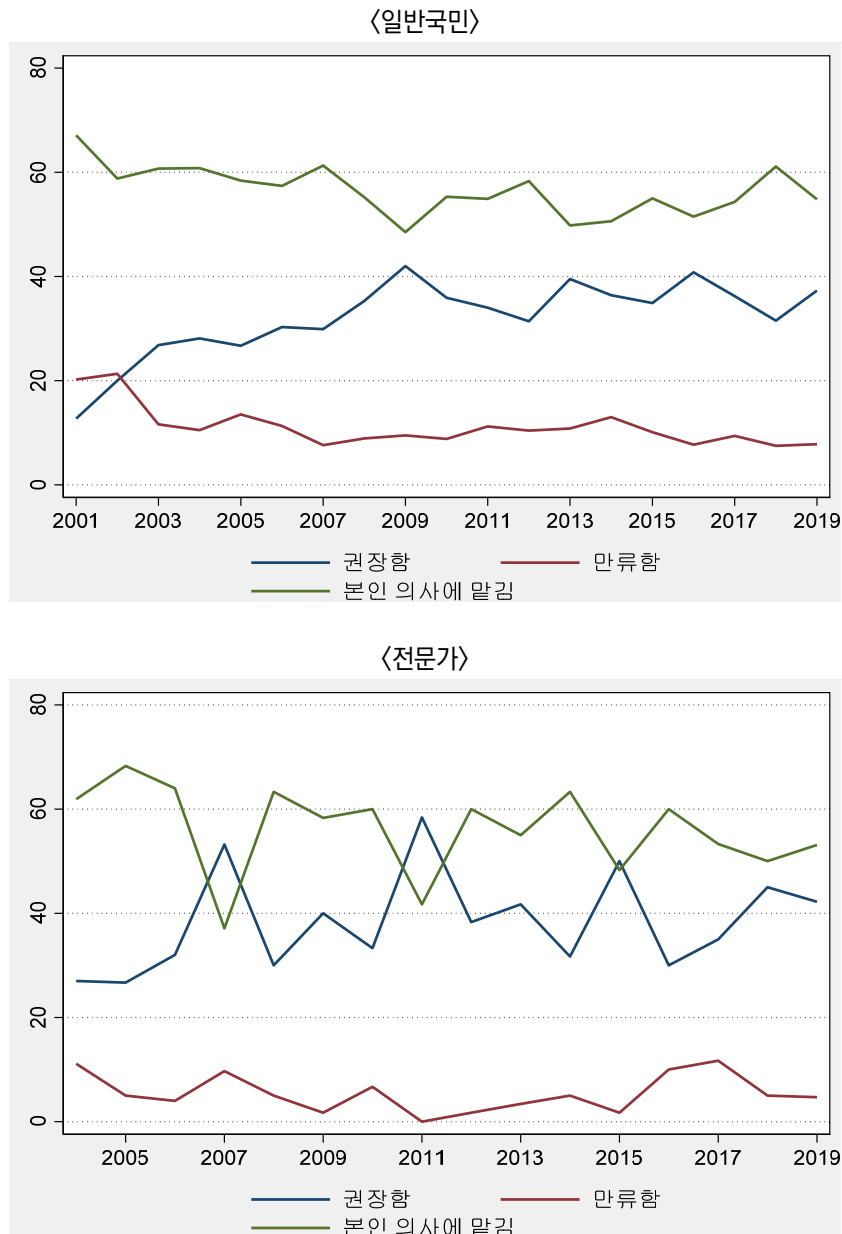
[그림 2-5] 국가정체성 평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단위: %)

- 국가정체성 평가와 관련,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라는 응답은 2007년에는 44.0%를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34.2%를 기록하였음. 다만, 2019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급격히 증대하여 47.2%를 기록하였음.
- 둘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의 수준에 대하여 '보통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에는 27.0%에서 증감을 반복한 후 2019년에는 36.2%를 기록하였음.
- 요컨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전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높다'거나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70.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정체성을 평가한 것과 관련,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의 수준을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라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인 의식 변화와 유사하나, 응답 비중은 일반인보다 전문가가 높은 편임.
- 전문가 중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의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7년에는 58.1%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40.6%를 기록하였음.

- 둘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의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증감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인들은 10% 내외의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것과 구별됨.

2.1.10.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

-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본인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응답의 비중이 모든 년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해당 응답의 비중은 40.0%에서 70.0% 범위에서 지속적인 증감을 보였음.
- 둘째,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을 권장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2001년 9.6%에서 증가하여 2019년에는 33.6%를 기록하였음.
- 셋째, ‘만류 하겠다’와 ‘적극 만류 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요컨대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식보다는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응답이 50% 내외 수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다만 2019년에는 해당 응답의 비중이 감소하여 23.4%를 기록하였음.
- 둘째,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률은 최근 변화의 폭이 매우 큰 편임.



[그림 2-6]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

2.1.11.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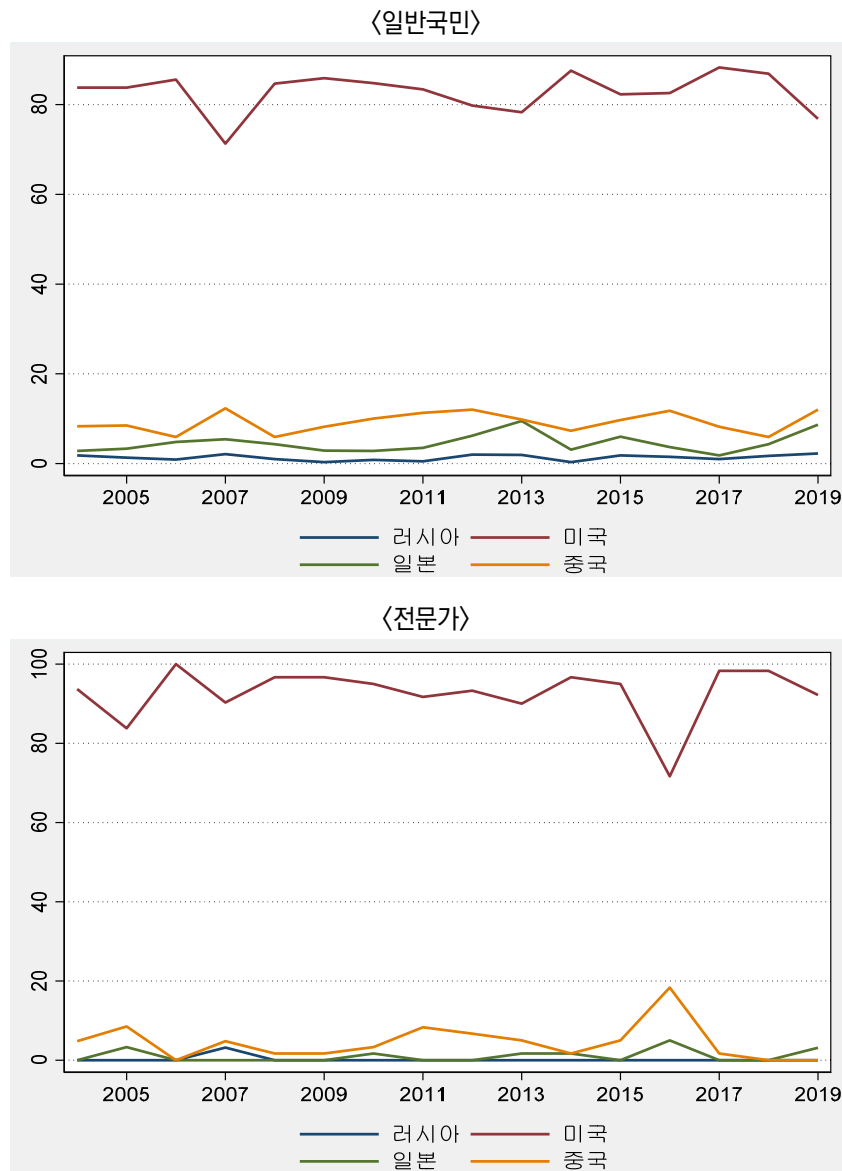
-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부정적인 인식(“불안정하다” 또는 “낮은 편이다”)이 우세하였으나, 2018년부터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일반인의 안보의식과 전문가의 안보의식을 비교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일반인은 “보통이다” 등의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가의 경우에는 “높은 편이다” 혹은 “낮은 편이다”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임.
- 둘째, 두 집단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편이나, 전문가의 응답에서 해당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셋째, 시기별로 응답의 변화는 전문가의 경우 더욱 명확히 나타남.
- 한편 시기별 응답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과거 전문가들은 일반인의 안보인식을 비교적 ‘낮은 편’ 이라고 응답했으나, 최근 5년 동안에는 ‘매우 높다’라는 의견이 증가했음.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진 최근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둘째,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하여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017년에는 매우 낮았으나, 2018년에 높아졌음.
 - 이러한 응답은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등이 반복되었던 2017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
 - 더불어 2018년에는 북미대화 및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등의 정치적 사건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2.2. 대주변국 의식(주변 4강)

2.2.1.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를 미국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4년 83.8%였으며 이후 70.0~90.0% 증감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2019년에는 76.8%로 2018년 86.9%, 2017년 88.3%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음.

- 둘째, 다음으로 일본이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은 10.0% 이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중국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10.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셋째, 러시아가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0.3~2.3% 범위에서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며, 응답자들 중 소수만이 러시아를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로 선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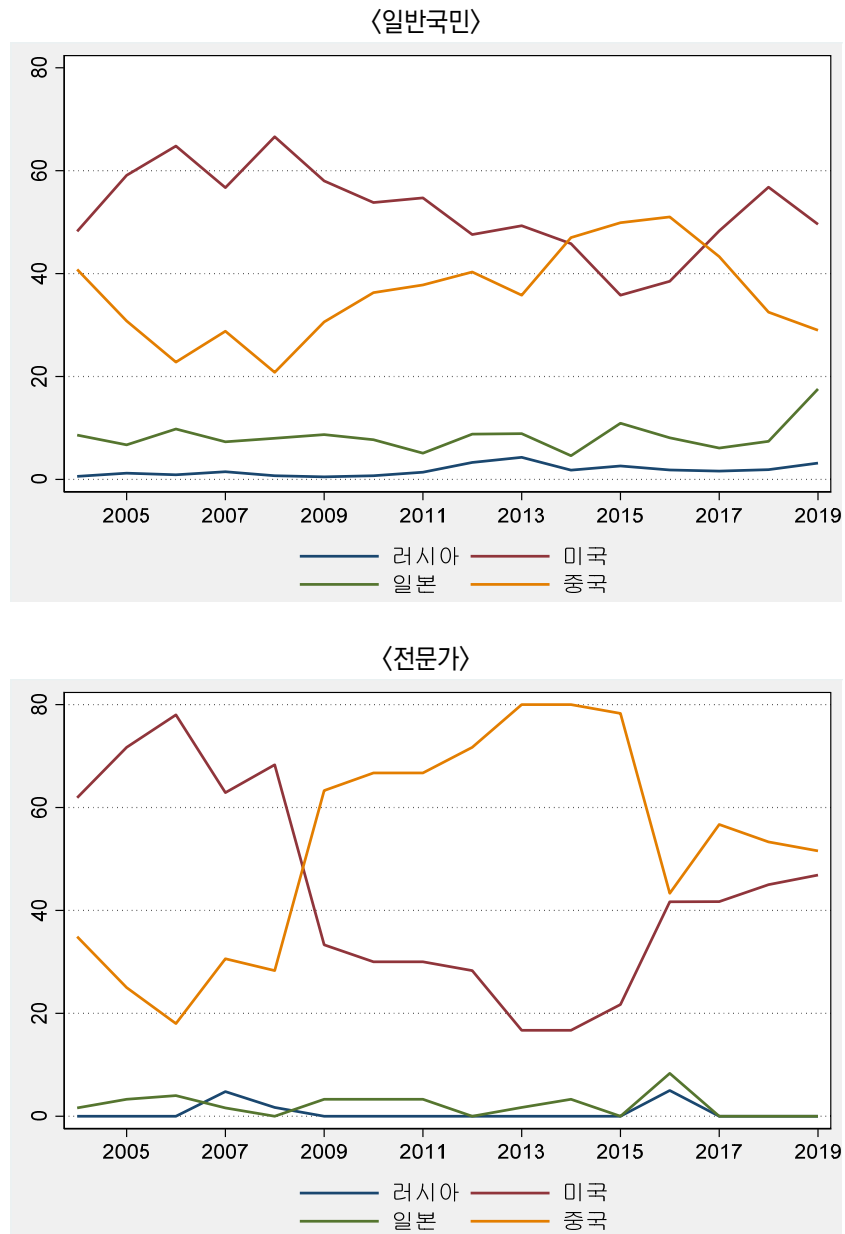


[그림 2-7]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단위: %)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한 결과, 전문가들은 극단적으로 미국을 중요한 나라로 응답하였음.
 - 특히 최근 3년간은 2017년 98.3%, 2018년 98.3%, 2019년 92.2%를 기록하였음.
 - 일반인도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를 미국으로 꼽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전문가는 더 높은 비중으로 미국을 선택하고 있음.
- 다만 2016년에는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를 미국이라고 대답하는 비중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중국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음.

2.2.2.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미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50.0% 이상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35.8%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이후 해당 비중은 약간 상승하여 2019년에는 49.6%를 기록하였음.
- 둘째, 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라고 응답한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 51.0%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7년부터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의식한 응답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29.0%를 기록하였음.
 - 2016년 사드(THAAD) 배치 논란과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와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일본이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라고 응답한 경우의 비중은 10.0% 이내 수준에서 유지되었음.
 - 다만, 2019년에 17.6%를 기록함으로써 2018년의 7.4%, 2017년의 6.1% 등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도 거의 유사한 패턴이 관찰됨.



[그림 2-8]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단위: %)

2.2.3.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의 태도

〈표 2-5〉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주변국의 태도: 미국 (단위: %)

〈일반국민〉

척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한 지원	92.9	84.6	90.1	-	89.1	74.0	87.1	91.0	88.8	88.9	84.5	86.4	86.6	92.5	90.5	87.3	88.6	93.9	87.8	92.0	93.6	91.0	78.6
중립	6.6	9.7	7.3	-	8.7	19.6	12.0	8.7	10.3	10.2	13.8	12.9	13.2	6.9	8.1	11.0	9.5	6.0	11.0	7.0	5.3	8.1	18.3
북한 지원	0.5	0.5	0.6	-	0.4	0.0	0.9	0.4	0.9	0.9	1.0	0.8	0.2	0.6	1.6	1.8	1.9	0.1	1.3	1.0	1.2	1.0	3.1

〈전문가〉

척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한 지원	98.0	-	-	-	95.2	86.0	0.0	96.8	98.3	98.0	96.8	96.7	98.3	98.4	100.0	100.0	98.3	98.4	100.0	86.7	100.0	100.0	100.0
중립	-	-	-	-	2.6	7.0	-	3.2	1.7	2.0	1.6	1.7	1.7	1.7	0.0	0.0	1.7	1.7	0.0	10.0	0.0	0.0	0.0
북한 지원	-	-	-	-	0.9	0.0	0.0	0.0	0.0	0.0	0.0	1.7	0.0	0.0	0.0	0.0	0.0	0.0	0.0	3.3	0.0	0.0	0.0

- 199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2000년을 제외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미국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전체적으로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이 남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는 응답 혹은 남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둘째, 미국이 남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응답의 비중은 1997년 61.4%였으나 2001년부터는 40.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해왔음. 다만 2002년과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미국이 남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전년도 1/2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예를 들어 2001년에는 해당 응답의 비중이 44.5%였으나 2002년에는 23.6%를, 20018년에는 42.0%였으나 2019년에는 28.5%를 기록하였음.
- 셋째, 남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은 1997년 31.5%였으나, 2000년대 들어 40%에서 50%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남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남한에 우호적 입장이라는 응답이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한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의식은 15.0% 내외 수준임. 다만 2019년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년도 보다 급증하여 18.3%를 기록하였음.
- 요컨대 전반적으로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이 남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의식보다는 좀 더 완화된 형태로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일반인 의식과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응답에 대하여 비중의 변화추이는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음.
- 다만, 전문가의 경우 남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2010년도에 응답의 비중은 86.7%를 기록하였음. 반면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항목의 응답 비중은 마찬가지로 가장 높으나, 그 값은 52.0%로 전문가의 응답 비중보다 크게 낮다.

2.2.4.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의 태도

〈표 2-6〉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주변국의 태도: 일본 (단위: %)

〈일반국민〉

책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한 지원	53.1	50.3	55.3	-	39.5	37.8	49.5	53.3	43.6	47.1	43.2	34.0	42.4	49.6	42.0	36.0	39.9	34.4	31.8	43.4	48.6	39.7	29.7
중립	42.7	39.1	37.5	-	53.3	46.4	47.4	43.8	53.2	49.3	51.8	55.9	54.8	46.6	50.8	55.0	52.1	57.8	57.4	51.0	47.8	52.8	49.9
북한 지원	4.2	4.0	4.0	-	3.2	1.6	3.1	2.9	3.3	3.7	3.5	10.0	2.8	4.0	7.3	9.0	8.1	7.9	10.8	5.6	3.7	7.6	20.4

〈전문가〉

책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한 지원	86.0	-	-	-	66.5	63.7	0.0	82.6	81.6	82.0	90.3	81.6	93.3	86.7	71.7	86.7	81.7	75.0	81.7	53.3	93.3	90.0	73.4
중립	10.0	-	-	-	30.4	29.0	-	17.5	18.3	18.0	6.5	16.7	6.7	13.3	28.3	6.7	18.3	25.0	18.3	43.3	6.7	10.0	26.6
북한 지원	0.0	-	-	-	0.8	1.0	0.0	0.0	0.0	0.0	1.6	1.7	0.0	0.0	0.0	6.7	0.0	0.0	0.0	3.3	0.0	0.0	0.0

- 199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2000년을 제외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전체 기간에 대하여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의 태도가 중립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남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둘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의 태도가 중립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50% 내외 수준에서 증감이 반복되었으며 2019년에는 49.9%를 기록하였음.
- 셋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의 태도가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30.0-40.0%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는데, 최근 3년간은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43.4%였으나 2019년에는 25.1%를 기록하였음.
- 넷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에는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의 태도가 남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의식보다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일 것이라는 의식이 같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하였음.
- 그 결과 일반인들의 의식과 달리 전문가들은 전체 기간에 대하여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의 태도가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남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응답과 중립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응답이 번갈아가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2.2.5.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의 태도

〈표 2-7〉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주변국의 태도: 중국 (단위: %)

〈일반국민〉

태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한 지원	12.4	12.4	12.4	-	8.3	11.8	10.8	10.7	16.8	10.0	11.3	6.3	10.1	4.8	3.6	4.7	9.7	11.3	18.2	7.1	4.2	6.5	11.4
중립	45.2	47.3	37.3	-	34.9	32.9	43.0	40.9	41.1	37.6	36.1	41.5	41.8	30.6	29.4	28.7	45.3	45.3	42.4	38.3	25.9	21.7	31.3
북한 지원	42.3	33.7	46.8	-	53.1	42.9	46.2	48.4	42.1	52.5	50.2	52.2	48.0	64.6	67.0	66.6	45.0	43.4	39.4	54.7	69.8	71.9	57.3

〈전문가〉

태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한 지원	0.0	-	-	-	2.6	9.7	0.0	3.2	0.0	0.0	0.0	3.3	1.7	1.7	1.7	5.0	1.7	3.3	11.7	15.0	3.3	0.0	4.7
중립	36.0	-	-	-	28.3	37.6	-	28.6	10.0	22.0	29.0	30.0	21.7	15.0	8.3	16.7	36.7	33.3	33.3	51.7	16.7	18.3	15.6
북한 지원	62.0	-	-	-	65.6	110.3	0.0	68.2	90.0	78.0	69.3	66.7	76.6	83.4	90.0	78.3	61.7	63.3	55.0	33.3	80.0	81.7	79.7

- 199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2000년을 제외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중국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전체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의 응답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것과 북한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응답이었음.
 - 이 중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4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나 최근 급격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21.7%를 기록하였음.
 - 반면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응답은 40.0% 내외를 반복하다가 2017년에는 58.3% 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43.3%를 기록하였음.
 - 둘째,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10% 내외의 수준에서 증감이 반복되고 있음.
 - 셋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10.0% 내외에서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며, 다만 2010년과 2018년에는 해당 응답의 비중이 각각 22.2%, 19.2%로 전년도와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준을 보였음.
-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하였음.
 - 그 결과, 첫째, 2016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에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둘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응답은 최근 3년간은 약 18.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오히려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이 30.0% 내외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2.2.6.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러시아의 태도

〈표 2-8〉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주변국의 태도: 러시아 (단위: %)

〈일반국민〉

태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한 지원	14.2	12.3	10.5	-	6.6	9.3	6.2	7.5	13.0	11.2	10.6	8.3	7.7	6.9	4.9	7.1	10.6	8.1	12.2	6.8	5.4	6.8	11.4
중립	48.9	49.5	32.8	-	33.0	36.8	40.9	44.5	51.5	44.5	43.4	49.8	51.1	40.8	42.8	44.6	54.0	49.3	43.0	38.8	40.0	37.3	31.3
북한 지원	36.9	31.7	52.6	-	51.4	35.6	52.9	48.0	35.6	44.2	44.1	41.8	41.2	52.4	52.4	48.3	35.4	42.8	44.9	54.4	54.6	55.9	57.3

〈전문가〉

태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한 지원	0.0	-	-	-	3.5	5.4	0.0	6.3	0.0	6.0	8.1	5.0	5.0	1.7	5.0	0.0	5.0	3.3	8.4	16.7	0.0	0.0	4.7
중립	20.0	-	-	-	33.9	36.9	-	47.6	50.0	54.0	48.4	48.3	38.3	45.0	51.7	68.3	60.0	53.3	48.3	40.0	41.7	28.3	31.3
북한 지원	76.0	-	-	-	55.2	44.6	0.0	46.0	50.0	40.0	41.9	46.7	56.7	53.3	43.4	31.7	35.0	43.4	43.3	43.3	58.4	71.7	64.1

- 199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2000년을 제외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러시아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2016년 이전까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러시아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2016년 이후에는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둘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러시아가 남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과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모두 10% 이하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2017년과 2018년에는 남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응답보다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러시아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하였음.
- 그 결과 2009년 직후 그리고 2016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기간에는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나머지 기간에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러시아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2.2.7.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표 2-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미국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긍정적 영향	82.2	74.9	83.4	77.1	80.1	76.6
별 영향 없음	13.0	19.3	11.5	17.2	13.9	17.0
부정적 영향	4.7	5.7	5.1	5.7	6.0	6.4

〈전문가〉

척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긍정적 영향	80.0	70.0	70.0	86.7	76.6	75.0
별 영향 없음	6.7	10.0	15.0	8.3	8.3	4.7
부정적 영향	13.4	20.0	15.0	5.0	15.0	20.3

-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모든 해에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해당 응답은 50.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은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었음. 다만 해당 응답의 비중은 2014년 27.3%에서 2019년 16.2%로 감소하였음.
- 셋째,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는 비중과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중의 합은 5.0% 내외 수준으로 미국의 군사력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하면, 거의 모든 응답에 대하여 비중의 변화 추이는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음.
- 다만 응답 비중의 크기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응답자들이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예를 들어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4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의 비중은 30% 내외 수준으로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욱 높게 나타남.

2.2.8.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표 2-10〉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본 (단위: %)

〈일반국민〉

척도	1989	1990	1992	1994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긍정적 영향	33.5	31.6	8.3	9.3	22.8	15.8	10.6	15.0	10.3	11.8	16.7	18.7	18.2	13.3	14.7	12.1	15.5	15.2	17.8	21.3	22.9
별 영향 없음	7.0	27.9	11.8	-	18.9	21.0	19.8	17.8	18.7	22.9	30.3	36.4	39.7	38.4	33.9	40.1	48.5	46.2	41.3	36.7	31.2
부정적 영향	59.3	40.5	79.0	78.9	53.8	60.1	66.8	65.6	67.4	60.8	53.0	44.8	41.9	48.3	51.5	47.8	36.0	38.7	40.9	42.1	45.9

〈전문가〉

척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긍정적 영향	-	6.3	5.0	0.0	1.6	3.3	3.4	3.4	5.0	8.3	5.0	10.0	11.7	26.7	30.0	18.4	15.6
별 영향 없음	-	7.9	5.0	-	21.0	8.3	10.0	8.3	20.0	8.3	6.7	10.0	10.0	26.7	15.0	13.3	14.1
부정적 영향	-	84.1	88.4	0.0	77.4	88.3	86.7	88.3	75.0	83.4	88.3	80.0	78.4	46.7	55.0	68.3	70.3

- 198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2010년 이전까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의 응답이었음.
 - 다만, 설문조사를 시작한 1989년과 1990년에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30.7%와 27%를 차지해 현재와 비교해 다수의 일반인들이 일본 군사력의 증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평화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일본 우익 정치인의 등장 이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음.
- 둘째, 2010년 이후에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다시 증가하였음.
- 셋째,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하면, 거의 모든 응답에 대하여 비중의 변화 추이는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음.

2.2.9.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표 2-1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긍정적 영향	16.9	11.7	11.0	12.6	9.1	10.2	14.0	8.4	10.5	7.6	12.7	13.6	16.1	10.7	5.6	8.3	12.6
별 영향 없음	16.5	20.8	21.1	18.9	20.4	24.2	27.5	24.2	24.2	28.5	38.3	33.2	37.2	32.1	27.8	20.5	32.3
부정적 영향	59.7	63.8	64.6	66.4	66.6	61.6	58.5	67.5	65.1	63.9	49.1	53.3	46.8	57.3	66.6	71.3	55.1

〈전문가〉

척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긍정적 영향	0.0	0.0	1.7	0.0	0.0	3.3	0.0	0.0	15.0	11.6	0.0	0.0	1.7	13.3	0.0	0.0	1.6
별 영향 없음	-	7.9	1.7	-	9.7	3.3	8.3	6.7	3.3	1.7	6.7	10.0	5.0	21.7	8.3	8.3	6.3
부정적 영향	0.0	92.0	95.0	0.0	90.4	93.4	91.6	93.3	81.6	86.6	93.3	90.0	93.4	65.0	91.7	91.6	92.2

-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모든 해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40-50% 수준을 유지하며 증감을 반복했으며, 2013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에 해당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둘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별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해당 응답이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다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별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5%를 기록하였음.
- 셋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의 비중은 10% 내외로 낮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해왔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하면, 거의 모든 응답에 대하여 비중의 변화 추이가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음.
- 다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0-60% 수준을 유지하며 증감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전문가가 민간이 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좀 더 부정적인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2.10.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표 2-1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긍정적 영향	12.8	9.3	13.6	17.3	13.0	16.2	12.6	20.9	11.0	11.1	9.5	9.0	7.0	13.8
별 영향 없음	31.4	28.7	34.8	36.2	34.1	38.6	38.8	44.2	51.6	44.9	49.5	47.7	34.4	40.4
부정적 영향	52.5	56.9	46.3	46.5	53.0	45.1	48.6	34.9	37.4	44.1	41.0	43.3	58.6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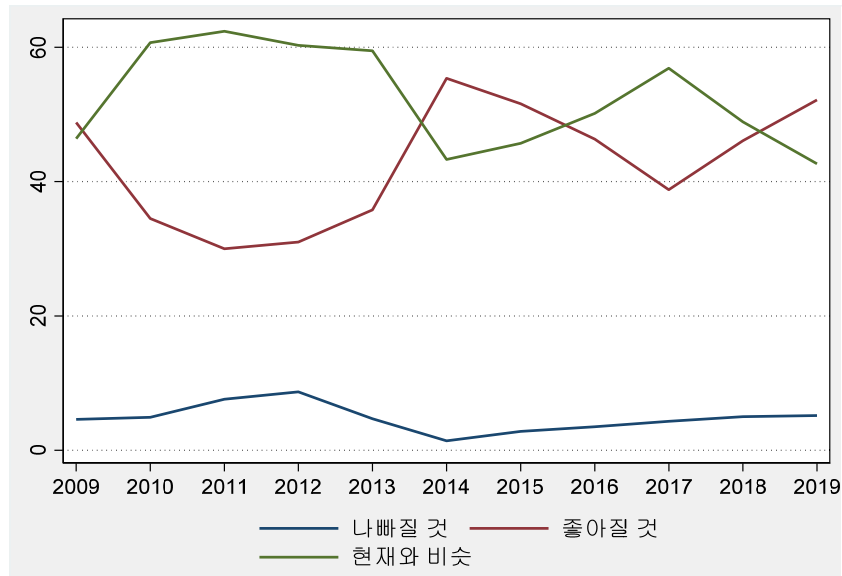
〈전문가〉

척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긍정적 영향	2.0	1.6	1.7	0.0	0.0	20.0	10.0	3.3	0.0	1.7	15.0	0.0	0.0	0.0
별 영향 없음	22.0	33.9	26.7	23.3	45.0	41.7	33.3	45.0	28.3	11.7	38.3	26.7	20.0	15.6
부정적 영향	76.0	64.5	71.6	76.7	55.0	38.3	56.7	51.7	71.7	86.7	46.7	73.3	80.0	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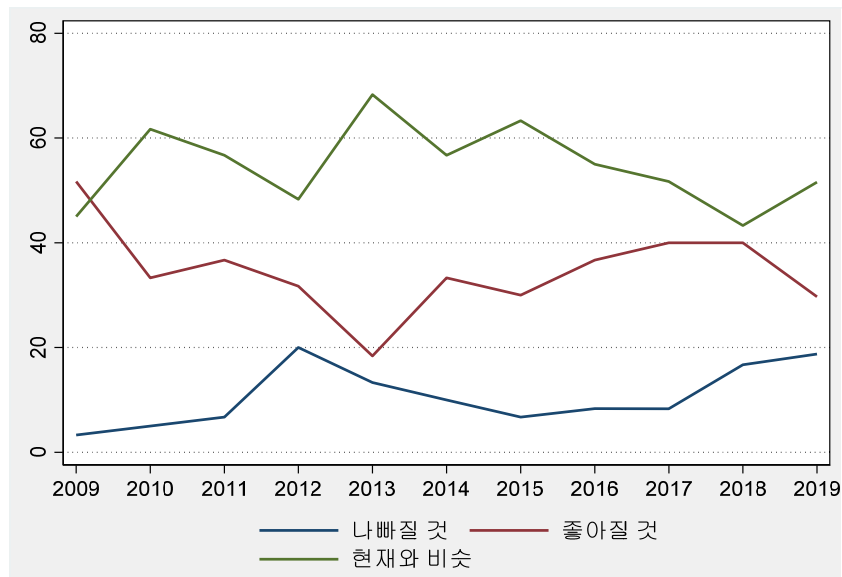
-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2013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일시적으로 2019년에는 해당 응답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음.
- 둘째,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하였음.
- 요컨대 최근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해 ‘별 영향 없음’에 대한 응답 비중의 감소는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증가하는 추세로 풀이할 수 있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증감을 반복해오다 최근 60.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둘째,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최소값 11.7%, 최대값 45.0%의 높은 증감폭을 가지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2.2.11. 미래(5년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전망

〈일반국민〉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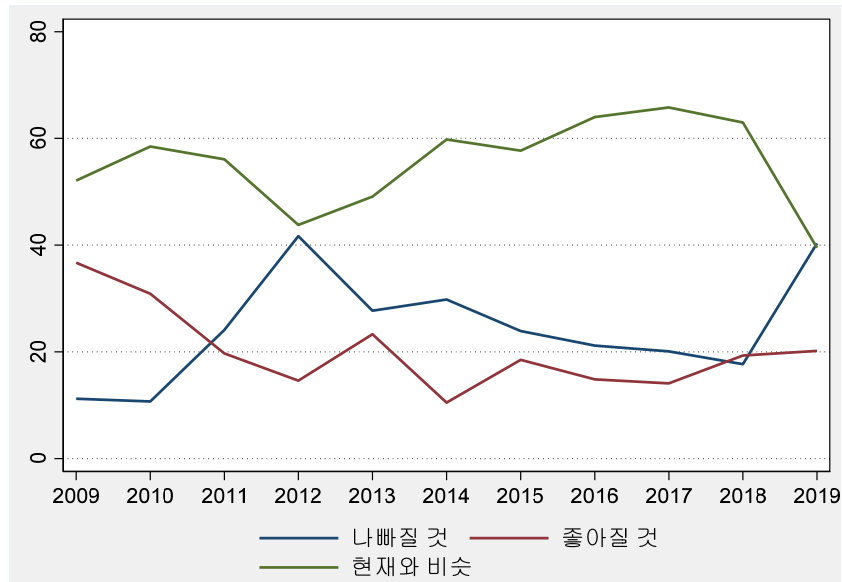


[그림 2-9]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미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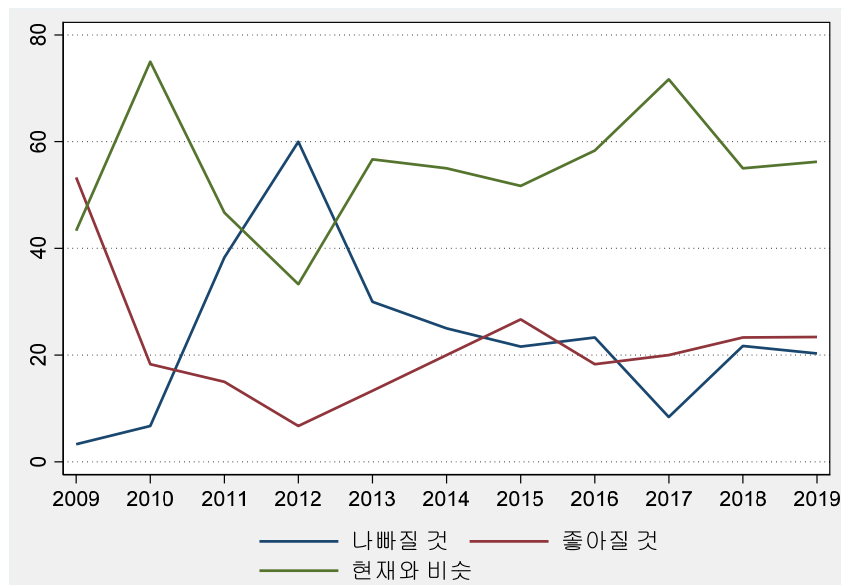
-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래(5년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모든 해에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0.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해왔음.
- 다만 2019년에는 미래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과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44.8%, 42.7%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 둘째, 대부분의 기간에 미래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 3년간 해당 응답의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셋째, 2014년 이후 미래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즉, 최근 응답은 대체적으로 미래의 미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의식하고 있으나, 동시에 5.0%이하의 낮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의식의 비중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래(5년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대부분의 해에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0.0% 부터 60.0%까지의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해왔음.
- 둘째, 미래에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었으나, 2019년에는 감소하여 각각 26.6%와 3.1%를 기록하였음.

2.2.12. 미래(5년 이후) 일본과의 관계 전망

〈일반국민〉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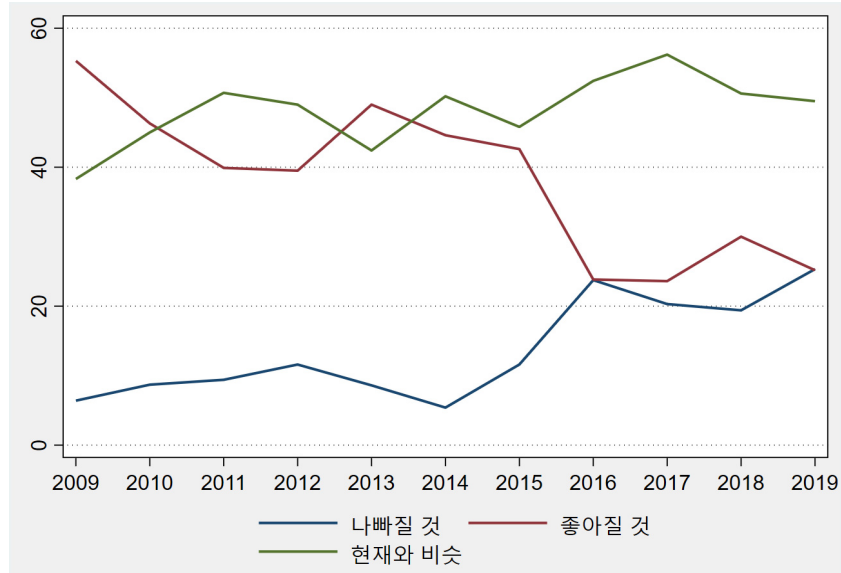


[그림 2-10]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일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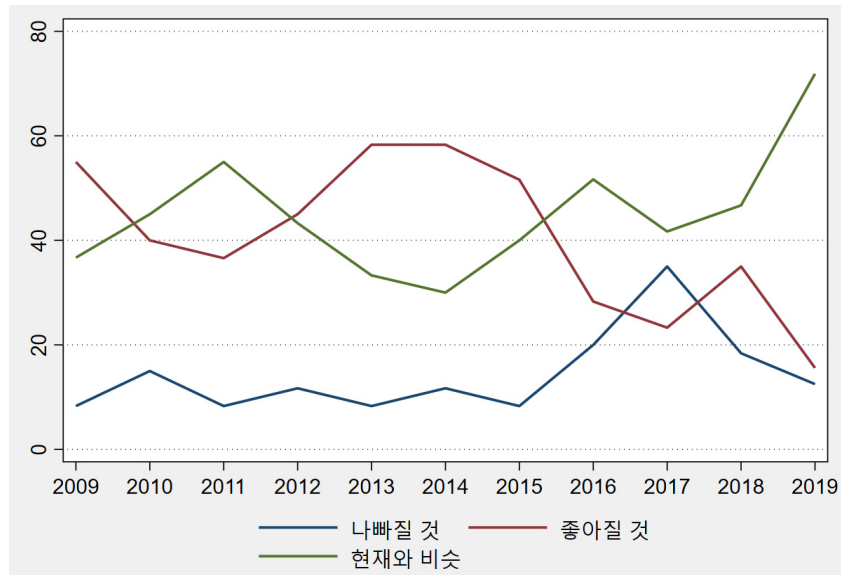
-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래(5년 이후) 일본과의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미래 일본과의 관계를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이 모든 기간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둘째, 미래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을 2012년 34.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16.1%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32.4%를 기록하였음.
- 셋째, 미래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해당 응답의 비중은 2009년 35.6%에서 2019년 18.0%로 감소하였음.
- 넷째, 미래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감소해왔나 2017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음.
 - 해당 응답의 비중은 2017년 0.3%였으나, 2019년 7.9%로 26배 이상 증대하였음.
 - 이상의 변화는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한민국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 등 한·일 간의 외교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래(5년 이후) 일본과의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먼저 2012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에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해왔음.
- 둘째, 미래에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2012년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의 경우, 해당 응답 비중의 감소 추세와 대비됨.
 - 한·일 간 외교 갈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전문가는 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전망하는 것으로 보임.

2.2.13. 미래(5년 이후) 중국과의 관계 전망

〈일반국민〉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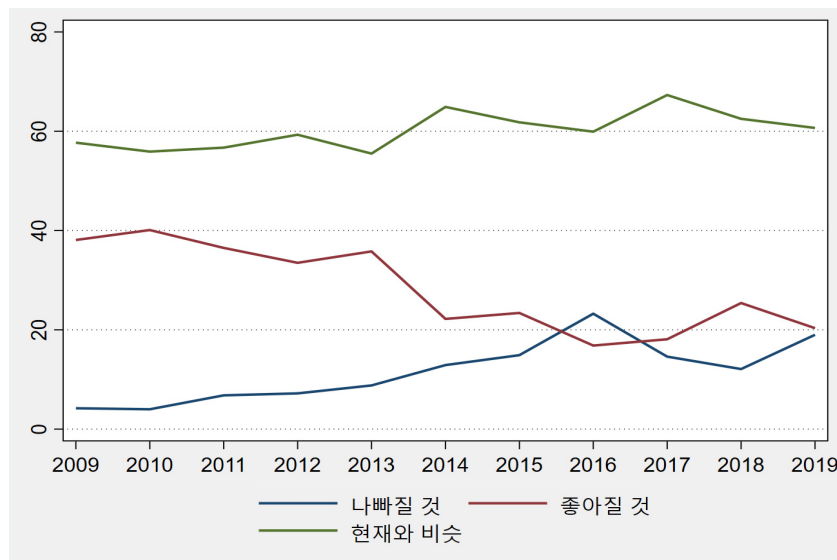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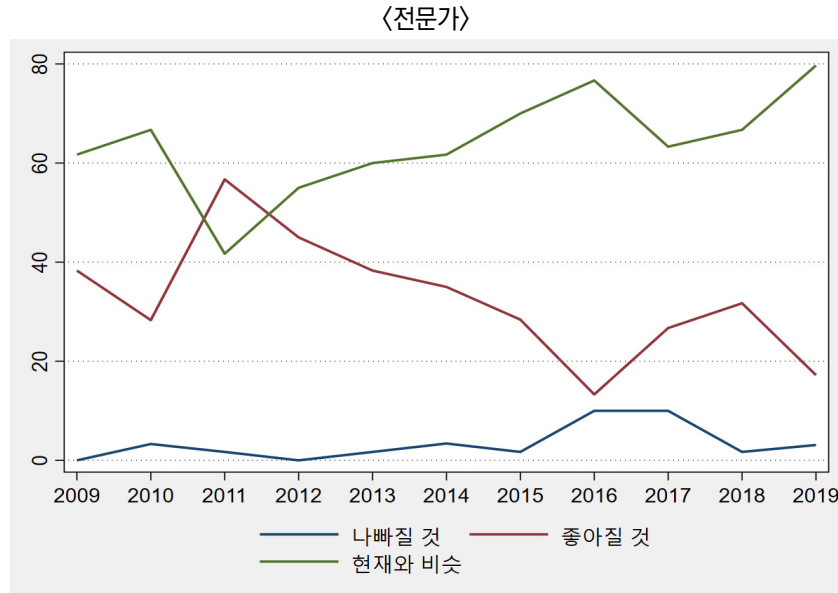
[그림 2-11]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중국 (단위: %)

-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래(5년 이후) 중국과의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미래 중국과의 관계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16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더불어 해당 응답은 대부분의 해에 50% 내외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임.
- 둘째, 미래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의 비중은 201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해당 응답의 비중은 대부분의 해에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셋째, 미래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이후 약간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
- 2014년도에 미래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4.7%였으나, 2019년에는 해당 응답의 비중이 22.7%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래(5년 이후) 중국과의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하면 응답의 비중 변화가 거의 일치함.

2.2.14. 미래(5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전망

〈일반국민〉





[그림 2-12]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러시아 (단위: %)

-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래(5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를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해당 응답의 비중은 최소 55.5%에서 최고 67.3%를 기록하였음.
- 둘째,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0년에는 38.8%였으나 2016년에는 15.3%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2016년 이후 약간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해당 응답의 비중은 약 19.3%를 기록하였음.
- 셋째,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를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6년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2019년은 전년대비 일시적인 증가 추이가 관찰됨. 2016년에 유일하게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래(5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일반인 의식 조사와 비교하면 응답의

비중 변화가 거의 일치함.

- 다만 비중의 크기가 다름. 예를 들어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를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일반인 대상 조사와 같은 결과이지만, 해당 응답의 비중은 최소 41.7%에서 최고 79.7%로 일반인의 경우보다 증감 폭이 큼.

2.2.15.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표 2-13〉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한미 양자동맹 강화	18.3	-	17.2	19.3	23.4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23.1	-	27.6	28.8	35.8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	28.4	-	25.8	24.3	20.5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19.5	-	18.4	19.3	14.4
한중 양자협력 강화	10.8	-	11.1	8.4	5.8

〈전문가〉

척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한미 양자동맹 강화	16.7	-	21.7	8.3	23.4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6.7	-	23.3	26.7	25.0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	6.7	-	5.0	1.7	1.6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56.7	-	36.7	61.7	45.3
한중 양자협력 강화	13.3	-	13.3	1.7	4.7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한미일 삼자협력으로 선택한 응답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비중은 각각 2017년 27.6%, 2018년 28.8%, 2019년 35.8%를 기록하였음.
- 둘째,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으로서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는 2017년과 2018년에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이었음.
- 해당 응답의 비중은 2017년에는 25.8%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20.5%를 기록,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 셋째,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 양자동맹을 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17년에는 17.2%를 차지했었으나 2019년에는 23.4%를 기록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일반인 응답 결과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로 답한 비중이 매년 가장 높으며, 그 비중은 각각 36.7%, 61.7%, 45.3%로 나타남.
- 둘째,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으로서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이었음.

2.2.16. 한일 양국 간의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표 2-14〉 한일 양국간의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확대해야 한다	6.2	-	10.6	13.1	7.3
유지해야 한다	53.5	-	64.4	64.8	56.5
줄여야 한다	28.5	-	18.5	14.6	25.4
없애야 한다	6.8	-	3.1	3.2	7.2
잘 모르겠다	5.1	-	3.4	4.4	3.7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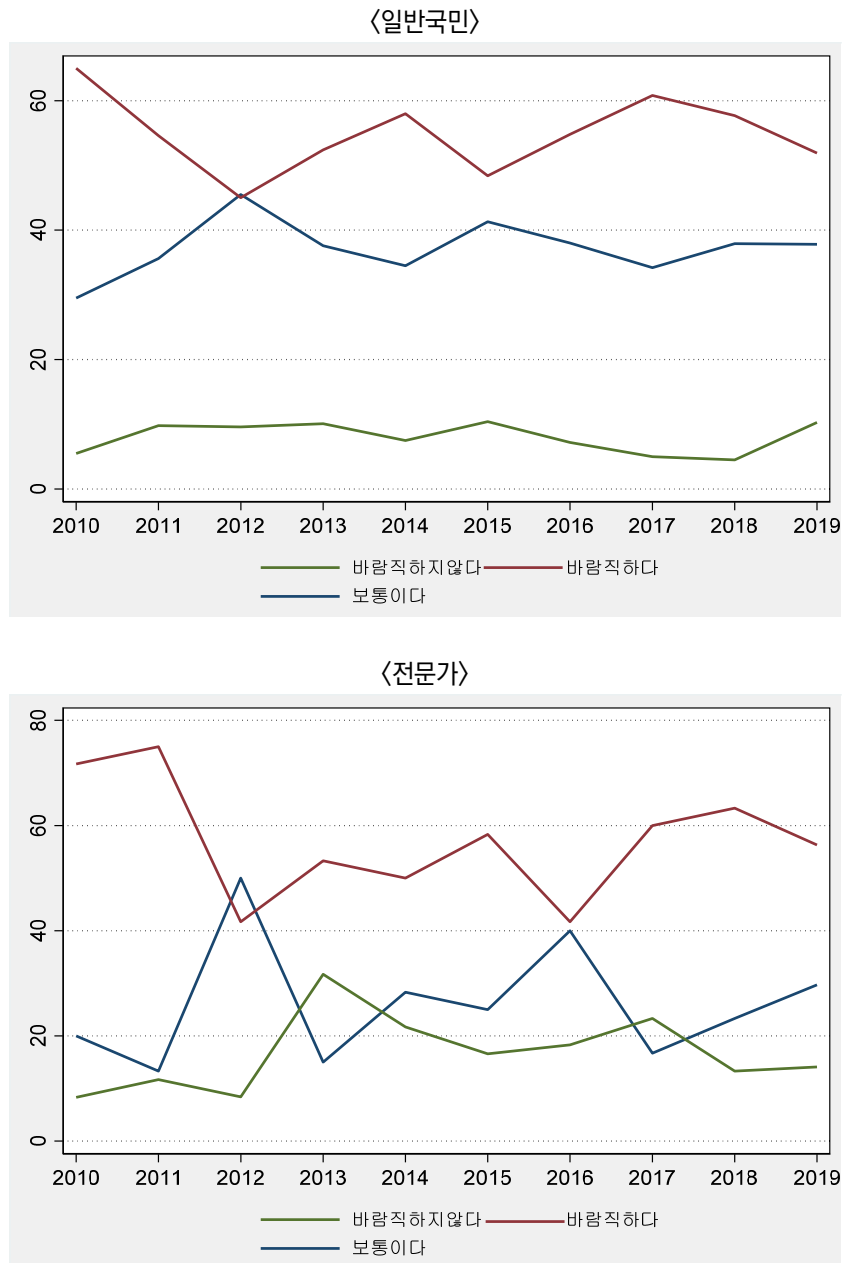
척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확대해야 한다	20.0	-	41.7	31.7	31.3
유지해야 한다	61.7	-	41.7	60.0	50.0
줄여야 한다	15.0	-	13.3	1.7	7.8
없애야 한다	3.3	-	3.3	3.3	3.1
잘 모르겠다	0.0	-	0.0	3.3	7.8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한일 양국 간의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모든 해에 한일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둘째, 한일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하여 2019년에 7.3%를 기록하였으나, 반면 한일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크게 증가하여 2019년에 25.4%를 기록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한일 양국 간의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일반인 의식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 다만, 한일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도 31.3%를 기록하였음.

2.2.17.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한미일 군사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약간의 감소 추이가 관찰됨.
- 둘째, 한미일 군사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0.0% 내외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대체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판결 이후 발생한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 등 한·일 간의 외교 갈등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여전히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한·일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 필요성은 인정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안보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 예를 들어 첫째, 한미일 군사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0.0% 내외에서 증감이 반복되어왔으며, 2012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둘째, 한미일 군사협력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12년 이후 증가추이가 관찰되며, 2019년에는 18.8%를 기록하였음.



[그림 2-13]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 (단위: %)

2.2.18. 소결

- 대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는 전 시기에 걸쳐 미국을 안보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
- 2009년부터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로 중국을 선택하는 국민과 전문가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논란과 중국의 경제 보복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주변국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인보다 전문가의 의식에서 우호의 정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둘째,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률의 시기별 변화는 일반인의 응답률 변화보다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일반인과 비교해) 외교적 갈등이 군사적 협력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함.
- 시기별 응답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남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남한에 우호적 입장이라는 응답이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201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다가 2017년부터 북한과 미국 두 국가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등의 환경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둘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의 태도가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최근 3년간은 급격히 감소하였음. 한국과 일본 간 외교관계 악화가 미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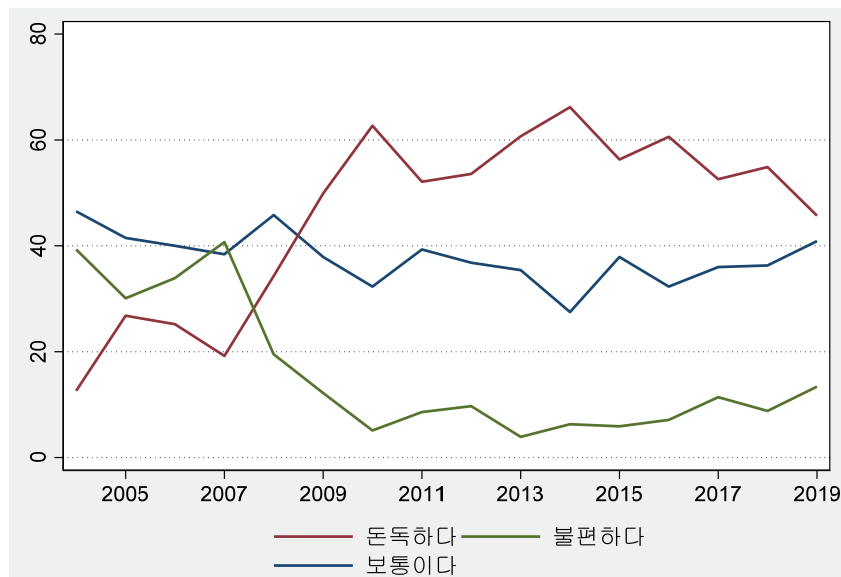
2.3. 한미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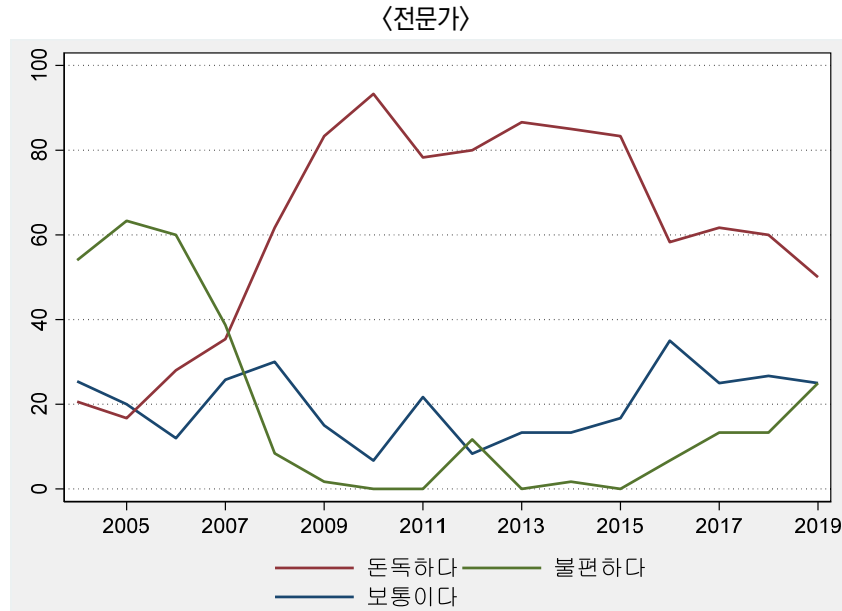
2.3.1. 한미동맹 관계

-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일반인의 의식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음.
- 조사가 시작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미동맹이 불편하다(“불편하다” 또는 “매우

- 불편하다”)는 인식이 돈독하다(“돈독한 편이다” 또는 “매우 돈독하다”)는 인식을 앞질렀음.
-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2003년 2월~2008년 2월) 양국 “정책 엘리트의 상이한 정책 선호와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신과 갈등이 일반인의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손병권, 김민아 2016: 263).
 - 2009년부터는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2008년에는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5.8%로 가장 많았으나, 이듬해인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돈독한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연평균 49.4%로 가장 많았음.
 - 나아가 2008년 이후 한미동맹 관계가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내로 그쳤음.
 - 2008년에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5%였으나 이후 2019년까지 동일한 답을 한 응답자는 연평균 0.5%에 그쳤음.
 - 전반적으로 일반인은 해가 갈수록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하다고 평가한 반면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음.
 - 추세를 보면 ‘돈독한 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2004년 12.1%에 그쳤으나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부터는 매년 4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2018년까지 이어졌음.
 - 반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3년 당시 33%를 기록했으나 이후 주기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10%가 안 되는 수준이었음.

〈일반국민〉





[그림 2-14] 한미동맹 관계 (단위: %)

-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전문가 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전문가 역시 일반인과 비슷하게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2004년부터 2019년까지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연평균 비율은 51%로 보통(20%)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음.
- ‘매우 돈독’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0.4%로 ‘매우 불편하다’(4.2%)의 두 배를 상회하는 비율이었음.
- 추세를 보면 2007년까지 4년간 ‘불편하다’는 답변이 30%를 상회한 반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동일한 대답이 연평균 6%에 그쳤음.
- 나아가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는 ‘불편하다’는 답변이 0%를 기록하였음. 반면 2009년, 2010년, 2014년, 2015년에는 ‘돈독한 편이다’라는 답변의 비율이 70%를 웃돌았음.
- 다만 2016년부터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하다’는 응답이 다소 줄어든 반면 ‘불편하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음.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이와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2.3.2.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표 2-15〉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한 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9.8	25.8	4.2	4.7	4.6	7.0	21.2	21.4	20.1	25.5	17.5	31.2	22.5	21.9	22.8	18.5
주한 미군의 범죄 문제	36.9	-	13.0	11.0	9.4	14.0	41.2	43.6	49.8	45.8	45.8	45.5	37.3	34.3	27.2	21.0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12.9	6.9	7.1	5.7	8.3	9.7	19.5	26.7	23.8	25.0	24.0	24.4	23.7	23.1	22.8	22.2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	-	-	-	-	25.6	39.5	38.0	33.8	30.2	29.0	31.3	31.5	35.8	36.8	42.2
한국내 반미감정/미국내 반한감정	-	41.7	42.4	28.3	25.5	27.7	40.3	32.9	32.3	29.8	34.2	31.5	28.0	27.3	31.7	31.2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	4.8	5.3	4.1	2.9	6.9	16.7	14.3	12.7	14.1	13.7	10.4	12.8	10.8	12.3	19.9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	-	-	-	-	8.6	19.8	21.5	15.2	19.8	21.8	14.8	28.8	32.8	27.4	30.2
한미간 군사 정책에 대한 이견	-	-	-	-	-	-	-	-	11.2	9.6	13.8	10.9	15.0	12.8	18.0	14.7
기타	2.0	1.7	2.4	-	-	-	0.8	0.6	0.6	0.1	0.2	0.0	0.2	0.8	0.6	0.3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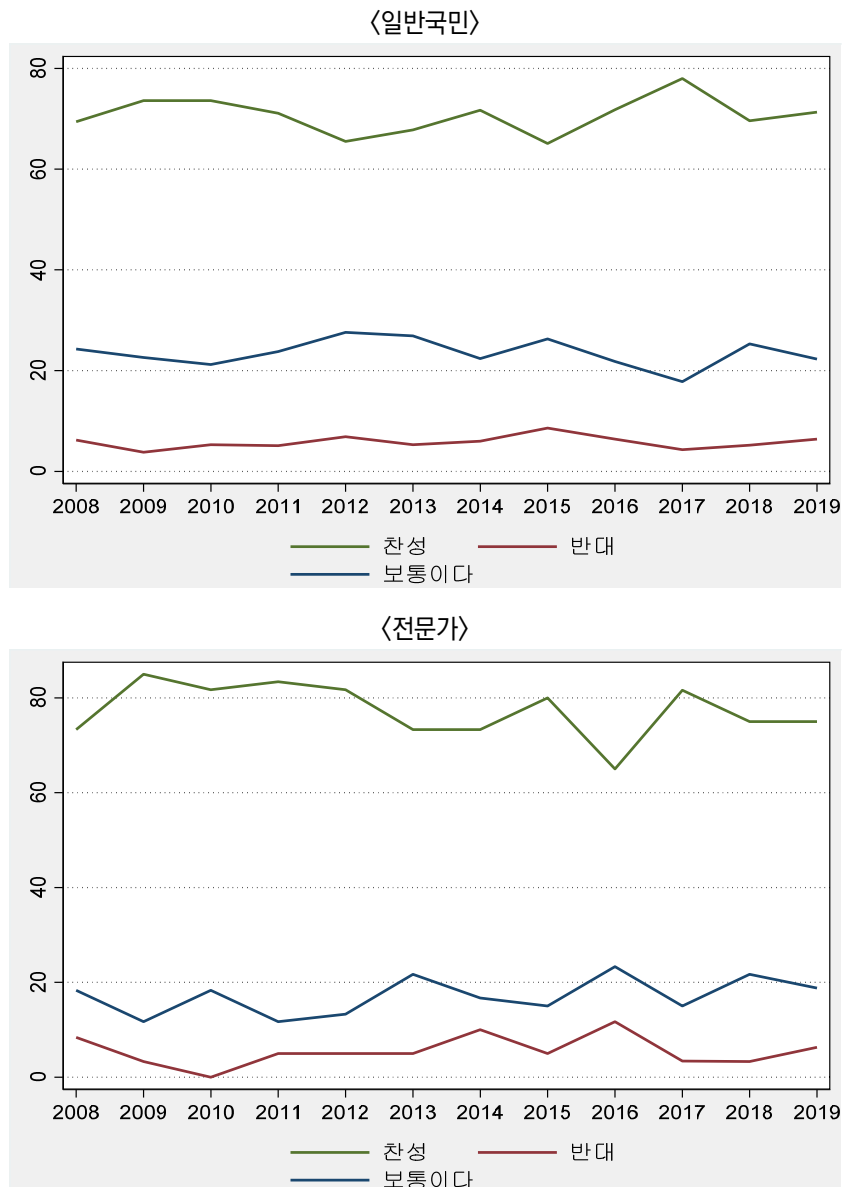
척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한 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0.0	5.0	2.0	1.6	5.0	1.7	13.3	23.3	16.7	3.3	10.0	3.3	21.7	1.7	0.0	3.1
주한 미군의 범죄 문제	6.3	-	2.0	1.6	8.3	5.0	13.3	26.7	16.7	26.7	21.7	25.0	31.7	1.7	3.3	6.3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11.1	1.7	0.0	4.8	10.0	0.0	5.0	3.3	5.0	8.3	0.0	3.3	21.7	5.0	6.7	0.0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	-	-	-	-	13.3	26.7	31.7	33.3	15.0	20.0	16.7	28.3	35.0	36.7	17.2
한국내 반미감정 / 미국내 반한감정	-	71.7	64.0	64.5	61.7	55.0	68.3	58.3	40.0	40.0	35.0	58.3	26.7	48.3	46.7	45.3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	5.0	8.0	6.5	1.7	11.7	15.0	15.0	11.7	8.3	11.7	8.3	10.0	28.3	35.0	23.4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	-	-	-	-	10.0	56.7	41.7	36.7	40.0	46.7	26.7	26.7	18.3	20.0	59.4
한미간 군사 정책에 대한 이견	-	-	-	-	-	-	-	-	40.0	40.0	46.7	36.7	25.0	43.3	46.7	40.6
기타	23.8	8.3	16.0	-	-	-	1.7	0.0	0.0	13.3	3.3	8.3	3.3	11.7	5.0	4.7

-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보기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23개에 다다르고 일반인과 같은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일괄적으로 9개의 보기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해당 보기에 대한 응답 역시 연도별 합이 100%가 되지 않으므로 본 질문에 대해서는 보기 간의 교차비교보다 연도별 추세에 대한 분석만이 가능함.
- 먼저 일반인이 평가하는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서 ‘주한 미군의 범죄 문제’,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한·미간 경제 분야 이해갈등’은 지속적으로 20%를 웃돌았음.
- 특히 ‘한·미간 경제 분야 이해갈등’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4년을 제외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30%를 웃돌았음.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살펴보면 30% 이상의 일반인이 ‘한·미간 경제 분야 이해갈등’이 저해 요인이라고 평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전문가들이 ‘한국 내 반미감정/미국 내 반한 감정’이 저해 요인이라고 지목한

비율은 40%에 육박했음.

-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와 ‘한·미간 군사 정책’에 대한 이견도 한미동맹관계 발전 전해 요인으로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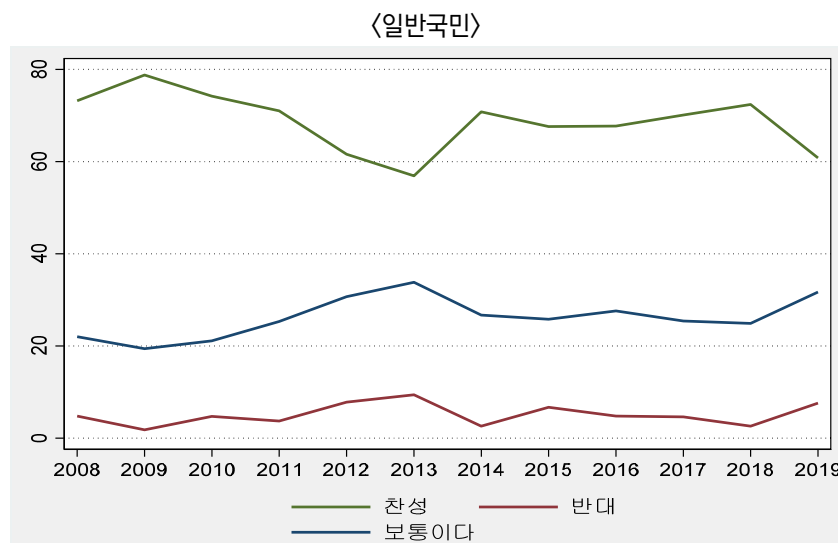
2.3.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군사동맹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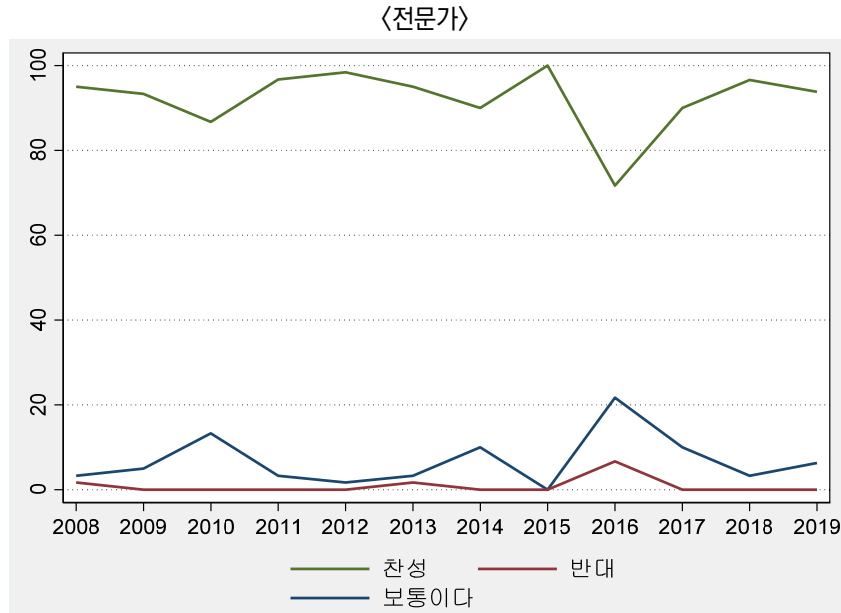


[그림 2-15]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군사동맹 강화 (단위: %)

-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된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중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 연평균 52%의 일반인은 군사동맹 강화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 같은 기간의 연평균 수치를 보면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하는 응답률은 각각 5.4%와 0.4%에 그쳤음.
- 연도별 추이를 보면 ‘찬성’한다는 입장은 2012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모두 50%를 웃돌았음.
-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2019년을 빼고 모두 15% 이상을 기록하여 찬성하는 편과 합산한다면 연평균 70%를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음.
- 같은 기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중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찬성’과 ‘매우 찬성’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 전문가들이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 ‘매우 찬성’을 하는 비율은 연평균 38.3%로 같은 기간 연평균 18.7%를 기록한 일반인들 수준의 두 배로 나타났음.
- ‘보통’이라고 응답한 일반인들의 평균이 23.5% 달하는 반면 17.1%의 전문가들만이 ‘보통’이라는 의견을 게재했음.
-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매우 찬성’한다는 답변은 12년 간 조사에서 약간의 부침현상이 있었으나 2016년을 제외하고는 30%는 크게 웃도는 수준을 보였고 특히 2012년에는 55%에 달하는 응답자가 ‘매우 찬성’한다는 답변을 하였음.

2.3.4.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경제 분야 협력 강화





[그림 2-16]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경제 분야 협력 강화 (단위: %)

- 한미동맹의 경제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먼저 ‘찬성’하거나 ‘매우 찬성’한다는 답변이 전년에 거쳐 압도적으로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많이 나왔음.
- 평균치를 살펴보면 동 기간에 한국과 미국의 경제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 20.4%가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절반에 육박하는 48.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음.
- 반면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한다는 비율의 합은 연 평균 약 5%에 불과했음.
- 동기간 경제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전문가 의식은 일반인 의식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냄.
-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보통’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연평균 6.8%에 그친다는 것임. 동일한 응답을 한 일반인의 비율이 20%에서 30%를 오르락내리락한 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매우 찬성’을 하거나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평균 45.6%의 응답자가 ‘매우 찬성’을 한다고 답했고, 46.7%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음.
- 즉 90%를 웃도는 전문가가 한국과 미국의 경제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 ‘찬성’했다는

것임. 주목할 만 한 점은 2015년과 같은 경우 응답자 모두가 경제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 ‘찬성’하거나 ‘매우 찬성’했다는 것임.

2.3.5.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표 2-16〉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	61.5	69.7	64.7	64.3	57.3	58.8	63.0	57.3	61.3	66.1	64.0	56.1
보통이다	34.9	27.9	31.4	31.4	32.5	32.3	33.2	36.3	31.9	28.1	31.3	35.9
반대	3.5	2.4	3.9	4.2	10.2	8.8	3.9	6.5	6.8	5.7	4.8	8.0

〈전문가〉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	85.0	86.6	73.3	71.6	95.0	78.4	81.6	86.6	56.7	83.4	85.0	82.8
보통이다	13.3	11.7	26.7	26.7	5.0	21.7	18.3	13.3	35.0	13.3	15.0	17.2
반대	1.7	0.0	0.0	1.7	0.0	0.0	0.0	0.0	8.3	3.3	0.0	0.0

-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중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찬성’을 한다는 의견이 매년 가장 높았음.
-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에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연평균 46.4%에 달했음. 다만 ‘보통’이라고 생각한 응답도 연평균 30%를 웃도는 수치였음.
- 이에 반해 ‘반대’를 하거나 ‘매우 반대’한다는 비율은 6%에 미치지 못함. 주목할 만한 연도별 추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동일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음.
- 우선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에 대해 ‘찬성’을 하거나 ‘매우 찬성’을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음.
- 연평균을 보면 ‘찬성’을 하거나 ‘매우 찬성’ 한다는 응답율의 합이 79.5%였던 반면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율의 합은 1.3%에 불과했음.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답변도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낮은 18.1%에 그쳤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응답에 대한 큰 부침이 없었음.

2.3.6.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

〈표 2-17〉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	71.4	72.1	73.0	73.4	64.7	66.4	70.5	64.8	67.8	74.3	69.4	58.2
보통이다	25.1	25.0	23.5	23.6	28.3	26.5	26.3	28.2	25.5	20.2	26.0	34.1
반대	3.5	2.9	3.5	3.0	7.0	7.1	3.2	7.0	6.8	5.6	4.6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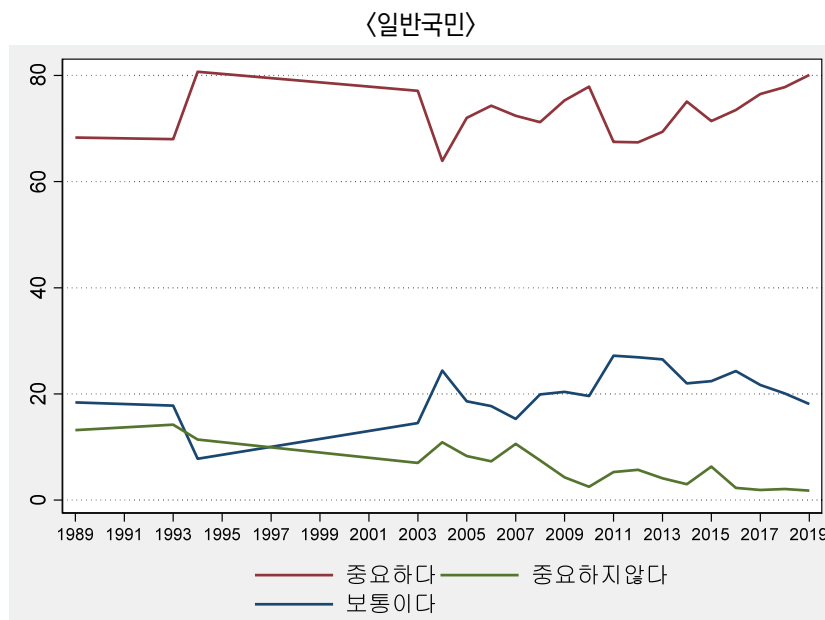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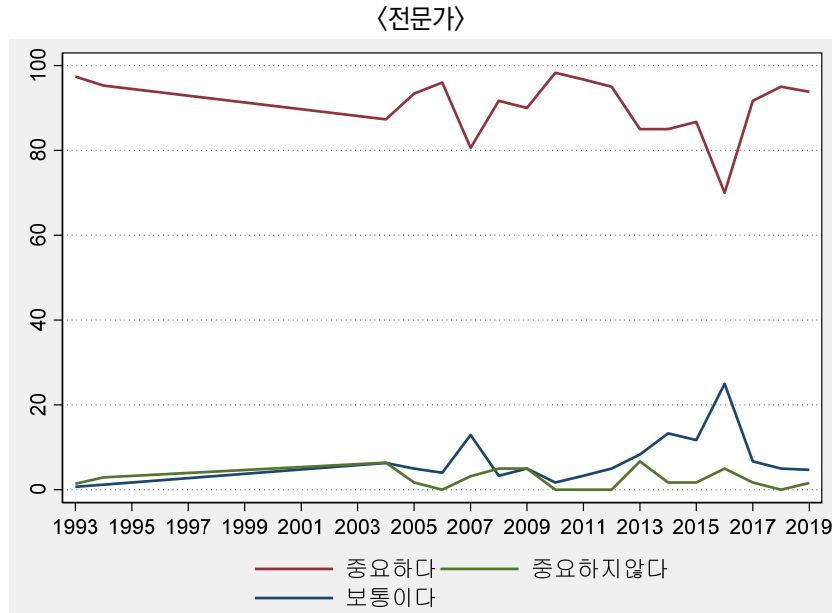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	81.6	88.3	91.7	88.4	96.6	78.3	83.4	88.3	75.0	85.0	90.0	85.9
보통이다	13.3	8.3	8.3	10.0	3.3	21.7	15.0	10.0	23.3	15.0	8.3	14.1
반대	5.0	1.7	0.0	1.7	0.0	0.0	1.7	1.7	1.7	0.0	1.7	0.0

-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중 세계 문제를 함께 대처한다는 문항에 대한 일반인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찬성’을 한다는 의견이 연평균 47.9%를 나타냈고,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 또한 연평균 20.9%를 나타냈음.
- ‘보통’이라고 응답한 일반인은 26% 그리고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률을 5.2%에 불과했음.
- 즉 ‘찬성’을 한다는 비율이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의 연평균 9배 이상으로 나타났음.
- 동일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찬성’을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음.
- 연평균 응답자의 80% 이상은 이에 대해 ‘찬성’을 하거나 ‘매우 찬성’을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1%를 조금 웃도는 수치였음.
-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매우 찬성’을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매년 20% 이상을 유지하고 2015년도에 들어 48.3%를 찍었으나, 이듬해 16.7%로 떨어졌고 다시 2017년도에 46.7%로 급상승했다는 것임.

2.3.7.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타 문항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음.
- 1989년부터 설문이 시작되어 1993년과 1994년 그리고 2003년부터 매해 조사되었음.
-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1989년부터 꾸준히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한편’이라고 판단한 일반인 응답자가 기록된 자료의 연평균 50% 이상을 기록하였음.
- 보기별 연평균 추이를 봤을 때 큰 부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요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식을 살펴보면 1993년 첫 조사가 시작된 해 97.4% 가량의 응답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한 편’이라고 응답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동일한 수준의 비율로 나타났음.
- 한국 안보에 대한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일반인들 보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음.
-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매년 유지하다가 2016년에 들어 ‘매우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응답 비율이 2016년에 20%로 급감했고 반면 같은 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25%를 기록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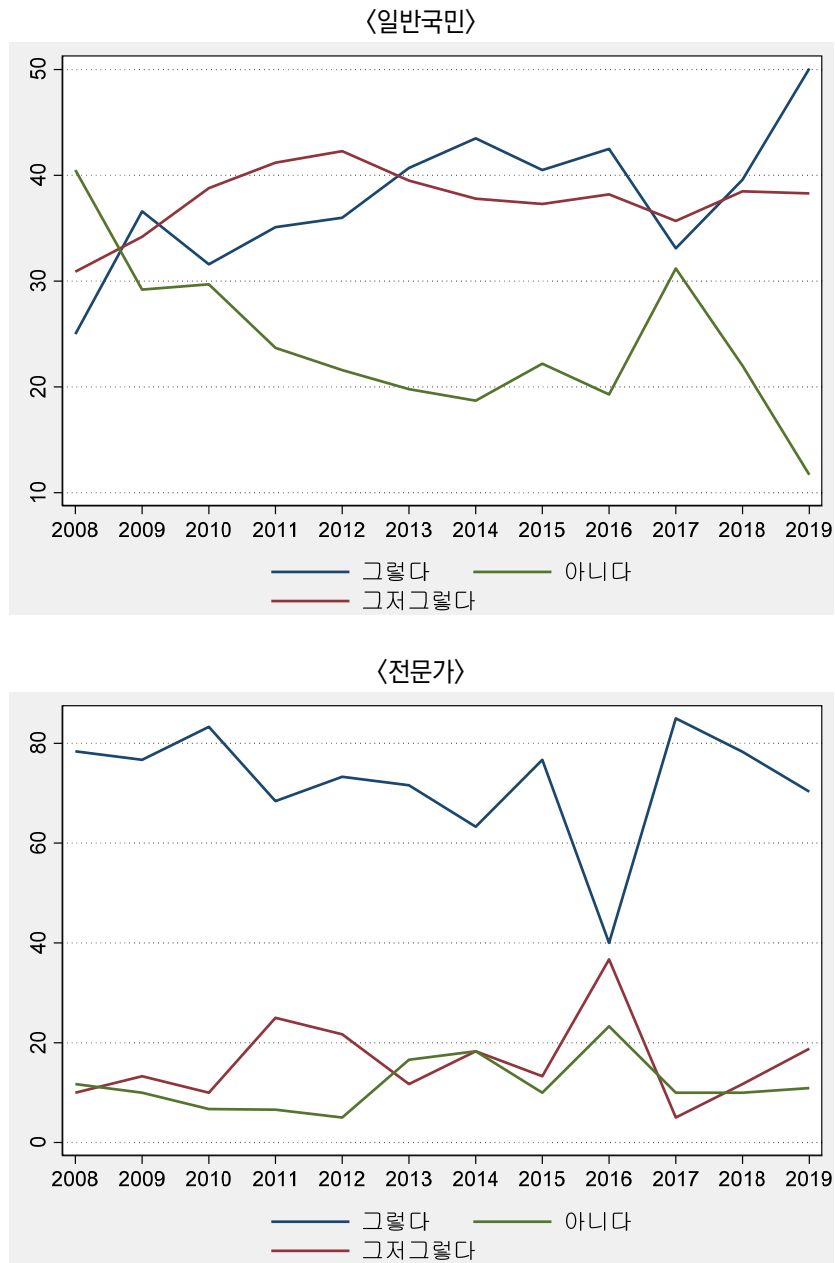




[그림 2-17]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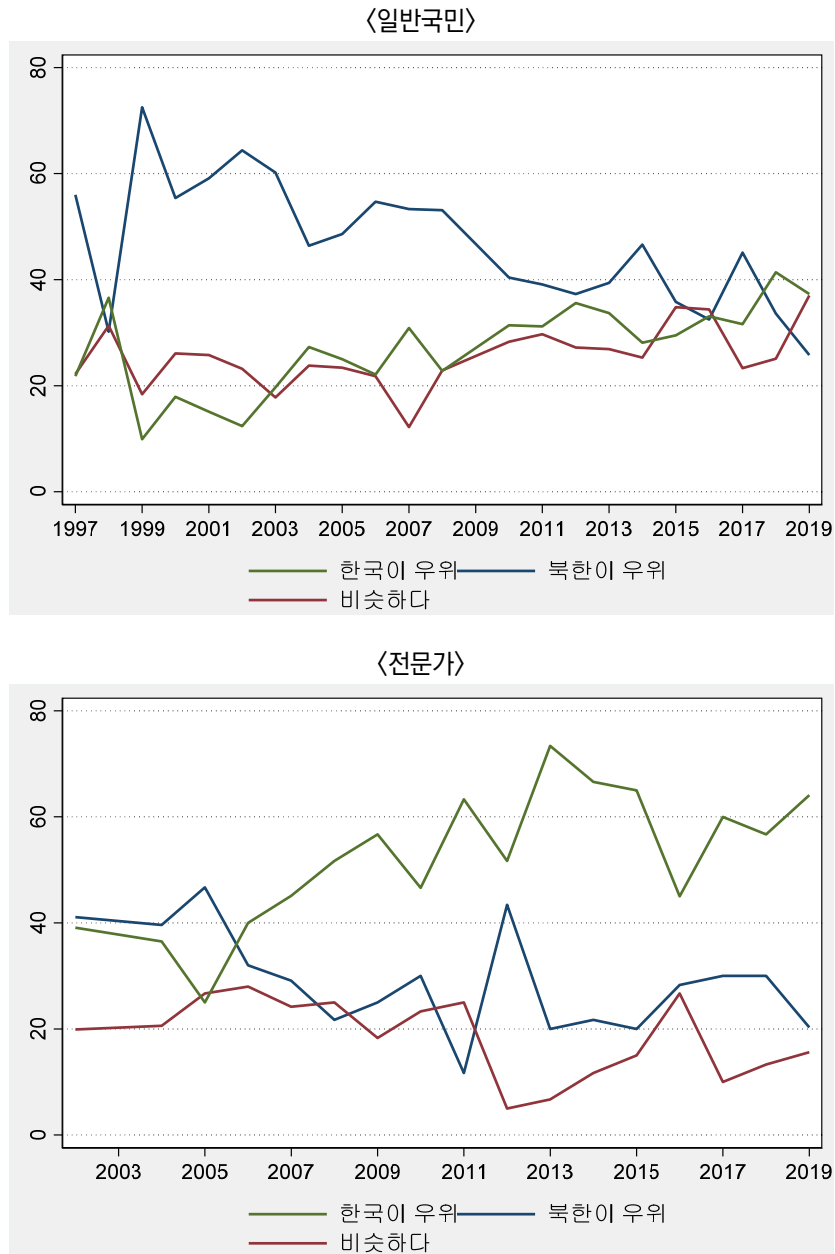
2.3.8.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에 대한 척도는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아니다’까지 다섯 개로 나뉘며 조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임.
- 먼저 일반인의 의식을 살펴보면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연평균 37.7%로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32.5%보다 약간 높았음.
- 나아가 ‘아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3%에 달했다. 반면 ‘매우 그렇다’ 또는 ‘전혀 아니다’고 응답의 연평균 비율은 각각 5.4%와 3.8%에 그쳤음.
- 반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비용이 절약된다고 평가한 비율이 연평균 72.1%에 달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훨씬 높았음. 이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임.
- 나아가 ‘그저 그렇다’고 판단한 일반인이 37.7%에 달한 반면 전문가 중 연평균 16.3%만 동일한 응답을 했음.



[그림 2-18]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단위: %)

2.3.9.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그림 2-19]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단위: %)

-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문항은 한국이 우위거나 북한이 우위거나 비슷하다는 삼분법적인 해석이 가능함.
-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2년간 일반인의 연평균 응답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북한이 우세하다’는 답변의 합은 약 46.8%로서 절반에 다다른 반면 ‘한국이 우세하다’는 답변의 합은 27%로 ‘비슷하다’(25.5%)와 대동소이함.
- 특이한 점은 매년 ‘북한 군사력이 한국의 군사력보다 더 강한 것’으로 평가한 일반인들은 2019년에 들어 처음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하였음.
- 2002년부터 동일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고 일반인들의 응답과는 다소 괴리가 나타났음. 전문가들의 응답은 고루 분포되어 있음.
- 먼저 ‘한국이 다소 우위에 있다’는 답변이 연평균 37.3%로 나타난 것에 비해 ‘북한이 다소 우위에 있다’는 응답이 연평균 22.9%에 그쳐 한국의 군사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음.
- 나아가 연평균 응답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군사력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전문가들이 14.9%에 달한 반면 ‘북한의 군사력이 훨씬 우세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5.9%밖에 안됐음.
- 결과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전문가들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남.

2.3.10. 주한미군의 주둔 시기

〈표 2-18〉 주한미군의 주둔 시기 (단위: %)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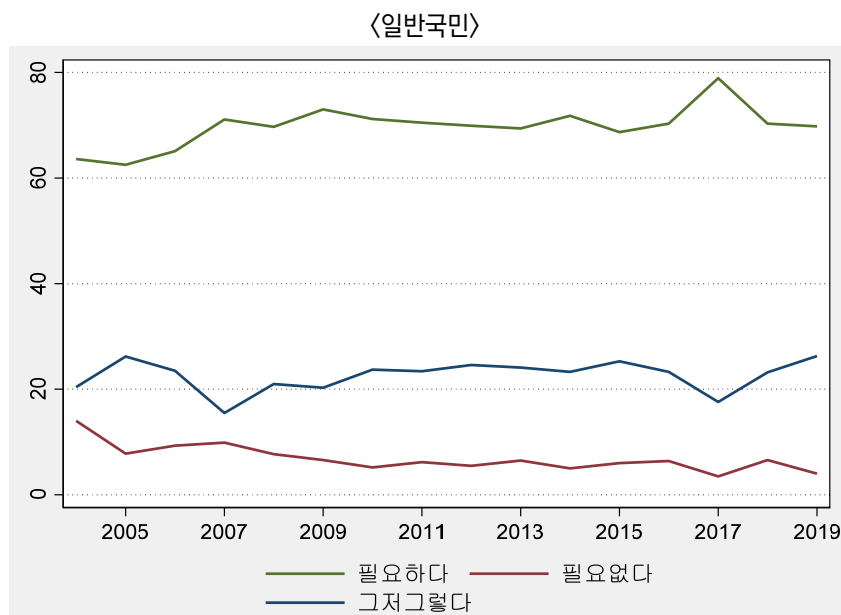
척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	16.2	13.1	7.9	6.8	9.4	11.6	12.3	9.0	10.8	12.9	10.8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	29.4	26.7	28.8	29.0	36.0	31.9	28.4	29.8	33.6	40.3	37.8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	31.4	32.6	39.8	37.5	34.0	35.3	36.2	34.3	35.7	26.4	34.6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	16.3	20.0	18.6	21.4	17.5	17.3	18.6	21.9	17.9	16.0	14.3
가능한 빨리 철수	6.7	7.7	4.8	5.3	3.1	3.9	4.5	4.9	2.1	4.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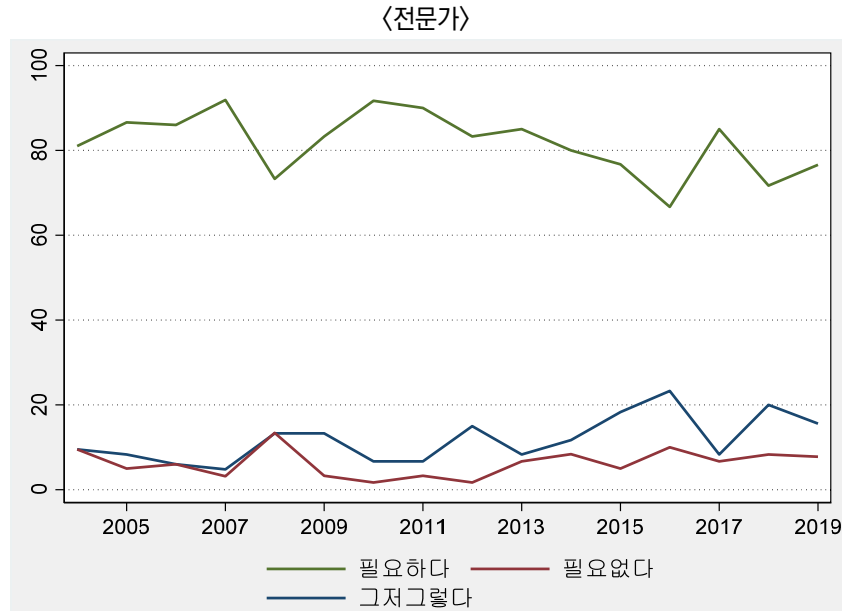
〈전문가〉

척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	35.0	38.3	33.3	40.0	38.3	28.3	33.3	6.7	43.3	48.3	39.1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	-	-	-	-	25.0	25.0	35.0	20.0	31.7	15.0	15.6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	18.3	20.0	28.3	25.0	10.0	11.7	5.0	48.3	8.3	3.3	14.1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	13.3	8.3	8.3	6.7	21.7	28.3	23.3	20.0	16.7	33.3	29.7
가능한 빨리 철수	6.7	7.7	4.8	5.3	5.0	6.7	3.3	5.0	0.0	0.0	1.6

- 주한미군의 주둔 시기에 대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실행되었음.
- 총 5개의 보기 중 4개는 ‘통일 전’과 ‘이후’,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 대처’,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 시기까지’ 주한미군의 주둔 시기를 설정하는 답변으로서 5번째 보기인 ‘가능한 빨리 철수’에 비교하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연평균 4.5%의 응답비율에 비해 연평균 90% 이상에 다다른 일반인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중 2010년은 상대적으로 ‘철수’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응답률이 7.7%로서 조사기간인 11년 중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음.
-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먼저인 1997년부터 조사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을 척도가 간소화된 2004년부터 살펴보면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연평균 33.3%에 달했음.
- 특히 2018년과 같은 경우 절반에 근접한 48.3%의 응답자가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음.
- 반면 2006년과 같은 경우 ‘가능한 빨리 철수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46%에 달했고 동해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없었음.

2.3.11.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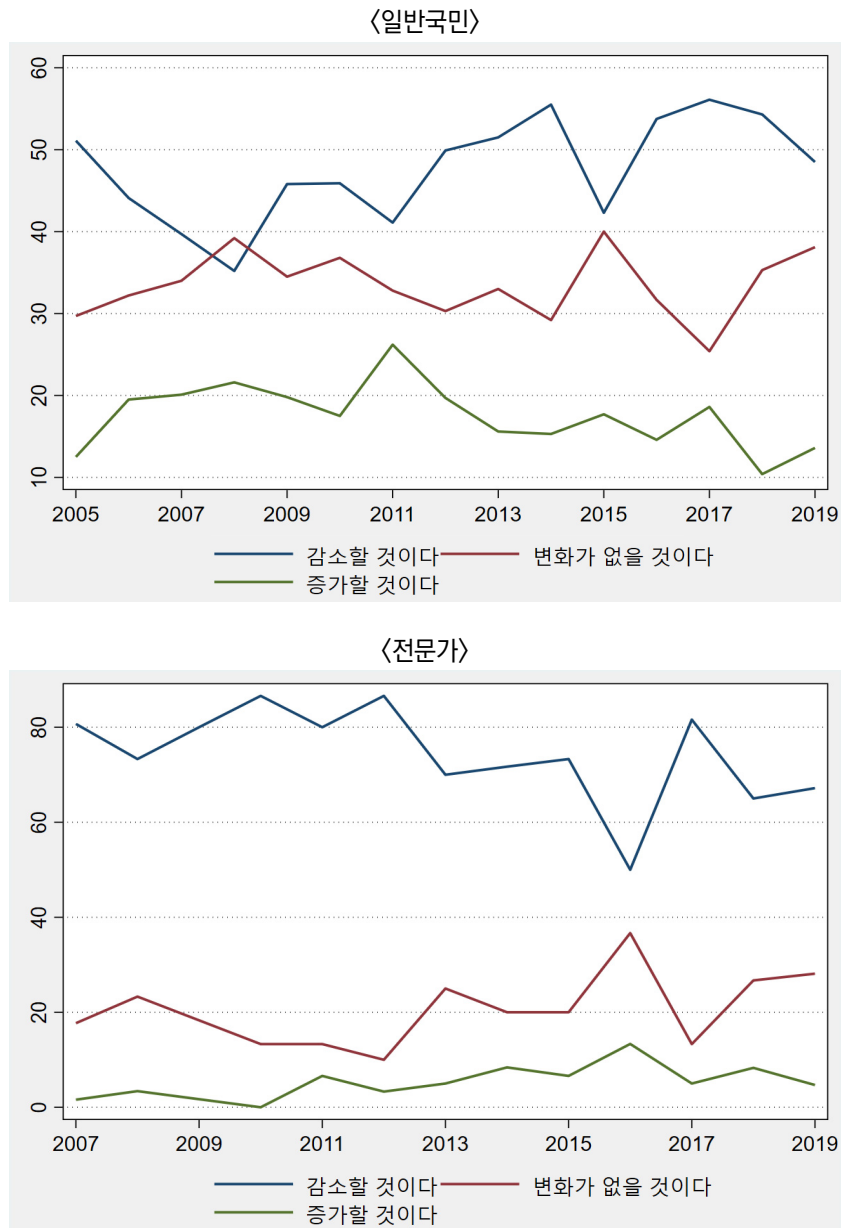


[그림 2-20] 한·미 연합 훈련의 필요성 (단위: %)

-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연평균 일반인들의 절반 이상인 53.8%는 ‘필요한 편’이라고 하고 15.9%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반면 ‘전혀 필요 없다’고 했거나 ‘필요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일반인들의 비율은 각각 1.0%와 5.9%로 나타남.
- 주목할 만 한 점은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차례도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음. ‘전혀 필요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 정도에 그쳤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필요한 편’이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률이 연평균 80%를 웃돌았음. ‘전혀 필요 없다’고 답변한 전문가는 연평균 0.8%에 그쳤음.
- 따라서 일반인과 비교를 했을 때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음.

2.3.12. 주한미군 감축 시 대북 전쟁억지 능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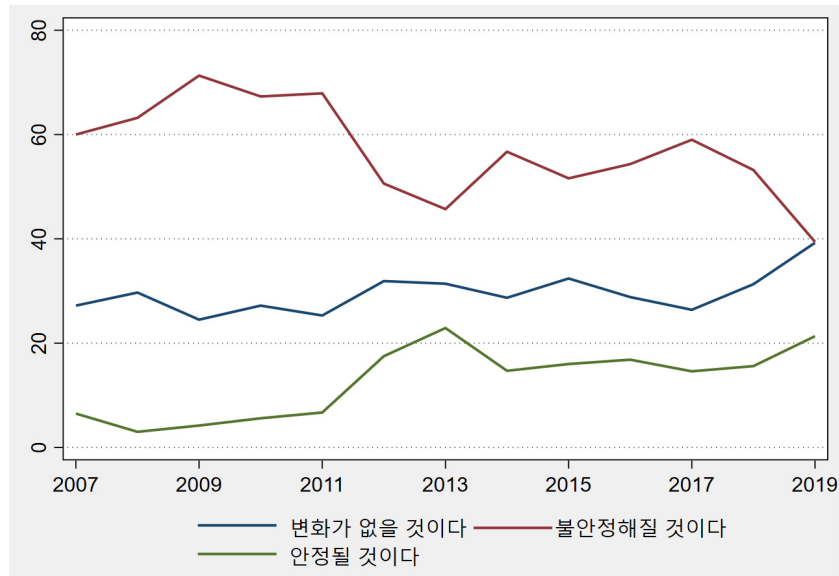
- 주한미군 감축 시 대북 전쟁억지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는 문항에 대한 답변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부터 ‘크게 감소할 것이다’ 까지 총 5개의 척도로 나뉘었음.
- 본 질문에 대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인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약간 감소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의 평균값이 33.5%로 그 뒤를 이었음.
- 주한미군 감축 시 ‘전쟁억지 능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답변의 평균치는 11.2%로써 국민 10명 중 1명 정도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15년의 조사기간 동안 매년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문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한미군 감축 시 대북 전쟁억지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는 문항에 대한 답변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부터 ‘크게 감소할 것이다’ 까지 총 5개의 척도로 나뉘었음.
- 본 질문에 대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인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약간 감소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의 평균값이 33.5%로 그 뒤를 이었음.
- 주한미군 감축 시 ‘전쟁억지 능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답변의 평균치는 11.2%로써 국민 10명 중 1명 정도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15년의 조사기간 동안 매년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문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같은 기간 전문가들의 응답은 일반인들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임.
- 먼저 ‘약간 감소할 것’ 또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평균치 비율의 합이 70.1%로서 과반수의 전문가들이 주한미군이 감축 되면 대북 전쟁억지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했음.
- 반면 ‘약간 증가할 것이다’와 ‘크게 증가할 것이다’의 15년 평균을 살펴보면 각각 5.5%와 4.9%로서 주한미군 감축이 전쟁억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전문가는 10명의 1명꼴에 그친다고 볼 수 있음.
- 특징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없었고, 2010년에는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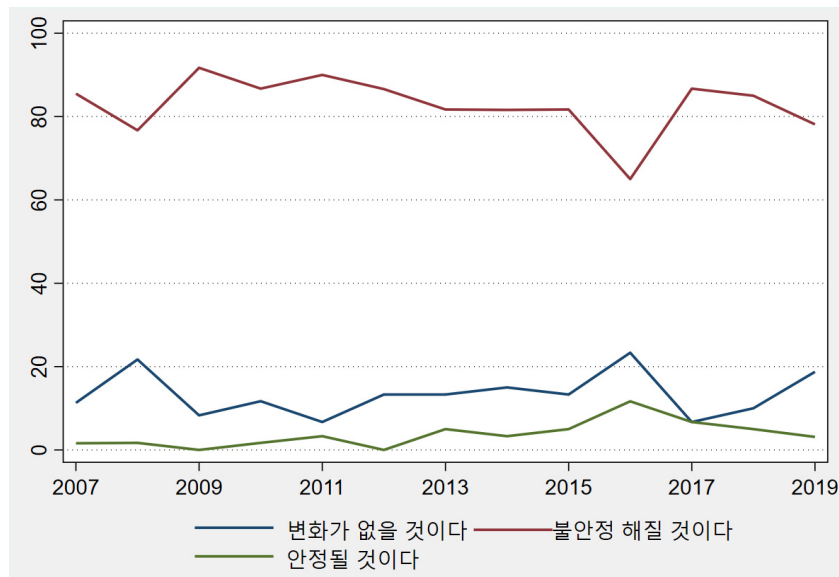
[그림 2-21] 주한미군 감축 시 대북 전쟁억지 능력의 변화 (단위: %)

2.3.13.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일반국민〉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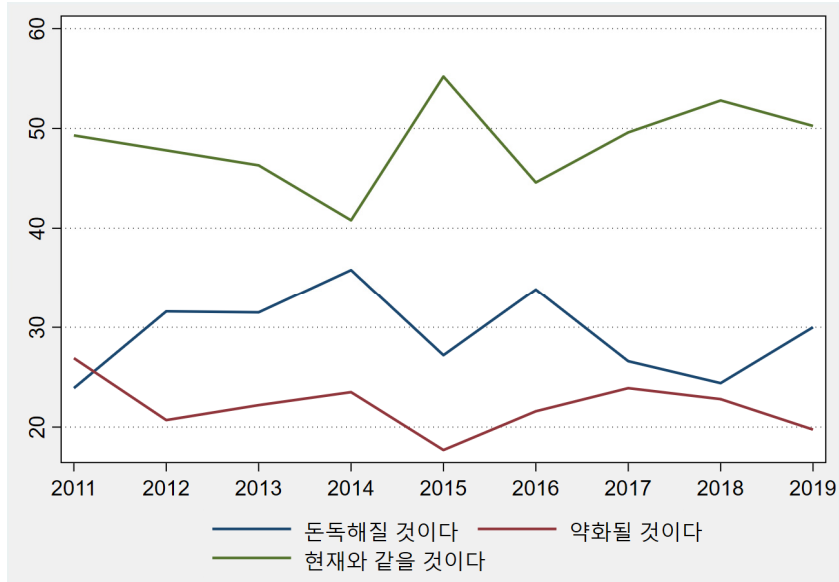


[그림 2-22]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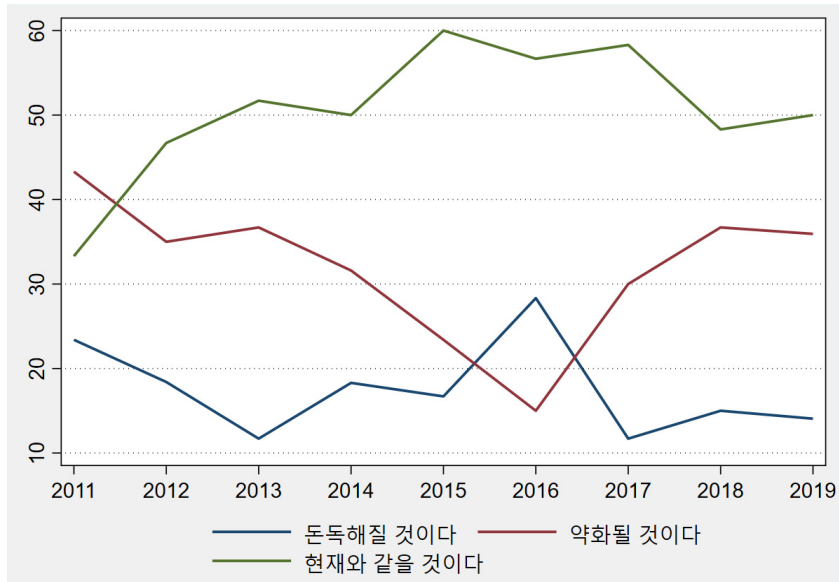
-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응답의 연 평균값을 살펴보면 먼저 ‘다소 불안정 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48.1%로 절반에 가까웠음. 그 다음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9.5%로 많았고, ‘매우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그쳤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답변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가는 해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해에 약 8% 상승했음.
- 나아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예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양상을 보였음.
- 동일한 기간 동안 같은 척도를 기반으로 실시된 전문가 안보의식 조사 결과는 일반인들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연 평균치를 보면 ‘다소 불안정 해질 것’이다가 49.7%, ‘매우 불안정 해질 것’이다가 33.2%로 그 합이 82.9%에 달하고 있음.
 - 즉 10명 중 8명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동북아 정세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
- 반면 ‘매우 안정될 것이다’와 ‘다소 안정될 것이다’라는 답변의 연 평균치를 보면 각각 0.8%와 2.9%로 나타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13.3%의 응답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동북아 정세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음.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과 같은 경우에 ‘불안정 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90%를 차지하여 당해 10명 중 9명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매우 부정적으로 봤다고 볼 수 있음.

2.3.1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

〈일반국민〉



〈전문가〉



[그림 2-2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 (단위: %)

-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일반인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조사가 진행된 9년간 평균치를 살펴보면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답변이 48.5%로 절반에 가까웠고, ‘돈독해질 것’이 25.7%, ‘약화될 것이다’가 20.6%로 나타나 전형적인 벨커브(Bell Curve)가 형성되었음. 그 외에 특별한 연도별 추이는 관찰되지 않았음.
- 같은 기간 실시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으나 일반인 조사결과와는 달리 ‘돈독해질 것’이라는 응답자의 2배에 다다른 응답자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2018년도에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해 ‘현재와 같을 것이다’(58.3%)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대거 약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보임.

2.3.15. 소결

-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전문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돈독하다는 것이었음.
- 다만 2016년부터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하다’는 응답이 다소 줄어든 반면 ‘불편하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음.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이와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은 한미 군사동맹, 경제협력, 문화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음.
- 따라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
- 2017년 이후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이 돈독해지기보다는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2.4. 남북관계

2.4.1.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북한정권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응답은 2008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에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0% 내외의 응답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 둘째, 2008년과 2018년에는 북한정권을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셋째, 북한정권은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9.7%였으나 2019년에는 29.0%를 기록하였음.

〈표 2-19〉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42.7	54.2	45.9	37.0	43.9	56.4	42.1	49.2	55.0	29.8	36.4
우리과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15.7	13.3	18.3	19.6	24.3	17.2	27.0	18.8	20.2	23.2	29.0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5.6	25.6	30.3	34.8	25.9	19.8	26.3	26.0	22.8	42.7	31.3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6.1	7.0	5.5	8.7	5.8	6.6	4.7	6.0	2.1	4.3	3.3

〈전문가〉

척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68.3	66.7	71.7	70.0	71.7	56.7	73.3	61.7	75.0	45.0	51.6
우리과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13.3	18.3	6.7	10.0	6.7	16.7	8.3	13.3	11.7	10.0	10.9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16.7	11.7	13.3	16.7	21.7	25.0	16.7	21.7	11.7	43.3	35.9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1.7	3.3	6.7	3.3	0.0	1.7	1.7	3.3	1.7	1.7	1.6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분석됨.
- 첫째, 북한정권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응답은 모든 해에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응답 비중이 최근 크게 감소하여 2019년에는 51.6%를 기록하였음.
- 둘째, 북한을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하는 전문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 예를 들어 2010년에는 11.7%가 북한을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2018년에는 43.3%가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의식한다고 응답하였음.

2.4.2. 북한주민에 대한 의견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주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2010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에 북한주민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 해당 비중은 50.6%를 기록하였음.
 - 둘째, 북한주민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응답한 비중은 2010년에 46.2%에서 2019년에 17.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셋째, 응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북한 주민을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여, 2010년 7.8%에서 2019년 25.3%를 기록하였음.
-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주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분석됨.
 - 먼저 일반인의 의식과 유사하게 북한주민을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 답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다만, 해당 비중의 크기는 일반인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9년 63.3%에서 2019년 42.2%를 기록하였음.
 - 둘째, 북한주민을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여 2015년 이후 모든 해에 50% 내외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이었음.

〈표 2-20〉 북한주민에 대한 의견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11.2	9.7	10.3	15.3	12.3	16.3	10.9	15.8	13.7	9.8	15.7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10.7	7.8	11.3	15.0	21.8	14.6	21.5	16.8	13.8	13.1	25.3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40.4	36.3	45.7	37.6	34.6	33.0	37.6	38.2	41.3	50.6	42.0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37.7	46.2	32.7	32.1	31.3	36.1	30.0	29.3	31.3	26.6	17.0

〈전문가〉

척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1.7	1.7	13.3	3.3	3.3	1.7	6.7	10.0	6.7	1.7	7.8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3.3	0.0	1.7	0.0	0.0	5.0	3.3	3.3	3.3	5.0	1.6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1.7	45.0	30.0	31.7	33.3	38.3	36.7	50.0	48.3	51.7	48.4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63.3	53.3	55.0	65.0	63.3	55.0	53.3	36.7	41.7	41.7	42.2

2.4.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2018년 이전까지 모든 해에 김정은 체제는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둘째,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보통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20.0%에서 35.0% 구간에서 증감을 반복해왔음.
- 셋째,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최근 크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27.5%를 기록하였음. 반면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최근 크게 감소하여 2019년 30.0%를 기록하였음.

〈표 2-21〉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안정적일 것이다	21.6	18.8	14.4	16.5	13.8	16.5	24.4	29.4
보통이다	33.5	35.6	22.4	30.6	24.3	21.8	36.5	34.1
불안정 해질 것이다	45.0	45.7	63.3	52.9	61.8	61.7	39.1	36.5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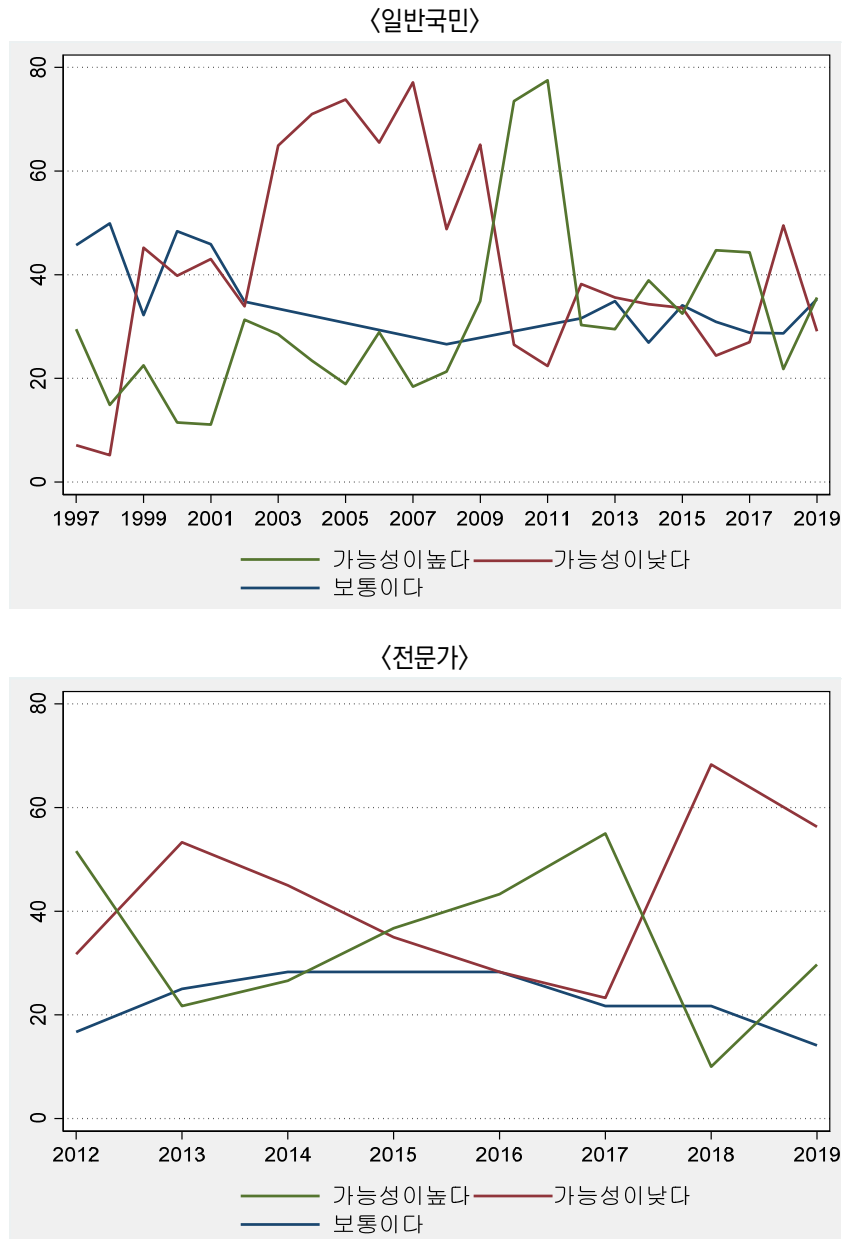
척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25.0	33.3	35.0	18.3	15.0	45.0	60.0	53.1
보통이다	26.7	23.3	20.0	23.3	13.3	25.0	16.7	26.6
불안정 해질 것이다	48.3	43.4	45.0	58.4	71.7	30.0	23.3	20.3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일반인의 응답 변화 추이와 동일하게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인 것이라는 응답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음.
- 특히 두 응답의 비중이 역전되어 2019년 기준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48.4%,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17.2%를 기록하였음.

2.4.4.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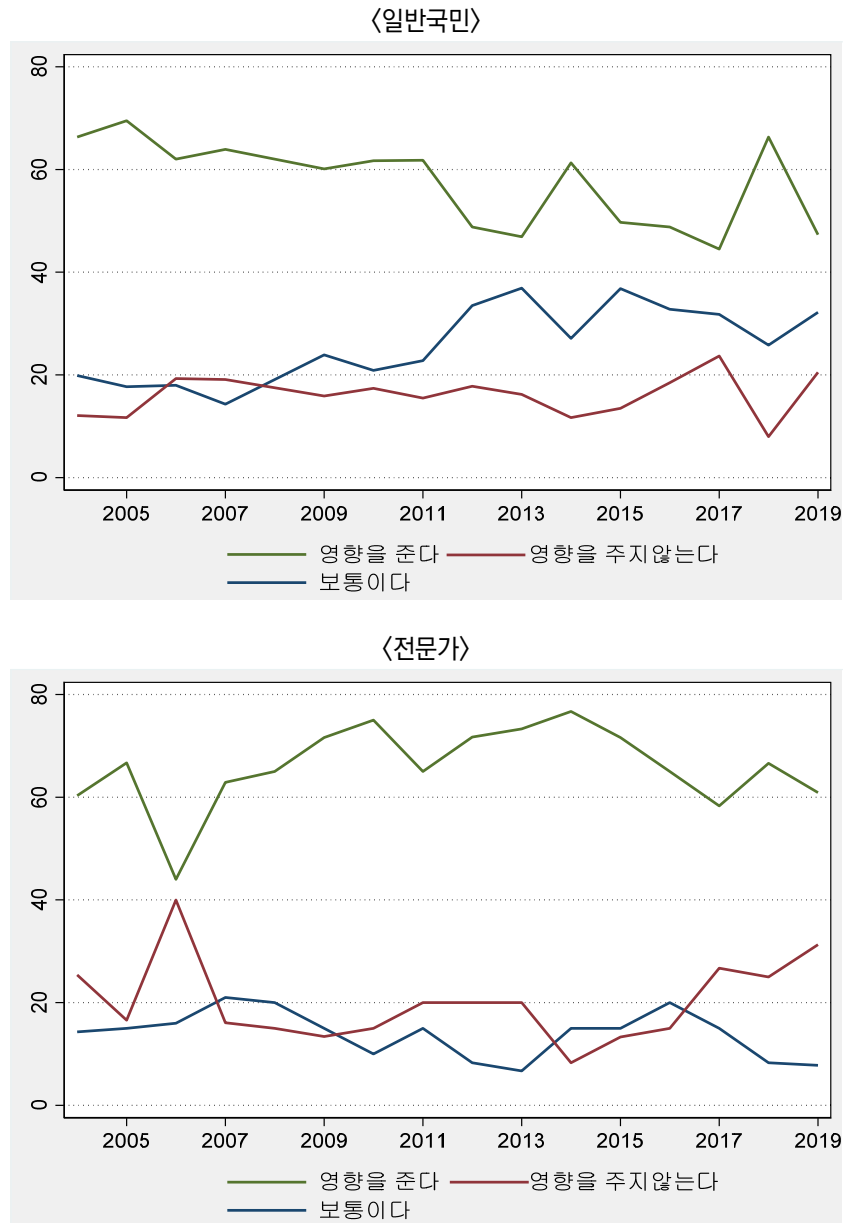
- 일반인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19년까지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의 비중은 최근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0년대 중반 50.0% 내외였던 것이 2019년에는 26.7%를 기록하였음.
- 둘째,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최근 크게 감소하여 2018년에는 17.0%를 기록하였음. 다만 2019년에는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의 비중이 낮다는 응답의 비중을 넘어섰음. 각각의 비중은 30.0%, 26.7%임.
- 셋째,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2010년 이후 2년간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높다”와 “매우 높다”)는 의견이 최대 77.5%까지 상승했지만, 2012년에 30%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응답 비중들의 변화 추이는 유사함.

○ 다만, 2019년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들과 달리 여전히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다고 응답하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음. 각각의 비중은 35.9%, 25.0%임.



[그림 2-24]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단위: %)

2.4.5.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림 2-25]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모든 해에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40-50% 수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둘째,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이라는 대답이었음.
- 셋째, 2016년까지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 해당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일반 국민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2006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에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둘째, 최근 3년간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4.6.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

〈표 2-22〉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	-	30.8	26.3	27.3	21.8	25.6	28.3	28.4	27.8	20.5	32.3	38.2	41.2	37.3	36.4	12.4	18.2	10.9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16.6	60.3	35.1	40.1	45.7	42.4	40.9	36.4	34.1	37.0	41.9	37.8	32.9	31.2	39.5	33.6	34.6	41.3	40.1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65.3	20.7	22.2	23.8	19.4	26.2	23.0	25.2	26.1	25.1	27.3	15.3	12.0	10.8	10.6	19.6	33.5	31.9	38.8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4.7	7.4	8.6	7.4	5.0	8.3	8.5	8.8	11.4	10.0	10.0	14.5	16.7	16.8	12.0	10.4	19.3	8.3	10.3
기타	-	-	0.3	0.2	0.3	0.5	2.0	-	-	0.2	0.3	0.0	0.3	0.1	0.6	0.0	0.2	0.3	0.0

〈전문가〉

척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9.4	36.8	-	25.4	16.7	8.0	14.5	16.7	25.0	21.7	28.3	25.0	28.3	41.7	30.0	36.7	36.7	20.0	28.1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7.3	46.4	-	65.1	61.7	70.0	74.2	75.0	63.3	65.0	48.3	70.0	61.7	50.0	60.0	46.7	38.3	56.7	53.1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82.1	11.9	-	9.5	18.3	16.0	9.7	6.7	11.7	10.0	13.3	5.0	6.7	8.3	8.3	8.3	16.7	13.3	15.6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1.3	2.7	-	0.0	1.7	4.0	1.6	1.7	0.0	1.7	8.3	0.0	3.3	0.0	1.7	8.3	5.0	8.3	0.0
기타													0.0	0.0	0.0	0.0	3.3	1.7	3.1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2016년 이후 사안에 따라 무상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하였음. 예를 들어 2019년 북한에 대해 무상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1%를,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0.9%를 차지하였음.
- 둘째, 북한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003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19.3%의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이었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북한에 대해 사안에 따라 무상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해에 가장 높은 비중의 응답이었음.
- 둘째, 일반인과 비교해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2019년에도 해당 응답의 비중은 28.1%를 기록하였음. 해당 비중은 일반인의 3배에 가까운 수준임.
- 셋째, 북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10.0% 이하의 낮은 수준의 응답 비중을 가짐.

2.4.7. 금강산 관광 재개

〈표 2-23〉 금강산 관광 재개 (단위: %)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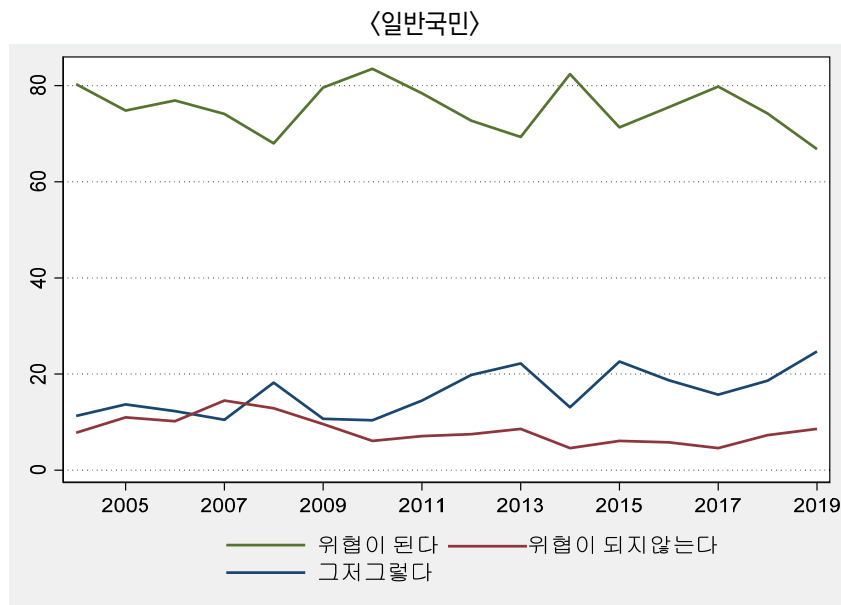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해야 한다	45.3	50.3	51.4	43.9	33.2	59.9	46.2
그저 그렇다	35.9	33.2	32.4	37.4	38.5	28.8	34.3
추진해선 안 된다	18.7	16.5	16.2	18.7	28.4	11.4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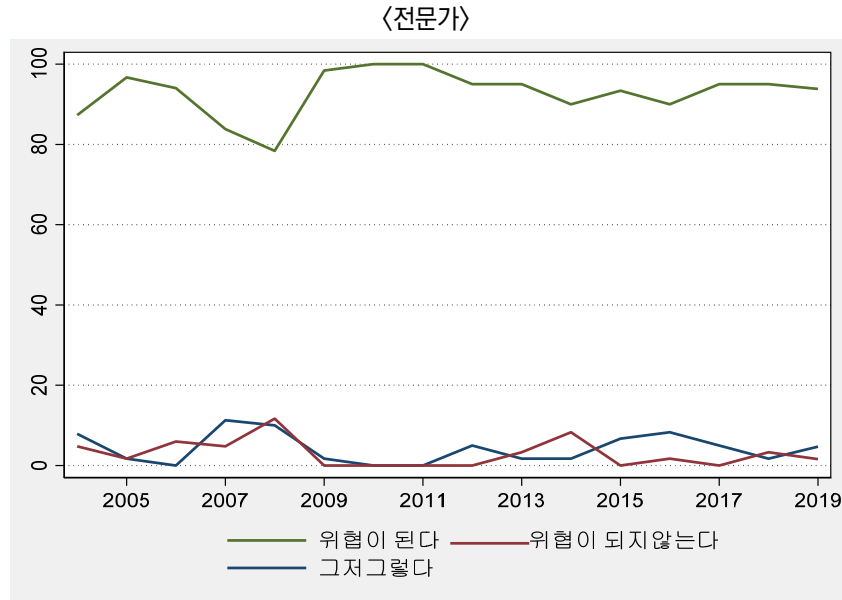
〈전문가〉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해야 한다	66.6	70.0	70.0	46.7	38.3	63.3	57.8
그저 그렇다	16.7	11.7	8.3	40.0	18.3	10.0	20.3
가능한 한 추진해선 안 된다	16.7	18.4	21.7	13.3	43.3	26.7	21.9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은 가능한 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며, 해당 응답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크게 증가하여 2017년에는 27.5%, 2018년에는 45.8%를 기록하였음.
- 둘째, 금강산 관광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35.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8년에는 해당 응답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음. 2017년과 2018년의 응답 비중은 각각 38.5%, 28.8%를 기록하였음.
- 셋째, 가능한 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의 경우, 2018년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2017년도 해당 응답의 비중은 21.7%였으나, 2018년에는 9.2%로 크게 낮아졌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금강산 관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응답의 비중이 28.3%를 기록하였음.
- 둘째, 금강산 관광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2017년 이후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2.4.8.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 위협





[그림 2-26]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단위: %)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 위협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40.0~50.0% 수준에서 모든 해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둘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매우 큰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모든 해에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30.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해왔음.
- 셋째, 2019년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 위협이 그저 그렇다는 응답 비중이 매우 큰 위협이 된다는 응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음. 각각의 비중은 24.7%, 21.3%를 기록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 위협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일반인들의 응답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모든 기간에 대하여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매우 큰 위협이 된다는 응답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였음. 해당 응답의 비중은 최소 46.7%에서 최대 78.0%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둘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전 기간에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증감 폭은 최소 16.0%에서 최고 43.3% 수준임.

2.4.9.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표 2-2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지원을 더 얻으려고	13.0	13.1	19.8	20.4	21.4	33.1	22.1	24.5	27.4	29.5	27.7	25.6	20.8	26.3	22.4	17.2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	32.9	36.2	35.5	36.3	29.6	45.6	51.3	43.8	43.4	37.7	38.6	37.0	40.1	44.1	54.4	40.2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	-	-	-	-	11.0	12.1	17.9	17.6	15.1	20.8	18.8	22.9	16.1	11.4	25.8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	-	-	-	-	6.7	6.1	9.9	7.8	10.5	7.8	13.7	9.9	8.7	8.9	13.3
한국을 위협하기 위하여	-	-	-	-	-	3.2	8.1	3.8	3.8	7.2	5.0	4.9	6.3	4.8	2.7	3.6
기타	-	0.3	0.1	0.4	-	-	0.3	0.2	0.0	0.1	0.2	0.1	0.0	0.1	0.2	0.0

〈전문가〉

척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지원을 더 얻으려고	14.3	1.7	6.0	1.6	10.0	5.0	18.3	13.3	11.7	0.0	5.0	0.0	11.7	0.0	0.0	1.6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	58.7	78.3	60.0	77.4	73.3	88.3	71.7	63.3	71.7	90.0	83.3	85.0	40.0	73.3	76.7	76.6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	-	-	-	-	0.0	1.7	3.3	13.3	3.3	3.3	5.0	28.3	10.0	8.3	3.1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	-	-	-	-	5.0	0.0	8.3	0.0	0.0	3.3	3.3	15.0	3.3	5.0	1.6
한국을 위협하기 위하여	-	-	-	-	-	1.7	6.7	8.3	1.7	5.0	1.7	5.0	5.0	8.3	6.7	10.9
기타	-	0.0	2.0	1.6	-	-	1.7	3.3	1.7	1.7	3.3	1.7	0.0	5.0	3.3	6.3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는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모든 기간에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했으며, 해당 응답의 비중은 2015년까지 감소하다 이후 증가하여 2018년에는 54.4%를 기록하였음.
- 둘째,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는 의도라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응답률은 20.0-30.0%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크게 감소하였음.
- 셋째, 2019년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에 대하여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음. 2019년 각각의 응답 비중은 25.8%와 17.2%를 기록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일반인과 유사하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가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모든 기간에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비중은 최고 90.0%, 최저 40.0%의 범위로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임.
- 둘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해당 응답에 대한 비중이 1.6%로 매우 낮았음.

2.4.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표 2-25〉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	29.6	32.1	30.7	24.3	30.8	25.1	26.8	22.4	22.1	20.9	35.5	15.8
6자 회담을 통한 해결	20.9	23.3	20.7	20.3	23.0	19.8	13.3	23.0	16.4	12.3	15.2	15.1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29.8	29.6	36.7	42.8	27.9	22.0	25.7	25.3	22.5	24.0	17.8	24.1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11.5	9.3	8.2	10.5	14.0	11.2	12.5	11.5	10.8	11.3	11.9	19.6
주변국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	-	-	-	-	-	12.6	13.8	11.1	19.0	20.6	13.3	17.9
주변국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군사 제재	-	-	-	-	-	6.3	6.8	5.5	7.3	9.7	4.7	6.3
특별한 대응은 필요 없다	5.0	5.5	3.8	1.9	4.3	3.0	1.1	1.2	1.8	1.3	1.8	1.2

〈전문가〉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	8.3	13.3	5.0	8.3	10.0	5.0	10.0	10.0	21.7	8.3	21.7	18.8
6자 회담을 통한 해결	35.0	15.0	18.3	26.7	16.7	8.3	11.7	6.7	10.0	6.7	1.7	1.6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38.3	56.7	58.3	35.0	58.3	43.3	45.0	55.0	33.3	28.3	38.3	29.7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15.0	11.7	13.3	25.0	11.7	13.3	13.3	8.3	5.0	21.7	15.0	25.0
주변국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	-	-	-	-	-	21.7	10.0	11.7	23.3	20.0	18.3	20.3
주변국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군사 제재	-	-	-	-	-	6.7	6.7	6.7	6.7	15.0	5.0	4.7
특별한 대응은 필요 없다	3.3	3.3	5.0	5.0	3.3	1.7	3.3	1.7	0.0	0.0	0.0	0.0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2018년에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9년 다시 크게 감소하였음. 반면 2018

년에는 6자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을 답한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19년 다시 증가하였음.

- 둘째,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증가하여 2013년에 11.2%였던 응답 비중이 2019년에는 19.6%를 기록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을 기준으로 주요 응답의 증감 방향이 바뀌었음.
- 다만, 일반인들의 응답과는 달리 모든 기간에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 가장 높은 비중의 응답이었으며, 응답 비중의 최고값은 55.0%, 최소값은 28.3%를 기록하였음.

2.4.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응답이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의 응답을 차지하였음. 2016년의 경우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는 중국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9.7%로 미국이라는 응답 41.8%를 상회하였음.
- 둘째, 대부분의 기간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로 중국을 선택하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셋째, 일본과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응답의 비중 50.0% 내외 수준을 훨씬 하회하는 비중을 차지하였음.
- 넷째, 2019년에는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응답 비중과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응답 비중이 각각 68.8%, 23.5%로 그 차이가 최고 수준이었음.

〈표 2-26〉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71.6	50.3	48.6	51.3	45.3	54.3	55.5	41.8	52.8	64.0	68.8
일본	3.2	4.3	7.3	7.5	9.8	5.5	6.8	5.8	4.6	5.3	4.8
중국	22.3	42.2	41.2	37.0	39.3	36.4	33.9	49.7	39.6	28.8	23.5
러시아	2.2	2.9	2.8	3.8	5.3	3.4	3.8	2.8	2.8	1.8	2.9
기타	-	0.4	0.1	0.5	0.3	0.4	0.0	0.0	0.3	0.2	0.0

〈전문가〉

척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73.3	43.3	41.7	60.0	51.7	61.7	66.7	46.7	75.0	81.7	89.1
일본	0.0	1.7	0.0	0.0	1.7	0.0	1.7	3.3	0.0	0.0	0.0
중국	25.0	55.0	53.3	31.7	45.0	36.7	31.7	48.3	25.0	18.3	10.9
러시아	0.0	0.0	3.3	8.3	1.7	0.0	0.0	1.7	0.0	0.0	0.0
기타	-	0.0	1.7	0.0	0.0	1.7	0.0	0.0	0.0	0.0	0.0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2011년까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는 중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이후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2019년에는 미국을 주요 국가라고 응답한 비중은 89.1%, 중국을 주요 국가라고 응답한 비중은 10.9%로 두 응답 비중 간의 차이가 매우 커졌으며, 차이의 규모가 일반인의 응답 비중 간의 차이보다 훨씬 큼.
- 둘째, 전문가들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로서 일본과 러시아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음.

2.4.12. 북한 핵미사일 폐기의 진정성

〈표 2-27〉 북한 핵·미사일 폐기의 진정성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진정성이 있다	0.0	0.0	0.0	0.0	0.0	48.8	35.1
진정성이 없다	0.0	0.0	0.0	0.0	0.0	40.2	57.9
알 수 없다	-	-	-	-	-	11.0	7.0

〈전문가〉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진정성이 있다	0.0	0.0	0.0	0.0	0.0	51.7	37.5
진정성이 없다	0.0	0.0	0.0	0.0	0.0	43.3	56.3
알 수 없다	-	-	-	-	-	5.0	6.3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북한 핵미사일 폐기의 진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2018년에는 북한 핵미사일 폐기에는 진정성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반면 2019년에는 북한 핵미사일 폐기에는 진정성이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둘째, 북한 핵미사일 폐기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의 경우 2018년에는 11.9%였으나, 2019년에는 20.6%를 기록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북한 핵미사일 폐기의 진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응답 비중의 변화와는 달리 2018년과 2019년 모두 진정성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각각 41.7%, 3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더불어 진정성이 없는 편이라는 응답 비중도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2018년과 2019년 각각의 응답 비중은 28.3%와 28.1%를 기록하였음.

2.4.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달성 시기

〈표 2-28〉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시기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8	2019
1~2년 이내	3.9	0.8
3~5년 이내	19.8	10.8
5~10년 이내	24.6	22.7
10년 이후	26.0	29.6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25.8	36.2

〈전문가〉

척도	2018	2019
1~2년 이내	5.0	0.0
3~5년 이내	20.0	14.1
5~10년 이내	30.0	17.2
10년 이후	16.7	26.6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28.3	42.2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달성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2018년에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달성은 10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중이 2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10년 이후에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3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둘째, 2018년에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달성 시기를 3~5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19.8%였으나, 2019년에는 10.8%로 전년대비 응답 비중이 50.0% 가까이 감소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달성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5~10년 이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달성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3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10년 이후에도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중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더불어 2018년에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1~2년 이내 달성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5.0%였는데, 2019년에는 0.0%를 기록, 전문가 중 누구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1~2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지 않았음.

2.4.14.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표 2-29〉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단위: %)

〈일반국민〉

책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24.5	26.1	26.5	29.8	27.4	33.7	44.0	37.2	17.3
한국군의 즉각적인 군사 보복	22.1	21.1	19.8	15.0	24.5	18.7	14.6	14.1	17.3
한미 공동의 즉각적 군사 보복	19.8	17.9	28.6	22.4	25.9	21.9	19.0	20.0	29.5
대북 경험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	30.2	26.8	21.2	26.8	19.7	22.3	18.5	23.3	28.2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3.3	8.1	3.9	6.0	2.5	3.5	3.9	5.5	7.8

〈전문가〉

책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33.3	13.3	30.0	21.7	18.3	38.3	21.7	16.7	18.8
한국군의 즉각적인 군사 보복	20.0	6.7	8.3	10.0	18.3	11.7	6.7	3.3	3.1
한미 공동의 즉각적 군사 보복	26.7	36.7	36.7	33.3	38.3	25.0	55.0	45.0	40.6
대북 경험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	16.7	43.3	25.0	33.3	25.0	21.7	15.0	33.3	35.9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3.3	0.0	0.0	1.7	0.0	3.3	1.7	1.7	1.6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대부분의 시기에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2019년에는 해당 응답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17.3% 수준에 불과하였음.
- 둘째, 2019년에는 한미 공동의 즉각적인 군사보복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응답이 2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대북 경협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음은 의견이 28.2%를 기록하였음.
- 2019년에는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음은 응답이 17.3%로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였음. 해당 비율은 한국군의 즉각적인 군사 보복을 응답한 비중과 동일함.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대부분의 시기에 한미 공동의 즉각적 군사 보복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 최고 25.0%에서 최대 55.0% 범위에서 증감이 반복되고 있음.
- 둘째, 대북경협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정책의 확대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 35.9%를 기록하였음.

2.4.15.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8년과 2019년에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2018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를 10년 이후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32.1%를 차지하였음.
- 둘째, 2019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를 10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중과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33.3%를 기록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8년과 2019년에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응답과 달리 2018년과 2019년 모두 10년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다만 10년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또한 2018년 대비 2019년 크게 증가하여 각각 15.0%와 23.4%를 기록하였음.

〈표 2-30〉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8	2019
1~2년 이내	2.7	1.0
3~5년 이내	18.6	10.4
5~10년 이내	21.8	22.0
10년 이후	32.1	33.3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24.8	33.3

〈전문가〉

척도	2018	2019
1~2년 이내	1.7	0.0
3~5년 이내	23.3	12.5
5~10년 이내	23.3	28.1
10년 이후	36.7	35.9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15.0	23.4

2.4.16. 한반도 통일 전망

〈표 2-31〉 한반도 통일 전망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 이내	1.3	2.0	4.3	5.2	1.8	1.8	2.6	2.1	3.3	2.3
10년 이내	15.5	9.8	12.0	18.9	15.6	14.6	13.6	16.3	21.1	12.3
20년 이내	-	-	-	31.7	27.5	31.2	27.6	29.5	27.8	27.1
30년 이내	36.5	30.7	21.8	20.2	22.7	29.3	25.3	16.6	19.9	28.4
30년 이후	46.3	26.0	23.3	24.1	32.5	23.2	31.0	35.6	27.9	29.8

〈전문가〉

척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 이내	1.7	3.3	5.0	3.3	0.0	1.7	3.3	1.7	1.7	0.0
10년 이내	30.0	13.3	8.3	21.7	16.7	21.7	13.3	15.0	11.7	1.6
20년 이내	41.7	33.3	45.0	43.3	45.0	33.3	46.7	28.3	35.0	34.4
30년 이내	26.7	18.3	21.7	11.7	13.3	25.0	23.3	21.7	20.0	20.3
30년 이후	-	31.7	20.0	20.0	25.0	18.3	13.3	33.3	31.7	43.8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반도 통일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모든 응답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30년 이후 한반도 통일을 전망하는 응답과 20년 이내 한반도 통일을 전망하는 응답이 1, 2위를 번갈아 차지하고 있음.
- 둘째, 5년 이내 통일을 전망하는 응답 비중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반도 통일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에 20년 이내 한반도 통일을 전망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둘째, 2016년 이후로 한반도 통일을 30년 이후로 전망한다는 응답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6년 통일을 30년 이후로 전망한다는 응답 비중은 13.3%였으나 2019년에는 43.8%를 기록하였음.
- 셋째, 한반도 통일이 10년 이내 전망된다는 응답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21.7%였으나, 2019년에는 1.6%를 기록하였음.

2.4.17. 한반도 통일 방식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반도 통일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점진적 관계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의 방식을 선택한 비중이 40.0-50.0% 수준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은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을 응답한 경우임. 특히 2017년에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을 응답한 비중이 42.0%였는데, 당시 점진적 관계개선을 통한 합의 통일의 응답 비중인 36.3%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셋째, 남북한 무력 충돌에 의한 흡수통일을 선택한 비중은 10.0-20.0% 범위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음.

〈표 2-32〉 한반도 통일 방식 (단위: %)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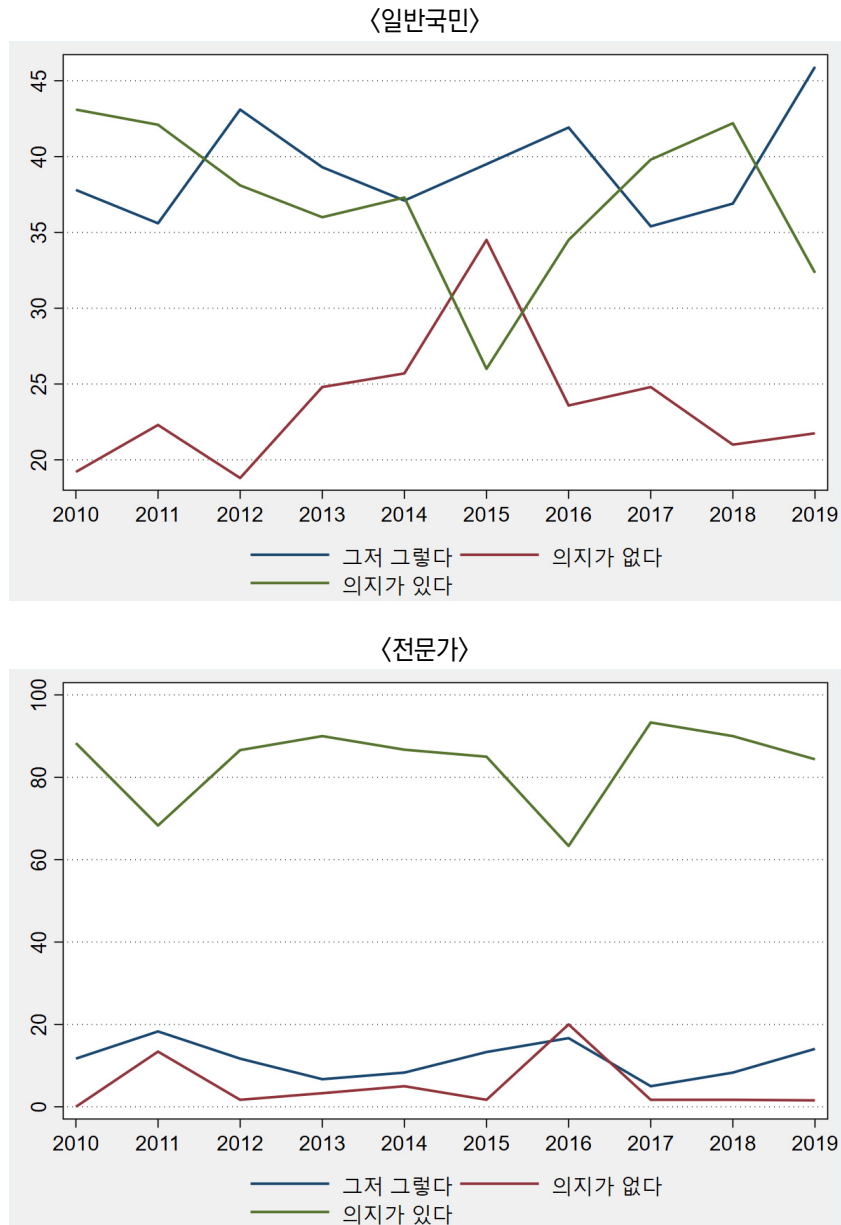
척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27.6	27.6	32.2	28.8	38.8	23.0	30.3	42.0	21.6	22.1
남북한 무력 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10.3	14.2	13.8	22.3	10.8	18.3	15.8	10.7	8.4	18.3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48.4	47.8	45.8	40.5	42.7	50.3	43.9	36.3	58.8	46.3
잘 모르겠다	13.8	10.5	8.2	8.3	7.8	8.5	10.1	11.1	11.2	13.4

〈전문가〉

척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71.7	58.3	43.3	40.0	45.0	56.7	48.3	46.7	28.3	23.4
남북한 무력 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3.3	5.0	0.0	1.7	0.0	1.7	11.7	6.7	0.0	1.6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21.7	25.0	53.3	46.7	48.3	35.0	36.7	38.3	61.7	64.1
잘 모르겠다	3.3	11.7	3.3	11.7	6.7	6.7	3.3	8.3	10.0	10.9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반도 통일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이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선택한 응답이었음.
- 다만, 2015년 이후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을 응답한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23.4% 수준이며, 점진적 관계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을 응답한 비중 64.1%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
- 둘째,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 통일을 선택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셋째, 남북한 무력 충돌에 의한 흡수통일을 선택한 비중은 5.0% 내외의 낮은 수준임.

2.4.18. 통일비용 지불 의지



[그림 2-27] 통일비용 지불 의지 (단위: %)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통일비용 지불 의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첫째, 통일비용 지불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모든 기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음. 해당 응답 비중은 4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9년에 4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음.
- 둘째, 통일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다는 응답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2015년에 22.9%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35.3%를 기록하였음.
- 셋째, 통일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없다는 응답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14.2%를 기록하였음.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통일비용 지불 의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통일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모든 기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둘째, 통일비용을 지불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모든 기간에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셋째, 최근 3년간 통일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0.0%였으며, 의지가 없다는 응답의 비중 또한 2.0% 이하 수준으로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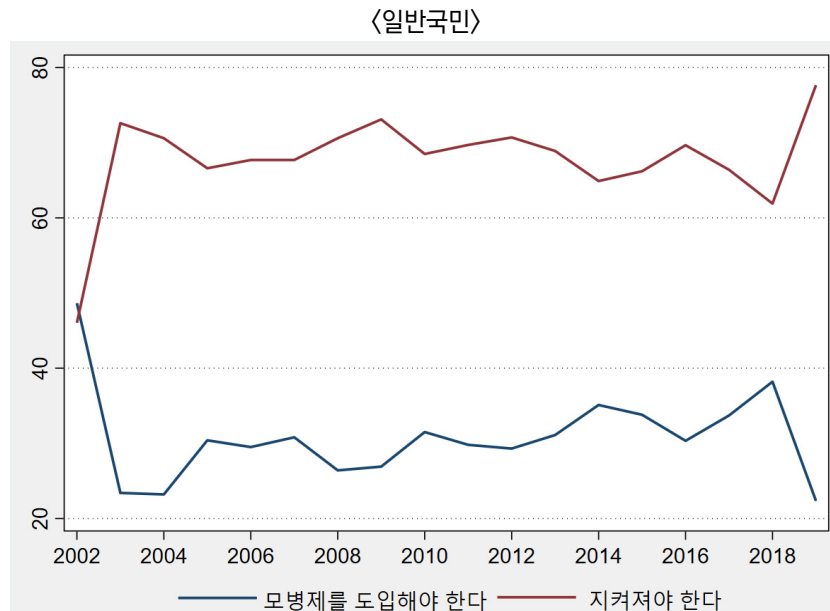
2.4.19.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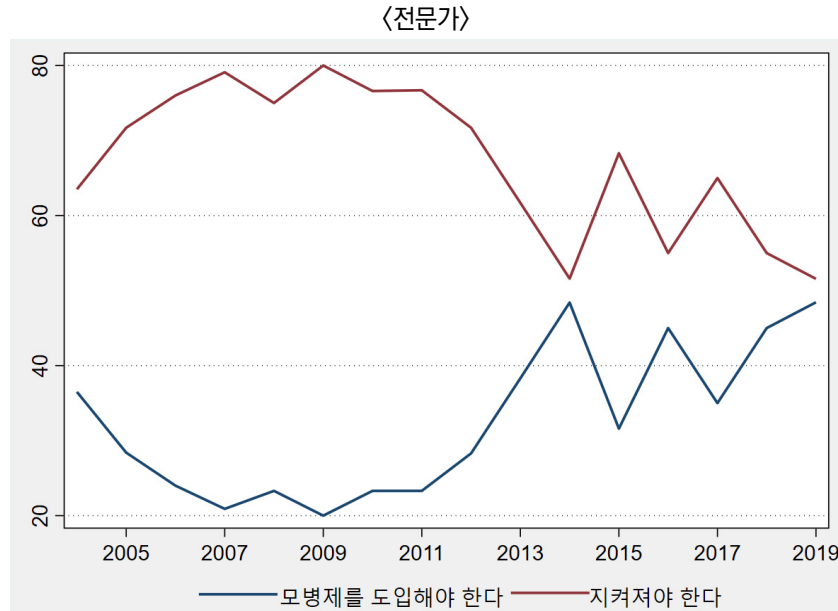
- 남북관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북한정권을 위협 요인 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음.
- 더불어 북한주민을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도 증가하였음.
- 또한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최근 크게 증가한 반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음.
- 특이점은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오히려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 최근 3년간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와 한미관계가 화해 무드로 귀결된 경험적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한편 가까운 미래의 통일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5년 이내 통일을 전망하기보다는 20년 이내 통일을 전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음.

2.5. 국방정책

2.5.1.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일반인의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8년간의 평균치를 보면 ‘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답변의 비율(34.1%)이 가장 높았고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의 비율(33.7%)이 다음으로 높았음.
- 답변의 척도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지원병제와 개병제로 나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원병제보다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선호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답변의 추이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 다만 2019년을 살펴보면 ‘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년보다 14.3% 상승했지만 ‘점진적으로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전년보다 10.2%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2-28]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단위: %)

-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일반인의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8년간의 평균치를 보면 ‘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답변의 비율(34.1%)이 가장 높았고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의 비율(33.7%)이 다음으로 높았음.
- 답변의 척도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지원병제와 개병제로 나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원병제보다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선호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답변의 추이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 다만 2019년을 살펴보면 ‘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년도 14.3% 상승했지만 ‘점진적으로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전년도 10.2%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음.
- 같은 기간 전문가들의 국민개병제에 대한 설문조사는 2003년을 제외하고 진행되었음.
- 전문가들의 인식조사에 대한 연도별 평균치 결과를 보면 일반인들의 결과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문가들 역시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36.7%로 가장 높았음. 특히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유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65.9%로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률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였음.

2.5.2. 병무부조리 수준

〈표 2-33〉 병무부조리 수준 (단위: %)

〈일반국민〉

척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줄어든 것 같다	29.9	45.2	38.8	56.1	49.7	57.4	41.9	51.8	43.5	43.0	53.3	46.2	44.2	51.0	49.8	39.5	43.8	47.0	42.8	46.7	47.8
별 차이가 없다	58.3	50.5	53.4	34.9	36.4	34.8	45.3	38.8	32.7	44.2	39.2	42.3	44.3	38.8	40.8	46.3	46.1	42.9	48.6	44.9	40.8
많아진 것 같다	11.3	3.3	7.7	9.0	7.3	4.3	7.8	5.5	17.0	7.8	7.4	11.5	11.4	10.2	9.4	14.3	10.2	10.1	8.6	8.3	11.4
잘 모르겠다	-	-	-	-	6.7	3.5	5.0	3.9	6.8	4.9	-	-	-	-	-	-	-	-	-	-	-

〈전문가〉

척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줄어든 것 같다	38.0	0.0	84.1	75.0	82.0	66.1	81.6	78.3	85.0	53.4	71.7	73.4	53.4	58.3	40.0	73.3	75.0	76.6
별 차이가 없다	51.0	-	11.1	18.3	16.0	21.0	15.0	15.0	13.3	35.0	28.3	23.3	33.3	26.7	35.0	26.7	21.7	21.9
많아진 것 같다	11.0	0.0	0.0	1.7	0.0	6.4	1.7	6.7	1.7	10.0	0.0	3.3	13.3	15.0	25.0	0.0	3.4	1.6
잘 모르겠다	-	-	4.8	5.0	2.0	6.5	1.7	-	-	-	-	-	-	-	-	-	-	-

-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병무부조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일반인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연도별 평균치를 살펴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4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조금 줄어든 것 같다’는 답변이 38.1%로 그 뒤를 이었음.
- 반면 ‘조금 많아진 것 같다’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연평균 답변은 각각 6.6%와 2.7%로서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 같다’는 답변보다 훨씬 낮았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에는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다’는 답변이 6.2%인 반면 2019년에는 1.7%인 것으로 보아 20년 사이에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2003년을 제외하고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평균 평가를 살펴보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가 25.5%, ‘조금 줄어든 것 같다’가 43.1%로서 ‘대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전문가가 68.6%에 달했음.

- 특히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일반인 응답률에 비해 반 정도의 수준인 24.3%에 그쳤음.
-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일반인들의 평가보다 더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음.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4, 2006, 2012, 2017년과 같은 경우에는 병무부조리가 ‘더욱 늘었다’는 평가가 0%였음.

2.5.3. 예술·체육 특기자의 국내외 대회 입상에 따른 병역특례

〈표 2-34〉 예술·체육 특기자의 국내외 대회 입상에 따른 병역특례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확대해야 한다	8.8	9.3	4.3	8.3	7.7	11.8	2.8
유지해야 한다	39.5	42.4	46.3	42.3	48.2	36.9	36.3
줄여야 한다	35.1	31.0	35.4	33.2	31.2	37.8	42.2
없애야 한다	12.9	13.4	11.5	10.2	10.8	11.7	15.9
잘 모르겠다	3.8	3.9	2.5	6.1	2.3	1.9	2.8

〈전문가〉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확대해야 한다	5.0	1.7	6.7	8.3	5.0	8.3	7.8
유지해야 한다	33.3	36.7	46.7	41.7	51.7	28.3	34.4
줄여야 한다	30.0	35.0	21.7	28.3	25.0	28.3	31.3
없애야 한다	31.7	25.0	25.0	11.7	16.7	33.3	20.3
잘 모르겠다	0.0	1.7	0.0	10.0	1.7	1.7	6.3

-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예술·체육 특기자의 국내외 대회 입상에 따른 병역특례에 대한 일반인들의 입장을 연평균으로 보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았음.
- 입상에 따른 병역특례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의 연 평균치도 34.7%에 다다랐고, ‘확대해야 한다’는 11.4%, ‘없애야 한다’는 11.9%를 기록했다.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에는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38%로 가장 높았고 ‘줄여야 한다’는 인식은 2011년(48.1%)에 가장 높았음. 특별한 연도별 추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같은 기간 전문가들의 답변은 ‘잘 모르겠다’까지 포함해 총 다섯 개의 척도로 나뉘었음.
- 연평균 값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인식과 매우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반인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문가들도 ‘유지해야 한다’(38.5%)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줄여야 한다’(26.6%)가 따랐음.
- 다른 점은 병역특례를 ‘없애야 한다’는 답변이 일반인들 중에는 11.9%가 있었던 반면 전문가 중에서는 20% 이르는 응답자가 동일한 응답을 했음.
- 연도별 추이도 마찬가지로 2012년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53.3% 수준이었음.

2.5.4.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표 2-35〉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장되고 있다	16.1	31.4	30.9	21.4	29.0	43.2
보통이다	37.6	42.3	40.9	44.0	48.0	39.1
보장되지 않는다	46.4	26.3	28.2	34.6	23.0	17.8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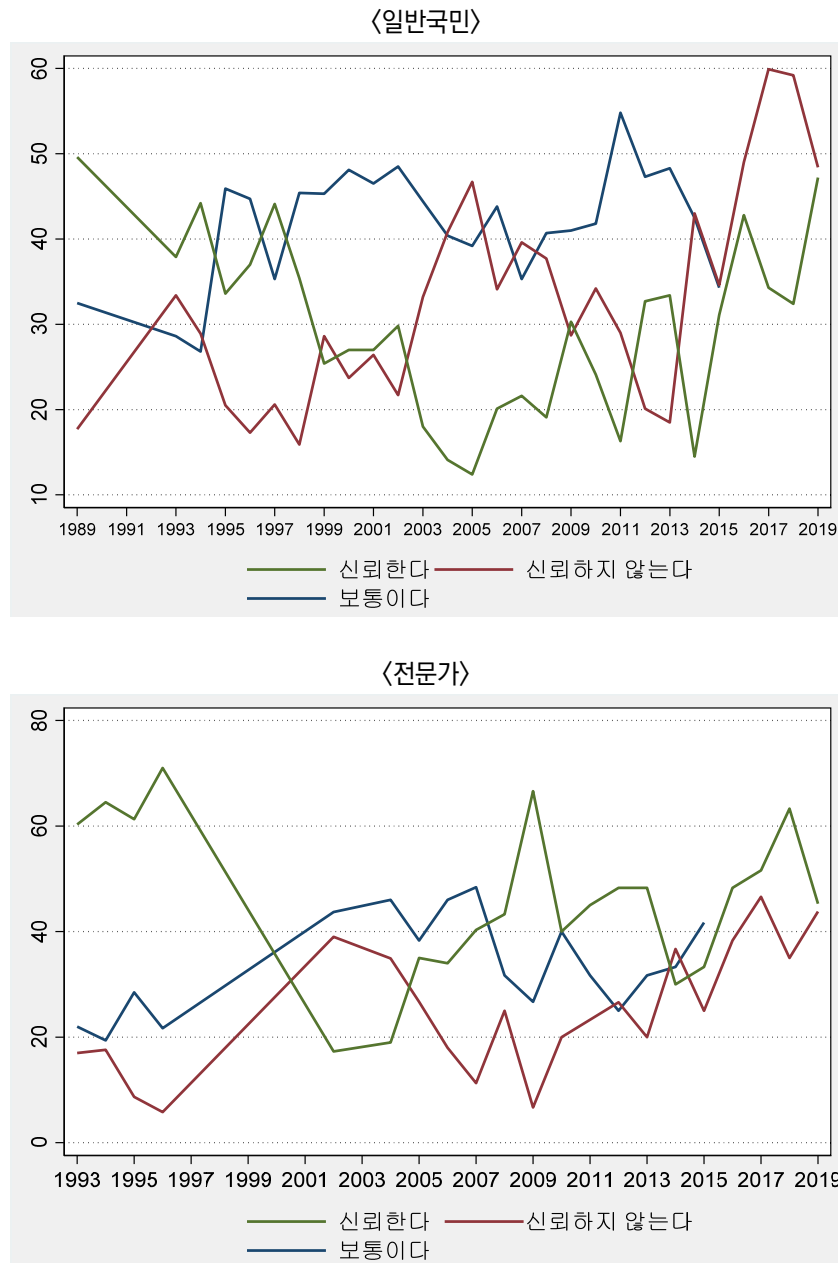
척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장되고 있다	10.0	26.7	23.3	23.4	45.0	43.8
보통이다	26.7	31.7	50.0	41.7	35.0	39.1
보장되고 있지 않다	63.4	41.6	26.7	35.0	20.0	17.2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된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관한 일반인들 인식의 연평균값은 벨 커브(Bell Curve)로 설명될 수 있음.
-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부터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다섯 종류의 보기에서 중앙에 위치한 보통이라는 평가가 42%에 달했음.
- ‘잘 보장되는 편이다’와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26.6%와 26.4%를 기록했고,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가 각각 2.1%와 3.0%로서 평균값의 그래프는 사실상 거의 완벽한 벨 커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2014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답변과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라는 답변의 응답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아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전문가들의 인식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가 ‘보통’이라고 답한 연평균 응답률이 37.4%에 달해 가장 높았고,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가 30.4%, ‘잘 보장되는 편’이다가 25.9%를 기록했다.
- 그러나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가들 조사에서 약 4% 가량 높게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4년 51.7%의 응답자가 군 내의 인권이 ‘별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2019년에는 17.2%에 그쳤고, 2014년 11.7%에 달하는 응답자가 ‘군 내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그렇게 답한 응답자가 단 한명도 없었음.

2.5.5.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198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1990년부터 1992년을 제외) 동안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본 문항에 대한 연평균 응답 역시 벨 커브로 표현됨. 조사기간의 연 평균치를 봤을 때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률을 41.7%에 달했고, ‘신뢰하는 편’이라는 답변과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답변이 각각 27.7%와 27.8%를 기록했다.
-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9년과 1993년, 1994년에만 ‘신뢰하는 편’이라는 답변이 보통이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았음.
- 나아가 2018년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14.4%에 달하였음.
- 2016년 이후 ‘신뢰하는 편’과 ‘신뢰하지 않는 편’에 대한 응답률이 모두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보통이다’ 척도를 문항에서 삭제했기 때문으로 보임.
 - 설문조사 중 척도가 변경되면 장기적 추세분석이 어려워지고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전문가들은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는 편인 것으로 드러났음.
- 국방부 발표에 대해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연 평균치는 42%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도 33.9%를 기록했다.
- 연도별 추세를 보면 조사가 시작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의 평균이 60.8%로서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인 38.9%보다 약 20% 높았음.



[그림 2-29]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단위: %)

2.5.6.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표 2-36〉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방부와 각군간 협력 부족	21.0	4.5	11.8	10.7	14.8	10.5	6.8	8.0	6.2
국민과의 소통부재	33.4	13.6	26.2	16.5	17.0	21.8	17.7	20.0	21.2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	36.6	16.9	14.5	11.0	12.7	13.4	10.3	9.8	26.7
무성의한 발표 방식의 문제	5.8	13.6	5.4	9.5	16.3	12.9	13.2	10.8	18.1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	50.4	40.7	52.1	39.0	40.5	51.5	50.2	27.0
잘 모르겠다	3.2	0.8	1.4	0.2	0.3	0.9	0.6	1.1	0.9

〈전문가〉

척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방부와 각군간 협력 부족	35.7	0.0	0.0	0.0	0.0	8.7	0.0	0.0	3.6
국민과의 소통부재	35.7	12.5	8.3	0.0	22.9	4.3	10.7	9.5	7.1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	28.6	6.3	8.3	4.5	11.4	26.1	7.1	14.3	14.3
무성의한 발표 방식의 문제	0.0	12.5	0.0	0.0	5.7	8.7	7.1	0.0	0.0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	68.8	83.3	95.5	60.0	52.2	75.0	76.2	75.0

-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먼저 이들의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그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3.9%로 가장 높았고 ‘국민과의 소통부재’가 20.8%,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가 16.9%로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를 보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라고 답한 응답률은 2011년에는 36.6%의 수준이었다가 2018년까지 점차 줄어들었으나 2019년에는 다시 26.7%로 반등했음.
-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된 전문가 조사에서는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73.2%를 기록했음.
- 동일 답변은 2014년에는 95.5%에 다다른 것으로 보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방부 발표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함.

2.5.7. 우리나라 군에 대한 신뢰도

-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군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평균적으로 군에 대한 신뢰도를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4.5%에 달했다.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신뢰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6.9%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27.1%)보다 더 많았음.
-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014년(33.5%), 2018년(44%), 2018년(39.2%)에 높은 편이었음. 최근 4년간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0-55% 수준이었음.
- 반면 전문가들 중에는 우리 군을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연평균 48.7%), 이를 ‘매우 신뢰한다’(9.3%)와 합친다면 60%에 가까운 수준임. 특히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률은 2010년 30%에서 점차 높아져 2019년에는 68.8%에 달했음.

〈표 2-37〉 우리나라 군에 대한 신뢰도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뢰한다	34.7	23.7	38.3	42.0	19.1	38.8	55.1	46.1	46.7	57.0
보통이다	45.1	52.8	48.9	45.3	43.1	31.7	-	-	-	-
신뢰하지 않는다	20.3	23.6	12.8	12.8	37.8	29.6	37.7	49.1	46.8	38.9
잘 모르겠다	-	-	-	-	-	-	7.3	4.9	6.6	4.1

〈전문가〉

척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뢰한다	45.0	45.0	38.3	68.3	51.6	55.0	58.3	66.7	76.6	75.0
보통이다	48.3	35.0	48.3	25.0	36.7	33.3	-	-	-	-
신뢰하지 않는다	6.7	18.4	13.3	6.7	11.7	11.7	35.0	31.7	21.7	20.3
잘 모르겠다	-	-	-	-	-	-	6.7	1.7	1.7	4.7

2.5.8. 우리나라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 2010년 이후 전 시기에 걸쳐 국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군대 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간부들의 도덕성과 (무)능력을 지적하고 있음.
- 이밖에도 민간인들은 ‘빈번한 사고·사건 발생’, 전문가들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군을 불신하는 주요 이유로 선택하였음.

○ 다만 ‘군대 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38〉 우리나라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군대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67.5	69.1	62.3	55.6	68.7	69.8	58.8	61.6	59.0	47.5
간부들의 도덕성	39.1	40.4	37.0	55.6	46.5	47.2	40.0	49.6	43.9	42.4
간부들의 능력 (전문성)	12.8	16.7	24.0	26.8	15.2	27.3	20.6	19.9	27.8	29.1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	42.8	51.1	46.8	51.0	64.8	59.8	51.1	51.6	46.9	44.3
언론보도에 대한 불신	20.6	-	-	-	-	-	-	-	-	-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미흡	14.4	20.9	24.7	22.2	13.9	16.2	13.5	11.2	22.6	25.5
병 인사관리 불공정성	25.1	19.1	13.6	18.3	12.8	11.0	22.3	23.1	19.1	34.3
병무 부조리(병역 기피 등)	28.0	30.1	37.7	37.3	31.9	28.4	34.3	26.5	32.3	33.6
예산 집행	14.0	16.7	20.1	14.4	10.6	10.0	23.9	24.3	21.6	23.1
군 복무과정에서의 경험 때문에	2.9	7.4	5.2	3.9	6.6	4.8	7.5	-	-	-
군의 폐쇄성	30.9	28.0	26.6	13.1	27.1	24.7	24.8	29.2	24.4	20.1
기타	1.6	0.4	0.0	0.7	0.4	0.2	0.2	0.8	0.0	0.0

〈전문가〉

척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군대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75.0	90.9	50.0	25.0	71.4	63.2	76.2	26.3	23.1	30.8
간부들의 도덕성	75.0	45.5	37.5	75.0	28.6	57.9	33.3	31.6	53.8	53.8
간부들의 능력 (전문성)	0.0	9.1	25.0	25.0	0.0	31.6	9.5	57.9	53.8	46.2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	0.0	18.2	62.5	25.0	28.6	21.1	52.4	10.5	0.0	15.4
언론에 대한 불신	0.0	-	-	-	-	-	-	-	-	-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미흡	0.0	27.3	0.0	25.0	14.3	5.3	14.3	5.3	7.7	15.4
병 인사관리 불공정성	50.0	9.1	50.0	0.0	42.9	0.0	9.5	10.5	15.4	15.4
병무 부조리(병역 기피 등)	0.0	45.5	50.0	25.0	14.3	15.8	14.3	5.3	7.7	7.7
예산 집행	50.0	54.5	12.5	75.0	28.6	63.2	28.6	63.2	61.5	76.9
군 복무과정에서의 경험 때문에	25.0	0.0	0.0	0.0	0.0	5.3	4.8	-	-	-
군의 폐쇄성	25.0	0.0	12.5	25.0	42.9	31.6	23.8	47.4	46.2	38.5
기타	0.0	0.0	0.0	0.0	0.0	0.0	0.0	5.3	7.7	0.0

2.5.9.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세금상승 의견

〈표 2-39〉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세금상승 의견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한다	39.6	26.4	27.1	28.4	28.7	34.6	40.0
그저 그렇다	42.1	44.3	40.8	49.6	47.7	43.7	42.2
반대한다	18.3	29.4	32.2	22.0	23.6	21.8	17.8

〈전문가〉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한다	50.0	48.3	53.3	28.3	61.7	73.4	59.4
그저 그렇다	33.3	30.0	35.0	41.7	28.3	23.3	34.4
반대하는 편이다	16.7	21.6	11.7	30.0	10.0	3.3	6.3

-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일반국민에게 세금상승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 연 평균적으로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44.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찬성하는 편이다’(29.8%)와 ‘반대하는 편이다’(19.2%)가 뒤따랐음.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7.4%를 기록했던 ‘매우 반대한다’가 2019년 들어 2.8%로 감소했음.
- 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달랐음.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세금상승에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 평균 41.5%로 가장 높았음.
- 연도별 추세를 보면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13.3%(2012)에서 6.3%(2019)로 절반가량 축소되었음.

2.5.10.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표 2-40〉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정하게 결정 된다	10.8	15.6	22.4	17.2	16.1	24.3	23.6	22.0	27.3	35.0	24.7	26.1	28.5	24.1	21.8	35.9
보통이다	31.9	-	-	-	37.2	-	-	-	-	-	-	-	-	-	-	-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48.5	66.9	66.0	66.3	35.9	58.2	54.1	65.7	62.0	57.8	64.5	67.3	60.8	69.4	64.6	53.8
잘 모르겠다	8.8	17.5	11.6	16.5	10.7	17.6	22.3	12.3	10.8	7.3	10.8	6.6	10.8	6.5	13.6	10.3

〈전문가〉

척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정하게 결정 된다	14.3	30.0	40.0	32.3	21.7	36.7	11.7	33.3	30.0	35.0	8.3	21.7	30.0	25.0	28.3	21.9
보통이다	34.9	-	-	-	46.7	-	-	-	-	-	-	-	-	-	-	-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46.0	58.4	38.0	53.2	28.4	48.3	45.0	56.6	50.0	53.3	91.7	73.3	65.0	65.0	68.3	62.5
잘 모르겠다	4.8	11.7	22.0	14.5	3.3	15.0	43.3	10.0	20.0	11.7	0.0	5.0	5.0	10.0	3.3	15.6

-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2008년 제외) 조사한 결과 연평균 44.6%의 일반 국민이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했음.
-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18.1%)를 합친다면 큰 틀에서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연평균 수치는 62.7%에 다다름. 별다른 연도별 추이는 관찰되지 않았음.
-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다르지 않았음. 전문가 조사도 일반인 조사와 같은 기간에 이뤄졌고 2008년을 제외했음. 전문가 집단에서도 연평균 47.1%가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했음.
- 특히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이다와 ‘매우 공정하게 결정된다’의 연평균 합계는 27.5%로서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다’와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의 연평균 합인 5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음.
- 즉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군 전력증강 사업이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임.
- 연도별 추이를 보면 특이하게도 2014년에는 ‘공정하게’ 또는 ‘매우 공정하게 결정된다.’의 합이 8.3%인 반면 공정하지 않게 또는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의 합이 91.7%였음. 조사가 시작된 이래 두 그룹 간의 가장 큰 편차를 보였음.

2.5.11.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표 2-41〉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효율적 이다	11.3	12.9	17.9	13.9	15.7	18.0	14.5	15.4	20.8	23.1	17.9	22.8	28.0	23.2	19.9	35.1
보통이다	33.9	35.8	38.9	29.3	39.6	50.1	43.6	39.8	47.5	47.4	-	-	-	-	-	-
효율적이지 않다	45.4	39.5	34.8	40.7	33.7	31.8	41.9	45.0	31.8	29.5	74.9	72.2	60.3	71.3	68.7	55.8
잘 모르겠다	9.5	11.9	8.4	16.1	11.0	0.1	-	-	-	-	7.3	5.1	11.8	5.6	11.4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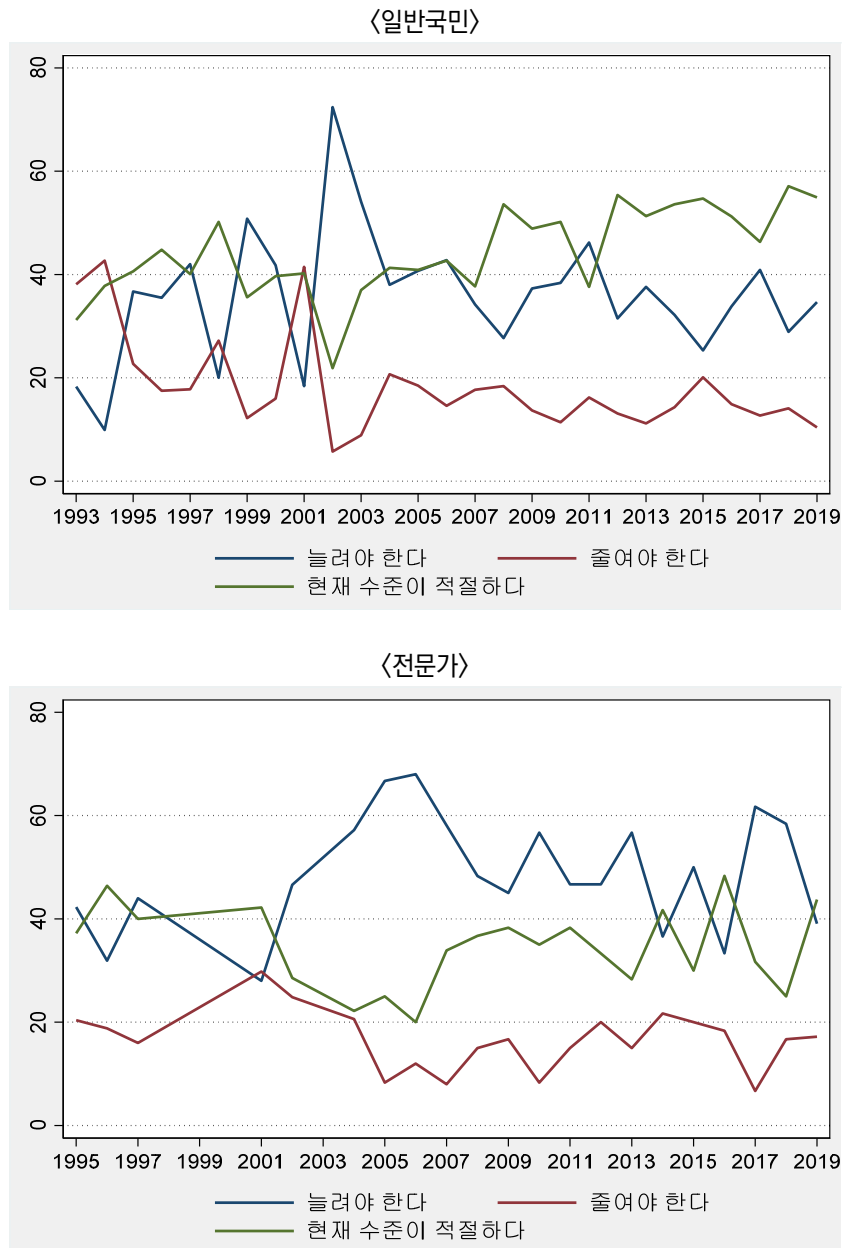
〈전문가〉

척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효율적 이다	4.8	16.7	12.0	21.0	25.0	23.3	16.7	13.3	16.7	28.4	10.0	20.0	30.0	15.0	21.7	26.6
보통이다	33.3	25.0	40.0	40.3	40.0	45.0	43.3	-	-	-	-	-	-	-	-	-
효율적이지 않다	53.9	45.0	40.0	27.4	33.3	31.7	38.3	83.3	78.3	70.0	71.7	70.0	58.3	78.3	71.6	62.5
잘 모르겠다	7.9	13.3	8.0	11.3	1.7	0.0	1.7	3.3	5.0	1.7	18.3	10.0	11.7	6.7	6.7	10.9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는 1998년에 시작되었으나 2003년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졌음.
- 나아가 ‘보통이다’의 척도가 2014년에 사라지고 ‘효율적이다’ 또는 ‘효율적이지 않다’로 보기가 제한됨.
- 따라서 ‘보통이다’의 보기를 제외하고 보면 2014년부터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효율적이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률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1.1%를 기록했음.
- 그 다음으로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응답률이 26%를 차지했으며 반대로 ‘효율적인 편이다’라는 응답도 23% 수준이었음.
- 연도별로 특별한 추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같은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로 관찰될 수 있음.
- 연 평균치를 보면 전문가들 역시 국방비 사용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43%에 달했고,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가 28.6%였음.
- 두 응답률을 합치면 71.6%로서 전문가 10명중 7명은 2011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국방비 사용에 관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음.
- 전문가들의 연도별 응답 추이를 살펴보면 효율적 이지 않은 편이라는 답변의 대한 응답률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음.

2.5.12. 한국의 국방비 수준

- 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의 국방비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일반인들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15년간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45.1%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가 30.6%,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가 14.4%를 기록했음.



[그림 2-30] 한국의 국방비 수준 (단위: %)

-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와 '대폭 줄여야 한다'는 각각 7.1%와 2.1%로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대체적으로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보다 높았으나 2002년을 보면 반대로 '현재보다 조금 늘려'

야한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의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음.

- 같은 질문에 대한 전문가 대상 의식 조사는 1995년 시작되어 2003년을 제외하고 2019년까지 실시되었음.
- 같은 시기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한국 국방비에 대한 입장은 일반인들과는 차이를 보였음.
-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34.6%였음.
- 전문가들의 응답을 보면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2005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6-2018년 간 없었음.

2.5.13.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표 2-42〉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첨단무기 체계 확보	50.9	33.7	41.3	43.1	36.1	44.2	42.7	36.2	35.8	33.1	27.4	23.3	33.8	38.5	34.3	23.8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13.1	18.2	13.7	13.1	16.6	18.0	27.5	22.9	25.3	26.2	27.4	29.3	27.0	22.5	26.2	29.1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	-	31.8	28.1	19.5	28.5	24.6	15.9	29.7	27.3	27.7	33.9	33.9	27.0	27.2	26.9	36.3
국방 연구/개발 (R&D)	-	8.0	7.1	14.3	9.1	13.0	13.8	10.7	11.2	12.8	10.9	13.3	12.2	11.1	12.4	10.8
기타	2.0	0.5	1.1	0.8	-	-	0.2	0.6	0.4	0.3	0.3	0.2	0.0	0.8	0.3	0.1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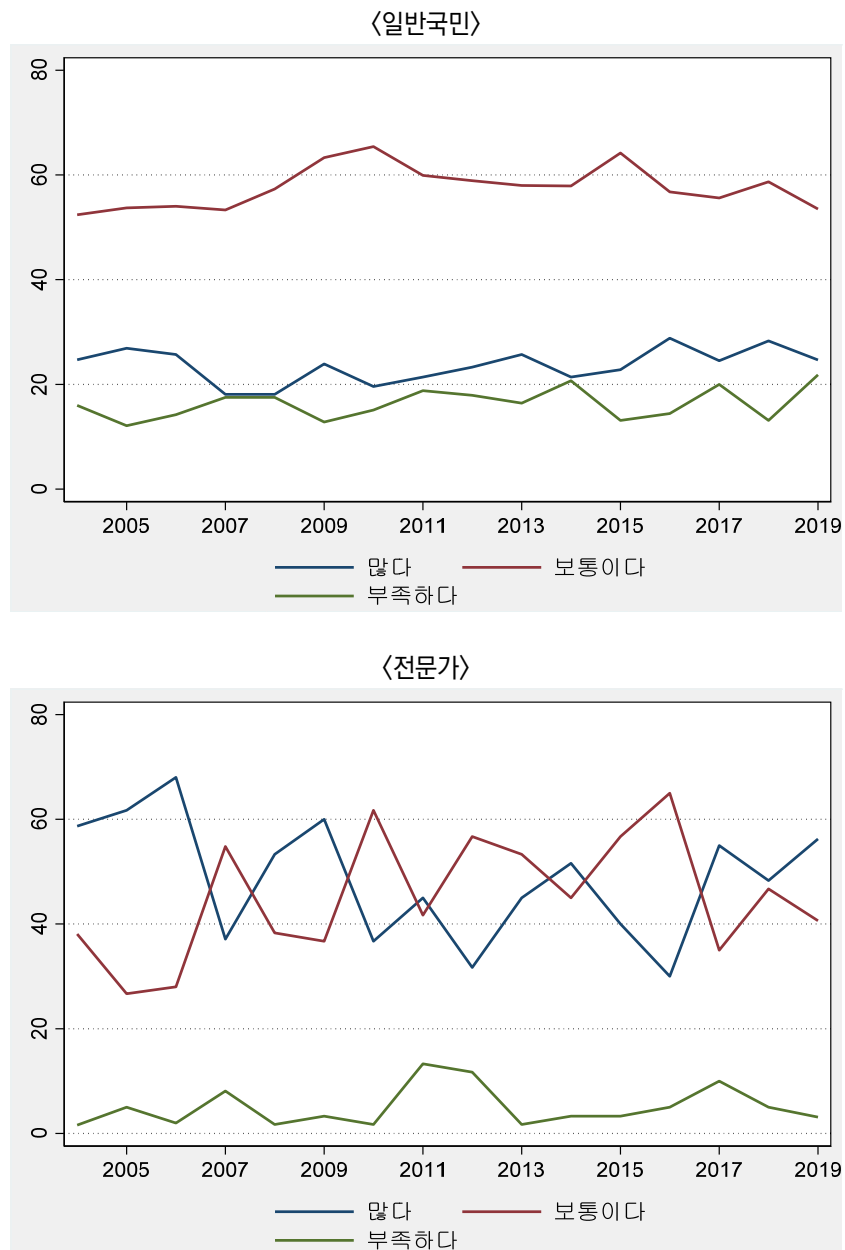
척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첨단무기 체계 확보	69.8	35.0	68.0	53.2	45.0	56.7	43.3	50.0	56.7	56.7	38.3	46.7	40.0	55.0	58.3	56.3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3.2	11.7	6.0	12.9	10.0	10.0	16.7	20.0	10.0	16.7	18.3	11.7	28.3	10.0	10.0	4.7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	9.5	18.3	4.0	8.1	15.0	10.0	8.3	10.0	8.3	11.7	13.3	20.0	15.0	6.7	10.0	14.1
국방 연구/개발 (R&D)	-	26.7	16.0	22.6	18.3	23.3	30.0	20.0	21.7	13.3	26.7	16.7	16.7	26.7	21.7	23.4
기타	11.1	1.7	0.0	0.0	-	0.0	1.7	0.0	3.3	1.7	3.3	5.0	0.0	1.7	0.0	1.6

-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되었으며 선택지는 총 다섯 개로서 '첨단무기 체계 확보',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 '국방 연구/개발', '기타'로 나뉨.
- 10년 기간 동안의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첨단무기 체계 확보'가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가 뒤따랐음.

- 연도별 추세를 본다면 ‘첨단무기 체계 확보’에 대한 비중은 점차 줄어든 반면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는 2019년까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 전문가들 응답의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첨단무기 체계 확보’를 선택한 비중이 50.7%에 달해 전문가들 2명 중 1명이 국방비 투자 분야로서 첨단무기 체계 확보를 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반인들의 평가와 다소 달랐던 점은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았고, 오히려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는 것임.
- ‘국방 연구/개발’을 선택한 전문가들의 응답 비중은 연평균 21.8%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2.5.14.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의견

-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동안 병력 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먼저 각 응답에 대한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평가가 57.7%로 가장 높았고, ‘많은 편이다’가 21.2%, ‘부족한 편이다’가 15%로 그 뒤를 따랐음.
- ‘보통’이라는 중간 값은 제외하고 나면 현재 병력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많았음. 특별한 연도별 추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반인들과는 달랐음. 먼저 ‘보통’이라고 평가가 45.3%로서 같은 보기를 선택한 일반인들의 비중보다 낮았고, ‘병력수가 많은 편’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41%로서 같은 보기를 선택한 일반인들 비중의 2배에 달했음.
- 특별한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현재 병력수가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응답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만 관찰되었음.



[그림 2-31]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의견 (단위: %)

2.5.15.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표 2-43〉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긍정적이다	58.0	57.8	51.3	58.3	56.7	54.1	53.6	50.4	49.9	57.6	52.0	55.3
별영향없다	34.3	36.3	41.0	33.1	37.0	37.3	35.5	41.0	39.3	36.0	41.5	39.0
부정적이다	5.7	5.8	7.8	8.6	6.3	8.8	10.9	8.7	10.8	6.4	6.6	5.8
잘모르겠다	2.0	-	-	-	-	-	-	-	-	-	-	-

〈전문가〉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긍정적이다	60.0	55.0	68.4	68.3	70.0	51.6	45.0	43.3	48.3	43.3	50.0	53.1
별영향없다	25.0	30.0	31.7	21.7	23.3	36.7	40.0	46.7	38.3	45.0	38.3	37.5
부정적이다	11.6	15.0	0.0	10.0	6.7	11.7	15.0	10.0	13.3	11.7	11.7	9.4
잘모르겠다	3.3	-	-	-	-	-	-	-	-	-	-	-

-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 평균치를 봤을 때,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47.9%, ‘별 영향 없다’가 37.6%로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큰 부침이 없었으며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은 매년 43%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 같은 기간에 실시된 전문가 조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9.7%였고 ‘별 영향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34.5%로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0%를 웃돌았으나 점차 하락하여 2019년에는 45.3%로 마무리 되었음.

2.5.16. 다양한 국제 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표 2-44〉 다양한 국제 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한다	65.9	70.3	58.0	68.7	76.7	61.8	62.3	61.4	61.0	66.6	60.1	63.8	68.7	68.1	57.3
그저 그렇다	24.3	22.6	25.1	24.5	20.0	31.4	29.8	32.9	33.3	28.2	33.3	31.3	26.5	26.2	36.3
반대한다	7.8	5.8	13.7	5.2	3.3	6.8	8.0	5.7	5.7	5.3	6.7	4.9	4.8	5.7	6.5
모름/무응답	-	-	-	-	0.0	-	-	-	0.0	0.0	0.0	0.0	0.0	0.0	0.0
잘모르겠다	2.0	1.3	3.3	1.6	-	-	-	-	-	-	-	-	-	-	-

〈전문가〉

척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한다	91.7	94.0	85.5	93.3	88.3	91.6	86.6	88.3	93.3	85.0	88.3	81.7	91.6	93.3	93.8
그저 그렇다	1.7	6.0	11.3	3.3	8.3	5.0	10.0	11.7	5.0	15.0	10.0	13.3	5.0	5.0	1.6
반대한다	5.0	0.0	1.6	6.6	1.7	1.7	3.4	0.0	1.7	0.0	1.7	5.0	3.4	1.7	4.7
모름/무응답	1.7	0.0	0.0	0.0	1.7	1.7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잘모르겠다	-	0.0	1.6	0.0	-	-	-	-	-	-	-	-	-	-	-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국제 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먼저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찬성’하는 편이 52.9%, ‘매우 찬성’이 11.8%를 기록했음. 반면 ‘반대’하는 편이 5.8%, ‘매우 반대’가 0.6%로 찬성과 반대의 연 평균치를 비교하면 찬성이 약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우 찬성’한다는 비중이 2018년까지는 매년 10% 이상을 기록했고 특히 2009년과 같은 경우 20%를 상회했으나 2019년에 들어 4%로 급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음.
-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국제 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일반인들과는 달리 전문가들의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찬성하거나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의 합이 90%에 다다름. 연도별 추이도 큰 부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문가들은 국제 평화 유지활동에 대해 대부분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임.

2.5.17. 해외파병에 대한 의견_국제평화 증진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

〈표 2-45〉 해외파병에 대한 의견: 국제평화 증진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	62.9	69.7	62.6	67.7	62.2	64.6	71.4	65.5	67.9	75.6	69.7	66.7
보통이다	25.8	23.7	28.0	25.2	29.3	26.8	22.8	26.8	24.1	21.3	24.3	25.8
반대	9.0	5.4	8.8	7.1	8.5	8.7	5.9	7.8	8.0	3.2	6.0	7.5
모르겠다	2.3	1.2	0.6	-	-	-	-	-	-	-	-	-

〈전문가〉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	86.7	88.3	81.7	90.0	88.3	90.0	88.4	91.6	81.7	90.0	90.0	84.4
보통이다	10.0	11.7	15.0	6.7	10.0	6.7	10.0	5.0	13.3	6.7	8.3	9.4
반대	1.7	0.0	3.3	3.4	1.7	3.3	1.7	3.4	5.0	3.3	1.7	6.3
모르겠다	1.7	-	-	-	-	-	-	-	-	-	-	-

- 국제평화 증진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에 대한 해외파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되었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51.1%의 일반인들은 이를 ‘찬성’했고, 16.2%는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 이에 비해 ‘반대’를 하거나 ‘매우 반대’를 하는 비중은 각각 6.1%와 1.1%를 차지하였음.
- 같은 기간 동안 관찰된 같은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찬성’을 하는 비중이 더 높았음.
- 연 평균치를 보면 ‘찬성’을 하거나 ‘매우 찬성’을 하는 전문가의 비중이 40.2%와 47.4%를 기록하여 90%에 다다르는 비중을 차지하였음.
- 반면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하는 입장은 약 3%에 지나지 않았음.

2.5.18. 해외파병에 대한 의견_국가이익 창출 기반을 강화

〈표 2-46〉 해외파병에 대한 의견: 국가이익 창출 기반을 강화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	61.0	53.8	59.1	55.1	56.5	56.9	57.4	61.3	57.8	64.6	51.8
보통이다	30.1	33.4	34.4	34.9	34.7	34.7	32.0	30.7	34.5	29.3	39.4
반대	7.1	11.9	6.5	10.1	8.9	8.5	10.6	8.1	7.8	6.1	8.8

〈전문가〉

척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	81.7	61.7	86.6	85.0	65.0	76.7	66.6	61.7	63.3	83.3	67.2
보통이다	15.0	35.0	10.0	10.0	25.0	11.7	28.3	21.7	30.0	15.0	28.1
반대	3.3	3.3	3.4	5.0	10.0	11.7	5.0	16.7	6.6	1.7	4.7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파병에 대한 의견 중 국가이익 창출 기반을 강화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음.
-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국가이익 창출 기반 강화 측면의 해외파병을 ‘찬성’하는 비율의 합계는 57.8%로서 ‘반대’하는 입장의 합인 8.6%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통’이라는 의견이 33.5%로 약 1/3인 가운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인들은 국가 이익 창출 기반 측면에서 해외파병을 찬성했음. 연도 간 큰 부침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같은 시기에 진행된 전문가 조사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음.
- 국가이익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파병을 찬성하는 연평균 비율은 ‘찬성’이 41.7%, ‘매우 찬성’이 30.9%로 ‘반대인 5.6%와 ‘매우 반대’인 0.9%의 합계 보다 10배 이상이 높았음.
- 다만 전문가 조사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인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를 보면 ‘매우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 2016년도에 10%밖에 되지 않아 연평균의 30%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음.

2.5.19. 해외파병에 대한 의견 한미동맹 강화

〈표 2-47〉 해외파병에 대한 의견: 한미동맹 강화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	45.1	51.8	47.5	53.2	51.2	50.9	51.4	54.4	58.8	51.6
보통이다	36.3	36.4	36.4	37.2	36.3	36.9	37.9	34.6	32.5	35.7
반대	17.9	11.7	16.1	9.7	12.6	12.1	10.7	11.1	8.8	12.8

〈전문가〉

척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	53.3	71.7	58.3	51.7	60.0	55.0	51.7	61.6	66.7	57.8
보통이다	36.7	20.0	25.0	30.0	23.3	38.3	40.0	28.3	25.0	32.8
반대	10.0	8.4	16.7	18.4	16.7	6.6	8.3	10.0	8.4	9.4

-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해외파병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되었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해외파병을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답변이 연평균 39.5%에 달했고 ‘보통’이라는 답변이 36%를 기록했다.
- 반면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1.5%에 그쳤다. 연도 간 응답결과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동시기에 조사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반인들보다 더욱 ‘찬성’을 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해외파병에 36.6%가 ‘찬성’을 했고, 22.2%가 ‘매우 찬성’을 하여 연평균 총 58.8%가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연평균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친 11.3%의 다섯 배가 넘는 수치임.
- 전문가 조사결과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와 2015년도 반대와 매우 반대의 비율이 낮은 반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음.

2.5.20. 해외파병에 대한 의견_해당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

〈표 2-48〉 해외파병에 대한 의견: 해당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	61.0	58.8	57.3	62.1	60.1	60.8	66.0	63.8	67.3	71.4	70.1	53.6
보통이다	28.8	29.2	32.3	32.4	33.8	31.3	27.5	28.7	25.3	24.4	25.8	38.2
반대	7.9	10.5	9.7	5.4	6.2	7.9	6.5	7.6	7.4	4.1	4.2	8.3

〈전문가〉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	68.3	76.7	76.7	75.0	91.7	65.0	80.0	80.0	73.3	73.3	78.3	82.8
보통이다	21.7	18.3	16.7	18.3	5.0	30.0	15.0	18.3	16.7	25.0	21.7	12.5
반대	8.3	5.0	5.0	6.7	3.3	5.0	5.0	1.7	10.0	1.7	0.0	4.7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해외파병에 대한 의견 중 해당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46.8%가 ‘찬성’하고 15.9%가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 약 30%에 가까운 29.8%가 ‘보통’이라고 대답했으며, ‘반대’를 하는 입장은 7.1%에 그쳤음.
- 대체적으로 해당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해외파병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 같은 기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45.4%의 비율이 ‘찬성’한다는 입장이었고 31.4%가 ‘매우 찬성’을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 즉 연평균 76.8%의 전문가들은 해당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해외파병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 이에 비해 ‘반대’를 하는 입장은 4.7%에 불과했으며 그 중에서도 2008년도와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한다는 입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2.5.21. 향후 국제 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

〈표 2-49〉 향후 국제 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확대 하여야 한다	0.0	0.0	25.0	38.4	43.4	33.7	0.0	44.7	39.4	39.3	33.5	35.2	36.3	36.7	34.4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48.2	53.4	50.4	52.1	50.5	56.6	-	48.6	53.5	52.6	58.1	55.0	58.2	56.2	59.6
축소해야 한다	0.0	0.0	0.0	7.4	5.8	8.6	0.0	6.3	6.5	7.3	7.9	9.3	5.3	6.4	5.8
참여할 필요가 없다	-	-	-	-	-	1.2	-	0.5	0.6	0.9	0.5	0.6	0.3	0.7	0.3
참여해야 한다	46.0	42.1	1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철수해야 한다	5.0	3.3	-	-	-	-	-	-	-	-	-	-	-	-	-

〈전문가〉

척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확대 하여야 한다	0.0	0.0	0.0	75.0	76.7	76.7	80.0	76.7	70.0	66.7	75.0	43.3	66.7	80.0	68.8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8.3	20.0	41.9	18.3	20.0	16.7	16.7	20.0	25.0	26.7	21.7	51.7	28.3	15.0	26.6
축소해야 한다	5.0	2.0	4.8	6.6	3.3	3.3	1.7	3.3	5.0	6.7	1.7	5.0	3.3	5.0	3.1
참여할 필요가 없다	-	-	-	-	-	0.0	0.0	0.0	0.0	0.0	1.7	0.0	1.7	0.0	1.6
참여해야 한다	70.0	80.0	58.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철수해야 한다	1.7	0.0	0.0	-	-	-	-	-	-	-	-	-	-	-	-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국제 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 평균치를 보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가 55.2%로 가장 높았고 ‘다소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1.5%를 기록했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0.5%에 그쳤음.
- 연도별 추이에서 연도 간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19년에 들어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년에 비해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같은 시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일반인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다소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연평균 47.4%로 가장 높았고 ‘현재 수준 유지’ 24.8%, ‘크게 확대’ 23%로 나타났음.
- 전문가들도 역시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연평균 0.5%에 그쳤음.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전년도 1/5 수준밖에 안되는 6.7%를 기록했고 당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51.7%를 기록했다.

2.5.22. 위험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표 2-50〉 위험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제사회 평화유지 기여를 위해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참여	14.4	20.0	21.6	21.8	18.8	20.3	21.3	15.3	12.8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	32.1	51.2	42.3	46.2	50.9	44.4	47.1	53.2	59.3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	26.0	23.5	30.3	25.7	25.6	27.5	27.3	26.9	24.8
위험한 지역에는 파병해서는 안된다	21.7	-	-	-	-	-	-	-	-
잘 모르겠다	5.8	5.3	5.8	6.4	4.7	7.8	4.4	4.6	3.3

〈전문가〉

척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제사회 평화유지 기여를 위해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참여	45.0	55.0	56.7	51.7	70.0	28.3	58.3	51.7	50.0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	13.3	16.7	18.3	30.0	20.0	40.0	28.3	33.3	23.4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	30.0	28.3	20.0	16.7	8.3	18.3	11.7	13.3	20.3
잘 모르겠다	10.0	-	-	-	-	-	-	-	-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위험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47.4%의 응답자는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6.4%는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고 주장했으며, 18.5%는 ‘국제사회 평화유지 기여를 위해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참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 즉 ‘안전한 지역’ 또는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해야 한다’는 연평균 입장이 73.8%로 ‘위험을 감수하고 파병을 해야 한다’는 연평균 응답 비율의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안전한 지역으로 파병해야 한다’는 비율이 2011년 32.1%에서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 2019년에 59.3%로 증가했음.
- 한편 같은 시기에 조사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냄.
- 특히 국제사회 평화유지 기여를 위해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파병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연평균 의견은 51.9%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일반인들의 조사에서 나타난 18.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임.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년에 들어 전년보다 20%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사회 평화유지 기여를 위해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파병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음.

2.5.23.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_테러

〈표 2-51〉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 테러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크다	43.3	32.8	45.3	42.2	47.1	42.8	39.3	47.6	47.1	57.3	35.1	24.5	44.9
보통이다	32.4	38.0	39.8	37.9	36.1	29.6	34.2	29.2	30.1	29.8	29.3	35.3	28.2
적다	21.4	28.0	14.9	19.9	16.9	27.6	26.6	23.2	22.9	12.9	35.6	40.3	26.9

〈전문가〉

척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크다	0.0	0.0	0.0	0.0	0.0	56.7	0.0	0.0	0.0	0.0	0.0	0.0	51.6
보통이다	-	-	-	-	-	30.0	-	-	-	-	-	-	29.7
적다	0.0	0.0	0.0	0.0	0.0	13.3	0.0	0.0	0.0	0.0	0.0	0.0	18.8

-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안보의식을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평균 34.2%의 국민들은 ‘테러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33.1%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20.9%는 ‘적다’고 답변했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 들어 테러의 위협이 ‘매우 크다’고 답한 일반인이 전년에 비해 1.4% 늘었으며 ‘크다’고 답한 일반인은 전년에 비해 9% 가까이 늘었음.
- 같은 질문에 대한 전문가 조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되었으며 테러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한 비율이 연평균 17.4%로서 일반인들의 동일한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추이에서 나타난 특이점은 2015년도 들어 테러의 위협이 ‘매우 적다’고 답한 비율이 6.7%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나아가 2012년, 2013년, 2016년, 2018년에는 ‘매우 적다’의 비율이 0%로 나타났음.

2.5.24.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_해적, 마약, 조직범죄

〈표 2- 52〉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 해적, 마약, 조직범죄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크다	45.7	44.1	46.6	47.4	29.2	31.7	36.3
보통이다	34.9	33.9	30.3	35.7	37.3	33.3	38.5
적다	19.4	22.0	23.2	16.9	33.5	35.1	25.2

〈전문가〉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크다	55.0	56.6	38.3	43.3	43.3	51.7	56.3
보통이다	33.3	28.3	48.3	33.3	38.3	33.3	31.3
적다	11.7	15.0	13.3	23.3	18.3	15.0	12.5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_해적, 마약, 조직범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해적, 마약, 조직범죄에 대한 위협이 ‘크다’고 한 비율은 31.7%로, ‘보통’은 34.6%로 나타났다.
- 위협이 큰 것에 가까운 벨 커브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 평균치는 일반인들이 해적, 마약, 조직범죄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기 보다는 크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 연도별 추이를 보면 ‘매우 크다’는 응답에 부침현상이 나타남. 2013년 위협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일반인들이 12.5%로 기록된 반면 2017년도에는 이에 절반도 안 되는 4.9%만이 ‘매우 크다’고 응답했음.
- 같은 시기에 조사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연평균 ‘크다’ 또는 ‘매우 크다’의 합이 49.6%로 해적, 마약, 조직범죄에 대한 위협을 일반인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됨.
- 반면 ‘적다’와 ‘매우 적다’의 합은 16.6%로서 같은 보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답변의 합(25.4%)보다 낮은 양상을 나타냈음.
- 연도별 추이를 보면 예년에 비해 2015년에는 해적, 마약, 조직범죄의 위협이 ‘적다’고 한 응답률이 8.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25.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_자연재해

〈표 2-53〉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 자연재해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크다	46.9	42.5	44.7	50.2	43.1	48.3	42.3
보통이다	39.7	38.3	39.1	39.7	43.4	37.8	39.8
적다	13.4	19.3	16.3	10.2	13.5	13.9	17.9

〈전문가〉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크다	48.3	56.7	50.0	43.3	50.0	58.4	73.4
보통이다	41.7	28.3	43.3	45.0	40.0	28.3	23.4
적다	10.0	15.0	6.6	11.7	10.0	13.3	3.1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_자연재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자연재해를 비군사적 위협으로 ‘크게’ 생각하는 연평균 응답률은 35.2%에 달했고,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은 10.7%를 기록하여 총 45.9%의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자연재해의 비군사적 위협이 크다고 판단했음.
- 반면 본 위협이 ‘적다’거나 ‘매우 적다’고 판단한 연평균 응답률은 15%에 그쳤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 간 큰 부침현상은 없었으나 2019년에 들어 ‘매우 크다’고 답한 응답률이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7.1%를 기록했음.
- 동기간에 실시된 전문가 조사결과를 보면 자연재해 위협이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한 연평균 응답률은 55.1%에 달해 전문가 10명 중 5명 이상이 자연재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평균 추이를 보면 2019년에 들어 자연재해 위협이 ‘크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이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59.4%에 달했음.

2.5.26.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_원전 사고

〈표 2-54〉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 원전 사고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크다	49.9	45.7	44.8	54.2	38.7	38.2	43.4
보통이다	36.1	34.8	37.6	33.4	42.1	34.8	37.8
적다	14.0	19.6	17.7	12.4	19.2	27.1	18.8

〈전문가〉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크다	70.0	65.0	48.4	58.3	31.7	41.7	51.6
보통이다	18.3	26.7	38.3	31.7	40.0	23.3	23.4
적다	11.6	8.3	13.4	10.0	28.3	35.0	25.0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_원전 사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연평균 수치를 살펴보면 원전사고의 위협을 ‘크거나’ ‘매우 크다’고 한 응답자가 45%에 달해 ‘적거나’ ‘매우 적다’고 생각한 응답자(19.1%)보다 두 배 이상 많았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에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6.3%와 10.2%로 10% 이상을 상회함.
- 같은 시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음.
- 원전사고의 위협이 ‘크거나’ ‘매우 크다’고 응답한 연평균 응답자의 비율이 52.9%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적거나’ ‘매우 적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은 19.6%에 그쳤음.
- 전문가 10명 중 5명 이상이 원전사고의 위협이 크다고 생각한 반면 2명만이 ‘적다’고 생각한 것으로 집계됨.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원전사고의 위협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를 상회함.

2.5.27.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_사이버 테러

〈표 2-55〉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 사이버 테러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크다	68.0	59.1	59.0	72.2	56.4	59.7	48.7
보통이다	21.3	25.8	27.5	20.0	31.2	24.5	35.7
적다	10.8	15.2	13.5	7.8	12.4	15.7	15.7

〈전문가〉

척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크다	86.7	91.7	88.4	85.0	85.0	90.0	90.6
보통이다	10.0	6.7	11.7	11.7	13.3	8.3	7.8
적다	3.3	1.7	0.0	3.3	1.7	1.7	1.6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9년에 비군사적 위협의 피해 가능성_사이버 테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이버 테러에 대해 연평균 39.3%의 응답자가 ‘크다’고 답했고, 20.8%의 응답자가 ‘매우 크다’고 답했음.
-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사이버 테러의 위협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임.
- 반면 사이버 테러의 위협이 ‘적거나’ ‘매우 적다’고 한 응답자의 합은 연평균 13.3%에 그쳤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사이버 테러의 위협이 ‘매우 크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16년으로서 약 30.3%를 차지하였음.
- 동시기 진행된 전문가 조사에서는 연평균 88.2%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사이버 테러의 위협이 ‘크거나’ ‘매우 크다’고 응답했음.
- 이는 일반인들보다 약 30%가 높은 수치이다. 반면 ‘보통’이라고 생각한 응답률이 10% 내였고, ‘적다’고 생각한 전문가들은 약 2%에 그쳤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큰 부침은 없었으나 2019년에 들어 사이버 테러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한 비율이 90.6%를 기록하여 2014년 이후 처음으로 90%를 초과했음.

2.5.28.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표 2-56〉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한다	98.0	95.2	90.0	85.0	95.0	91.6	100.0	72.4	73.1	68.0	72.6	78.8	80.1	70.8
보통이다	0.0	3.2	5.0	11.7	5.0	6.7	0.0	26.0	24.2	28.5	23.7	19.6	17.8	27.1
반대한다	2.0	1.6	5.0	3.3	0.0	1.7	0.0	1.7	2.7	3.5	3.8	1.7	2.2	2.2

〈전문가〉

척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찬성한다	98.0	95.2	90.0	85.0	95.0	91.6	100.0	85.0	93.3	91.6	78.3	85.0	95.0	96.9
보통이다	0.0	3.2	5.0	11.7	5.0	6.7	0.0	11.7	5.0	3.3	16.7	10.0	3.3	3.1
반대한다	2.0	1.6	5.0	3.3	0.0	1.7	0.0	3.3	1.7	5.0	5.0	5.0	1.7	0.0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연 평균치를 보면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를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9%,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은 18.3%로 드러남.
- 이에 비해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률의 합은 3%에 그쳤음. 특별한 연도별 추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동일한 시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일반인들의 조사결과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음.
- 먼저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거나 ‘매우 찬성’한다는 연평균 응답 비율의 합계가 90.5%로서 일반인들의 비해 약 15% 이상이 높았음.
- 즉 전문가들 10명 중 9명이 비군사적 안보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임.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과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한다는 응답률이 100%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2.5.29. 안보 및 국방관련 소식 접촉 경로

〈표 2-57〉 안보 및 국방관련 소식 접촉 경로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2.4	1.4	1.8	3.8	6.4	4.8	2.7	3.7	1.8
인터넷 포털 사이트	17.5	18.3	15.9	21.9	17.5	25.2	28.8	34.0	41.5
일간신문	10.9	10.2	7.9	5.5	6.5	6.7	2.3	4.4	2.8
국방일보	2.0	2.0	3.2	1.3	4.0	3.7	2.9	1.0	0.5
TV 방송	63.8	66.0	70.0	61.8	60.8	53.6	58.3	49.2	44.4
국방TV (위성TV 채널 153)	1.7	1.3	0.3	1.4	1.3	1.3	0.5	1.3	0.8
뉴미디어	0.8	0.3	0.4	-	-	-	-	-	-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	-	-	-	0.9	0.7	1.2	2.0	1.9	1.5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	-	-	2.6	1.3	1.8	1.8	3.6	5.1
홍보 행사장 / 사진전 등 이벤트	-	-	-	0.2	0.9	0.7	0.3	0.4	0.8
기타 (관련 책자, 영상 등)	0.8	0.7	0.5	0.7	0.6	1.2	0.5	0.6	0.8

〈전문가〉

척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5.0	6.7	1.7	10.0	8.3	3.3	1.7	3.3	6.3
인터넷 포털 사이트	23.3	28.3	28.3	28.3	21.7	33.3	38.3	36.7	45.3
일간신문	30.0	51.7	41.7	40.0	33.3	15.0	35.0	33.3	25.0
국방일보	5.0	3.3	5.0	3.3	6.7	3.3	5.0	3.3	0.0
TV 방송	-	-	15.0	10.0	23.3	36.7	15.0	15.0	14.1
국방TV (위성TV 채널 153)	6.7	0.0	0.0	0.0	0.0	0.0	0.0	1.7	0.0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	-	-	-	1.7	0.0	1.7	0.0	0.0	3.1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	-	-	3.3	1.7	1.7	1.7	1.7	1.6
홍보 행사장/사진전 등 이벤트	-	-	-	0.0	0.0	3.3	0.0	0.0	0.0
뉴미디어	5.0	0.0	1.7	-	-	-	-	-	-
기타 (관련 책자, 영상 등)	6.7	3.3	6.7	3.3	5.0	1.7	3.3	5.0	4.7
공중파방송	18.3	6.7	-	-	-	-	-	-	-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보 및 국방관련 소식 접촉 경로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총 10개로 이뤄진 보기에서 일반인들이 'TV 방송'을 선택한 비율은 연평균 54.7%로 나타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선택한 비율은 연평균 28.1%로 나타났음.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일보', '정부부처', '국방TV'를 통해 국방관련 소식을 접촉한 연평균 비율은 7.6%에 그쳤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TV 방송'을 통해 소식을 접촉한 비율이 2014년 61.8%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44.4%를 기록했다.
- 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접촉은 2014년 21.9%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41.5%에 달했음.
- 같은 기간 조사된 전문가들의 국방관련 소식 접촉 경로는 일반인들과는 괴리가 있었음.
- 먼저 전문가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연평균 33.9%) 가장 많은 국방관련 소식을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TV 방송'을 통해서도 연평균 19%만이 소식을 접촉했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소식 접촉은 2014년 28.3%에서 점차 증가해 2019년 45.3%를 기록했고, '일간신문'을 통한 소식 접촉은 2014년 40%에서 점차 감소해 2019년 25%에 그쳤음.

2.5.30.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_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표 2-58〉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매일	1.2	1.1	1.1	1.6	1.3	0.8	1.4	0.6	1.0	0.5	0.5	0.1
1주에 1회 이상	3.4	5.7	3.8	3.8	2.1	3.3	4.4	1.7	3.3	3.3	2.4	4.2
1달에 1회 이상	6.2	9.4	8.5	5.9	6.3	5.8	5.6	5.5	7.4	8.5	5.3	6.5
1년에 1회 이상	15.7	14.5	13.8	13.0	15.5	16.8	13.3	14.8	19.3	12.8	13.3	14.4
본 적이 없다	73.4	69.4	72.8	75.8	74.9	73.2	75.3	77.5	69.1	75.0	78.5	74.8

〈전문가〉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매일	5.0	5.0	5.0	0.0	0.0	5.0	5.0	3.3	3.3	6.7	5.0	7.8
1주에 1회 이상	18.3	8.3	5.0	16.7	10.0	11.7	18.3	15.0	8.3	15.0	13.3	17.2
1달에 1회 이상	25.0	28.3	16.7	30.0	31.7	30.0	25.0	16.7	15.0	18.3	26.7	25.0
1년에 1회 이상	21.7	30.0	20.0	25.0	40.0	23.3	21.7	35.0	25.0	35.0	31.7	23.4
본 적이 없다	28.3	28.3	53.3	28.3	18.3	30.0	30.0	30.0	48.3	25.0	23.3	26.6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_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먼저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연평균 74.2%를 기록했으며 10년간 비슷한 추이를 보였음.
- ‘1년에 1회 이상 본다’는 응답률이 연평균 14.7%를 기록했으며 ‘거의 매일 본다’는 응답은 연평균 1%가 되지 않았음.
- 같은 시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역시 ‘본 적이 없다’는 응답률이 31%로 가장 높았으나, ‘1년에 1회 이상 본다’는 연평균 응답률이 28.2%, ‘1달에 1회 이상’이 23.9%, ‘1주에 1회 이상’이 12.6%로 일반인들보다는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거의 매일 본다’는 연평균 응답자가 4.2%로 나타났음.
- 연도별 특별한 추이는 감지되지 않았음.

2.5.31.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_국방일보

〈표 2-59〉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 국방일보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매일	0.7	0.7	0.8	1.1	0.2	0.8	0.9	0.4	0.4	0.6	0.6	0.3
1주에 1회 이상	1.5	1.8	1.6	2.9	1.1	2.2	1.9	0.8	1.8	1.6	0.8	1.8
1달에 1회 이상	3.4	4.2	4.8	4.8	2.3	4.4	3.8	2.5	4.0	3.3	3.3	6.3
1년에 1회 이상	7.3	7.9	8.2	8.6	9.5	9.3	6.9	11.3	10.3	8.2	6.3	9.0
본 적이 없다	87.1	85.3	84.7	82.7	87.0	83.3	86.5	85.0	83.5	86.3	89.1	82.5

〈전문가〉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매일	3.3	6.7	3.3	3.3	3.3	6.7	5.0	5.0	1.7	10.0	6.7	6.3
1주에 1회 이상	3.3	3.3	3.3	5.0	3.3	3.3	6.7	6.7	10.0	5.0	3.3	4.7
1달에 1회 이상	10.0	11.7	6.7	5.0	15.0	10.0	15.0	10.0	6.7	11.7	16.7	20.3
1년에 1회 이상	21.7	15.0	36.7	30.0	20.0	23.3	23.3	18.3	18.3	25.0	26.7	25.0
본 적이 없다	61.7	61.7	50.0	56.7	58.3	56.7	50.0	60.0	63.3	48.3	46.7	43.8

- 국방일보를 통한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에 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연평균 수치를 보면 조사기간 내 85.1%의 일반인들은 국방일보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음.

- ‘1년에 1회 이상 본다’는 응답자의 연평균 비율은 8.8%, ‘1달에 1회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에 그쳤음.
- 특별한 연도별 추이는 관찰되지 않았음.
- 같은 기간 조사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일반인들과 차이를 보였음.
- 국방일보를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연평균 비율은 53.4%에 달했으나 ‘1년에 1회 이상 이라도 본다’는 응답 역시 연평균 46.6%에 달했음. 특히 ‘거의 매일 본다’는 응답자와 1주에 1회 이상 본다는 응답자의 연평균 합계가 10%를 선회했다.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전까지 50% 이상의 응답자가 국방일보를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2017년 들어 이는 40%대로 떨어졌음.

2.5.32.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_국방FM(라디오)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_국방FM(라디오)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평균 79.7%의 응답자가 국방FM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12.9%가 ‘1년에 1회 이상 듣는다’고 했음. ‘거의 매일 듣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0.5%에 그쳤음.
- 연도별 추이에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표 2-60〉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 국방FM(라디오)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매일	0.5	0.7	0.3	1.0	0.5	0.8	0.8	0.4	0.8	0.6	0.3	0.0
1주에 1회 이상	2.0	2.3	2.4	2.8	1.3	2.2	2.5	0.8	2.3	0.8	0.8	2.4
1달에 1회 이상	3.9	6.4	5.8	6.6	3.9	5.7	5.6	3.3	6.1	3.6	3.8	5.5
1년에 1회 이상	13.4	11.3	14.3	16.6	13.3	14.6	9.3	14.7	14.2	10.0	11.3	10.9
본 적이 없다	80.2	79.3	77.3	73.0	80.9	76.8	81.8	80.9	76.8	85.0	83.8	81.2

〈전문가〉

척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매일	1.7	1.7	0.0	1.7	0.0	1.7	0.0	1.7	3.3	1.7	0.0	0.0
1주에 1회 이상	0.0	1.7	0.0	1.7	3.3	5.0	1.7	5.0	5.0	5.0	1.7	1.6
1달에 1회 이상	13.3	16.7	13.3	15.0	16.7	11.7	10.0	11.7	8.3	10.0	11.7	10.9
1년에 1회 이상	20.0	30.0	23.3	28.3	26.7	30.0	18.3	15.0	28.3	16.7	18.3	20.3
본 적이 없다	63.3	48.3	63.3	53.3	53.3	51.7	70.0	66.7	55.0	66.7	68.3	67.2

- 같은 시기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른 점이 없었음.
- 연평균 61.5%의 전문가는 국방FM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1년에 1회 이상’ 듣는 응답자가 22.5%, ‘1달에 1회 이상’ 듣는 응답자가 11.9%였음.
- 특별한 연도별 추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일반인들보다 국방FM을 듣는 더 듣는 경향이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2.5.33.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_국방TV(텔레비전)

〈표 2-61〉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 국방TV(텔레비전)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매일	-	0.7	1.1	0.8	1.0	0.5	1.1	1.3	0.3	0.6	0.8	0.4	0.0
1주에 1회 이상	-	2.5	3.4	3.4	4.0	2.0	4.0	3.8	1.1	1.8	1.7	2.2	3.4
1달에 1회 이상	-	5.9	9.3	8.1	8.3	6.2	8.3	7.1	7.9	10.4	4.8	4.5	7.3
1년에 1회 이상	-	22.8	14.7	21.5	19.2	20.9	23.6	17.5	23.4	23.3	15.1	14.1	14.3
본 적이 없다	-	68.1	71.5	66.3	67.5	70.4	63.1	70.4	67.3	63.9	77.7	78.8	74.9

〈전문가〉

척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매일	1.6	1.7	1.7	0.0	0.0	0.0	1.7	0.0	1.7	3.3	0.0	0.0	0.0
1주에 1회 이상	22.6	1.7	5.0	1.7	6.7	1.7	6.7	0.0	5.0	1.7	8.3	1.7	4.7
1달에 1회 이상	0.0	8.3	18.3	6.7	18.3	11.7	11.7	10.0	15.0	6.7	6.7	11.7	17.2
1년에 1회 이상	1.6	26.7	28.3	21.7	25.0	25.0	26.7	23.3	23.3	35.0	28.3	30.0	23.4
본 적이 없다	74.2	61.7	45.0	70.0	50.0	61.7	53.3	66.7	55.0	53.3	56.7	56.7	54.7
모름/무응답	-	-	1.7	-	-	-	-	-	-	-	-	-	-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_국방TV(텔레비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연평균 추이를 살펴보면 70%의 응답자가 국방TV를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년에 1회 이상’ 보는 응답자는 19.3%에 불과했음. ‘거의 매일 본다’는 응답자는 0.7%였음.
- 연도별 추이를 보면 ‘1년에 1회 이상’ 국방TV를 보는 일반인 응답자가 2010년에는 21.5%였는데 2019년 14.3%로 하락했음.

- 같은 기간 조사된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연평균 추이를 살펴보면 ‘거의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57.8%였으며 ‘1년에 1회 이상’은 26.2%, ‘1달에 1회 이상’은 11.6%에 그쳤음.
- 다만 연도별 추이에서는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2010년 70%에 육박한 가운데 2019년에는 54.7%에 그쳤음.

2.5.34.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_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표 2-62〉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매일	0.6	0.8	1.0	1.5	0.8	0.8
1주에 1회 이상	2.8	2.0	3.3	2.7	1.7	3.8
1달에 1회 이상	7.4	5.5	11.1	6.9	6.0	8.1
1년에 1회 이상	14.3	18.6	19.8	14.8	15.7	17.2
본 적이 없다	74.9	73.2	64.8	74.2	75.8	70.2

〈전문가〉

척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매일	3.3	5.0	1.7	1.7	3.3	3.1
1주에 1회 이상	11.7	6.7	6.7	11.7	10.0	12.5
1달에 1회 이상	18.3	13.3	13.3	1.7	18.3	17.2
1년에 1회 이상	21.7	25.0	28.3	26.7	28.3	20.3
본 적이 없다	45.0	50.0	50.0	58.3	40.0	46.9

-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홍보 매체 접촉 빈도_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대한 의견의 종합은 다음과 같음.
- 연평균 수치를 보면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72.2%에 달했으며 ‘거의 매일 본다’는 비율은 0.9%에 그쳤음.
- 한편 같은 기간 전문가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50%가 안 되는 비율의 응답자가 ‘본 적이 없다’(48.4%)고 답했고, 50% 이상의 응답자들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국방관련 기관의 뉴미디어를 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5.35.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일반시민은 TV 광고, 전문가는 언론사 보도를 추천하고 있음.
- 일반인은 TV 광고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광고와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음.
- 전문가도 언론사 보도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광고와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음.
- 이 결과는 국방이슈 및 홍보대상(전문가 또는 일반인)에 따라 홍보 방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냄.

〈표 2-63〉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V 광고	61.6	67.9	64.4	66.8	60.6	32.8
신문, 잡지 등 인쇄광고	17.9	23.8	19.3	18.8	11.3	6.9
라디오 광고	4.6	9.8	6.6	5.5	8.2	3.1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광고	25.4	25.3	30.7	27.8	40.0	20.9
국방부 및 군 운영 온라인 매체	10.1	10.2	8.4	7.3	9.1	6.0
국방부 및 군 운영 홍보매체	8.3	4.0	6.6	4.9	4.0	3.9
TV 프로그램	44.3	37.7	36.3	40.8	42.9	18.2
공청회 등 설명회	8.2	2.6	5.9	7.8	3.3	0.8
언론사 보도	16.9	15.6	15.8	16.1	18.4	6.3
옥외 홍보물	2.7	3.1	5.5	2.1	1.5	1.2
기타	0.0	0.1	0.0	0.2	0.0	0.0

〈전문가〉

척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V 광고	26.7	26.7	41.7	16.7	21.7	10.9
신문, 잡지 등 인쇄광고	11.7	6.7	20.0	10.0	6.7	6.3
라디오 광고	1.7	1.7	6.7	0.0	1.7	0.0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광고	33.3	45.0	36.7	35.0	31.7	21.9
국방부 및 군 운영 온라인 매체	8.3	10.0	6.7	11.7	16.7	17.2
국방부 및 군 운영 홍보매체	10.0	13.3	3.3	11.7	6.7	3.1
TV 프로그램	38.3	28.3	33.3	30.0	31.7	15.6
공청회 등 설명회	26.7	8.3	18.3	11.7	8.3	4.7
언론사 보도	40.0	55.0	21.7	63.3	70.0	20.3
옥외 홍보물	0.0	0.0	6.7	1.7	3.3	0.0
기타	3.3	5.0	0.0	1.7	0.0	0.0

2.5.36. 현재 예비군 제도 중요성

〈표 2-64〉 현재 예비군 제도 중요성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9
중요하다	62.9
보통이다	29.7
중요하지 않다	7.4

〈전문가〉

척도	2019
중요하다	51.6
보통이다	29.7
중요하지 않다	18.8

- 2019년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는 예비군 제도가 ‘중요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4.8%,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9.7%로 나타났다.
- 반면 ‘중요하지 않다’거나 ‘매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4%에 불과했음.
- 한편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음.
- 예비군 제도가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6%였음.
- 일반인들에 비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예비군 제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음.

2.5.37. 향후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시간 수준

〈표 2-65〉 향후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시간 수준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9
연간 2박 3일(현행)	51.5
연간 3박 4일	26.2
연간 4박 5일	16.3
연간 2주	4.8
연간 3주 이상	1.3

〈전문가〉

척도	2019
연간 2박 3일(현행)	59.4
연간 3박 4일	14.1
연간 4박 5일	15.6
연간 2주	9.4
연간 3주 이상	1.6

- 2019년 조사한 향후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시간 수준에 대해 51.5%의 일반국민들은 현행 즉 ‘연간 2박3일’이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26.2%는 ‘3박 4일’, 16.3%는 ‘4박 5일’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음.
- ‘연간 3주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는 1.3%에 그쳤다. 전문가의 조사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음.
- ‘연간 2박3일’(현행)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59.4%였다. 다만 ‘연간 4박5일’을 택한 응답자가 연간 3박4일을 택한 응답자보다 1.5%가량 많았음.

2.5.38. 「국방개혁 2.0」 인지도

〈표 2-66〉 「국방개혁 2.0」 인지도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9
알고 있다	30.6
그저 그렇다	36.1
모르고 있다	33.3

〈전문가〉

척도	2019
알고 있다	32.8
그저 그렇다	42.2
모르고 있다	25.0

- 2019년 「국방개혁 2.0」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들의 0.8%가 ‘매우 잘 알고 있다’, 29.8%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6.1%가 ‘그저 그렇다’, 24%가 ‘잘 모르고 있다’, 9.3%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음.

○ 1/3 이상이 「국방개혁 2.0」 인지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음.

○ 전문가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음.

○ 국방개혁 2.0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32.8%로 일반인들의 수준과 비슷했으나,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42.2%로 일반인들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음.

2.5.39.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의견

〈표 2-67〉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의견 (단위: %)

〈일반국민〉

척도	2019
잘 추진되고 있다	25.7
보통이다	60.3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14.0

〈전문가〉

척도	2019
잘 추진되고 있다	18.8
보통이다	70.3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10.9

○ 2019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보면 ‘잘 추진되고 있다’ 또는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가 각각 24.9%, 0.8%로 나타났고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거나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의 합은 14%로 나타났음.

○ 주목할 만 한 점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3%로 나타났음은 것임.

○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일반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으나 특이점은 전문가들 중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은 70.3%였다는 것임.

2.5.40. 소결

-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주제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대다수의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은 국민개병제에 대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와 일반인들 모두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했으며, 군 내 인권 보장정도에 대해서도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편이며, 그 이유는 투명성에 대한 문제부터 소통부재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 있음.
- 국방비 사용에 대한 평가 역시 호의적이지 않았음.
-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첨단무기 체계 확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우리 군의 해외파병에 대해 과반수의 일반 국민들은 국제평화 증진, 국가이익 창출 기반 강화라는 명목 하에 찬성하고 있음.
- 국방홍보 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접촉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 국방 홍보 매체와 발표에 대한 투명성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제3장 안보의식 결정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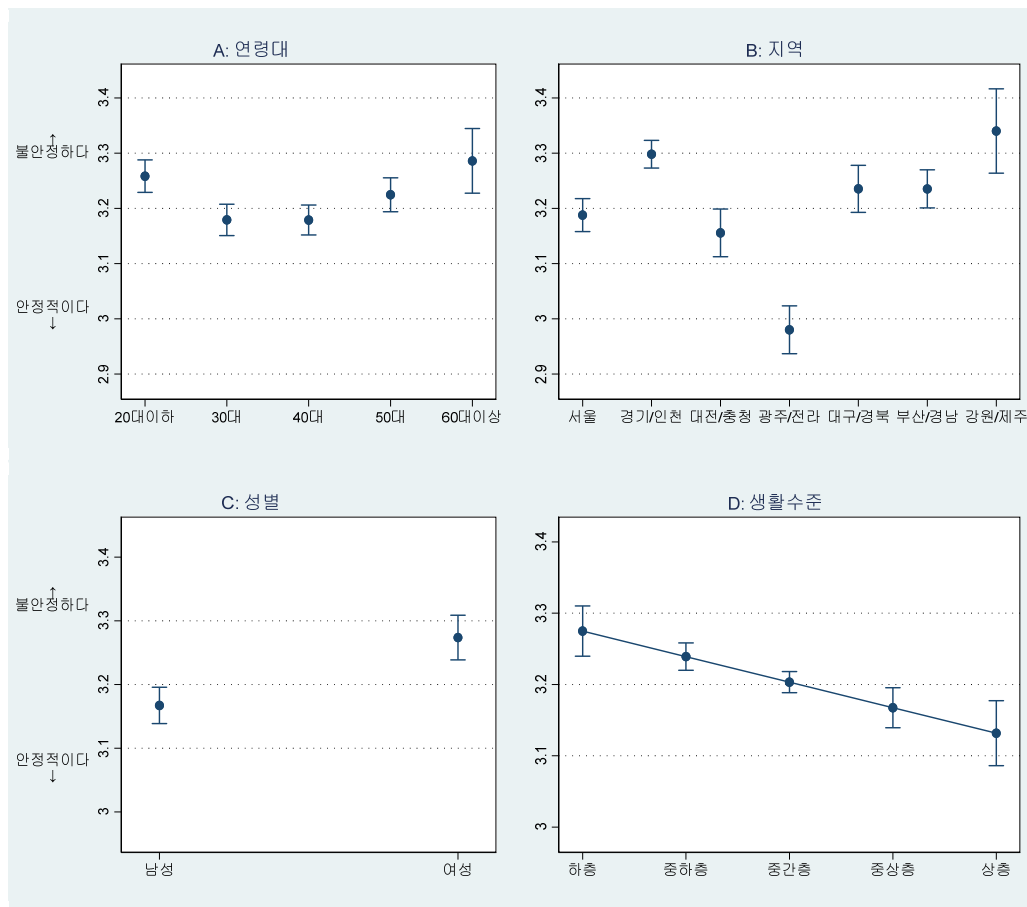
3.1. 연구 설계

- 국민안보의식은 주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 이 중에서도 특히 연령대, 지역, 성별, 소득수준, 최종학력, 군복무 여부, 직업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
-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인구집단별 차이가 안보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함.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중 주요 16개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였음.
 - 종속변인: 1)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2)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3)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4)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 5) 한미동맹 관계, 6)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7)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8)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9)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 10)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11)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12) 북한 핵·미사일 폐기의 진정성, 13)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14)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15) 우리나라 군에 대한 신뢰도, 16)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의견
 - 독립변인: 연령대(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지역(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원/제주), 성별(남성, 여성), 소득수준(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최종학력(고졸이하, 대졸이상), 군복무(군필, 미필), 직업(농업/자영업/기능직, 사무/경영/전문직).
- <그림 3-1>부터 <그림 3-16>은 독립변인의 차이에 따른 종속변인의 예측 값을 95% 신뢰구간과 함께 나타내고 있음.

3.2. 결정요인 분석결과

3.2.1.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1	매우 안정적이다
2	안정적인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불안정한 편이다
5	매우 불안정하다



[그림 3-1]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연령, 지역, 성별, 소득수준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각각의 응답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20대와 60대(예측값 약 3.3)가 30~50대(평균 예측값 약 3.21) 보다 한국의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30~40대(예측값 3.18)의 연령대가 한국의 안보상황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지역별 응답은 경기/인천과 강원/제주 지역의 응답자(평균 예측값 3.32)가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가장 불안정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광주/전라 지역(예측값 3.0) 응답자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였음.
- 성별에 따른 응답의 경우 남성 보다는 여성이 한국의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 결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보정책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의 경우 응답자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상층(예측값 3.16)이 한국의 안보상황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함.
- 이는 국민안보의식이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국방홍보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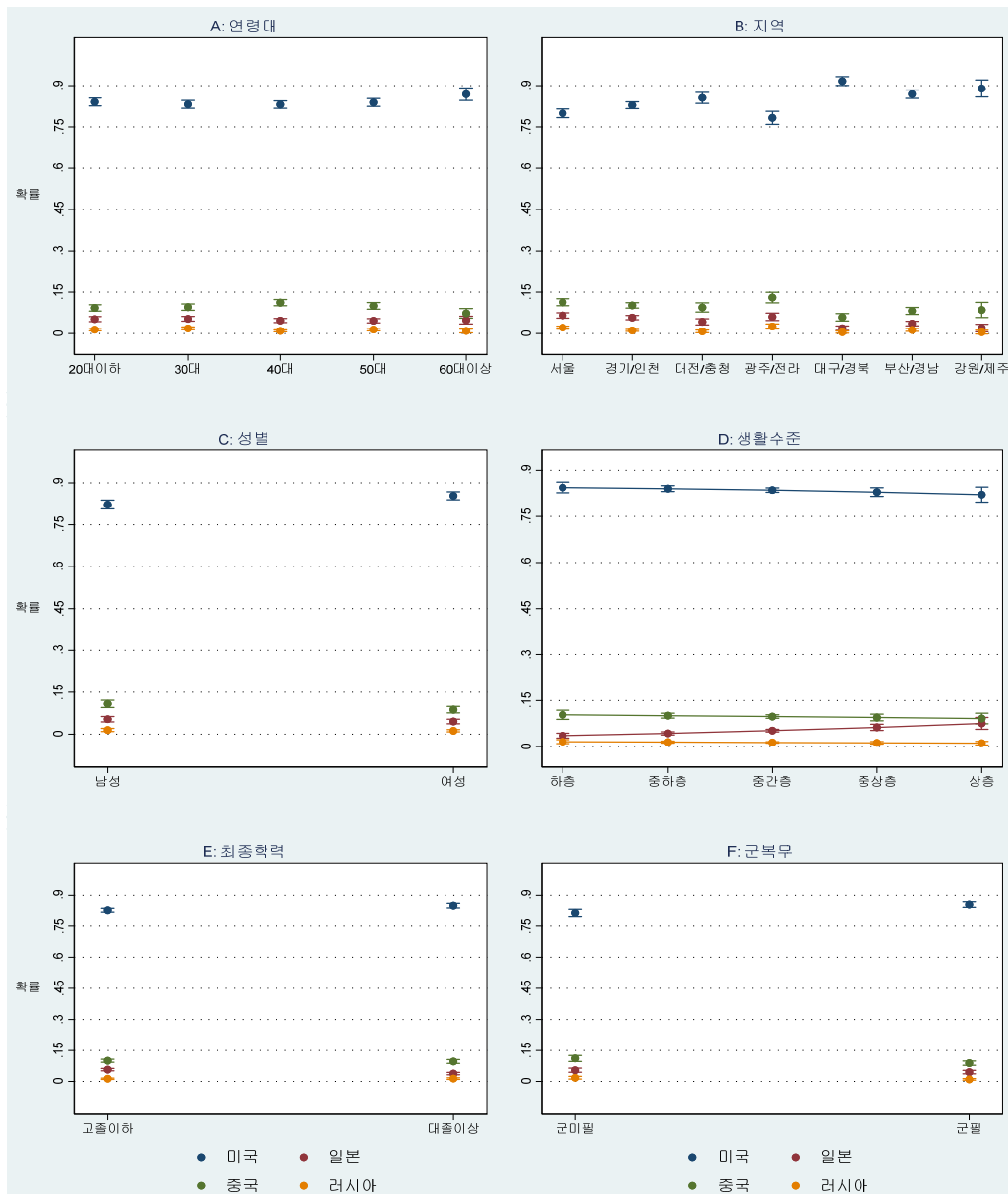
3.2.2.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 한국의 안보에 있어 연령, 지역, 성별, 소득수준, 학력, 군복무 유무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80%이상의 응답자가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하였음.
- 특히, 지역별 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응답이 지역별 평균응답보다 약 10%정도 높은 90%의 확률로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음.
- 미국이외의 일본, 중국, 러시아는 응답자의 약 15% 정도만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국민들이 한국 안보를 위해 미국의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요도 순으로 살펴보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러시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1% 정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중요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응답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국의 안보상황에 일본이 미치는 중요도는 (비교

적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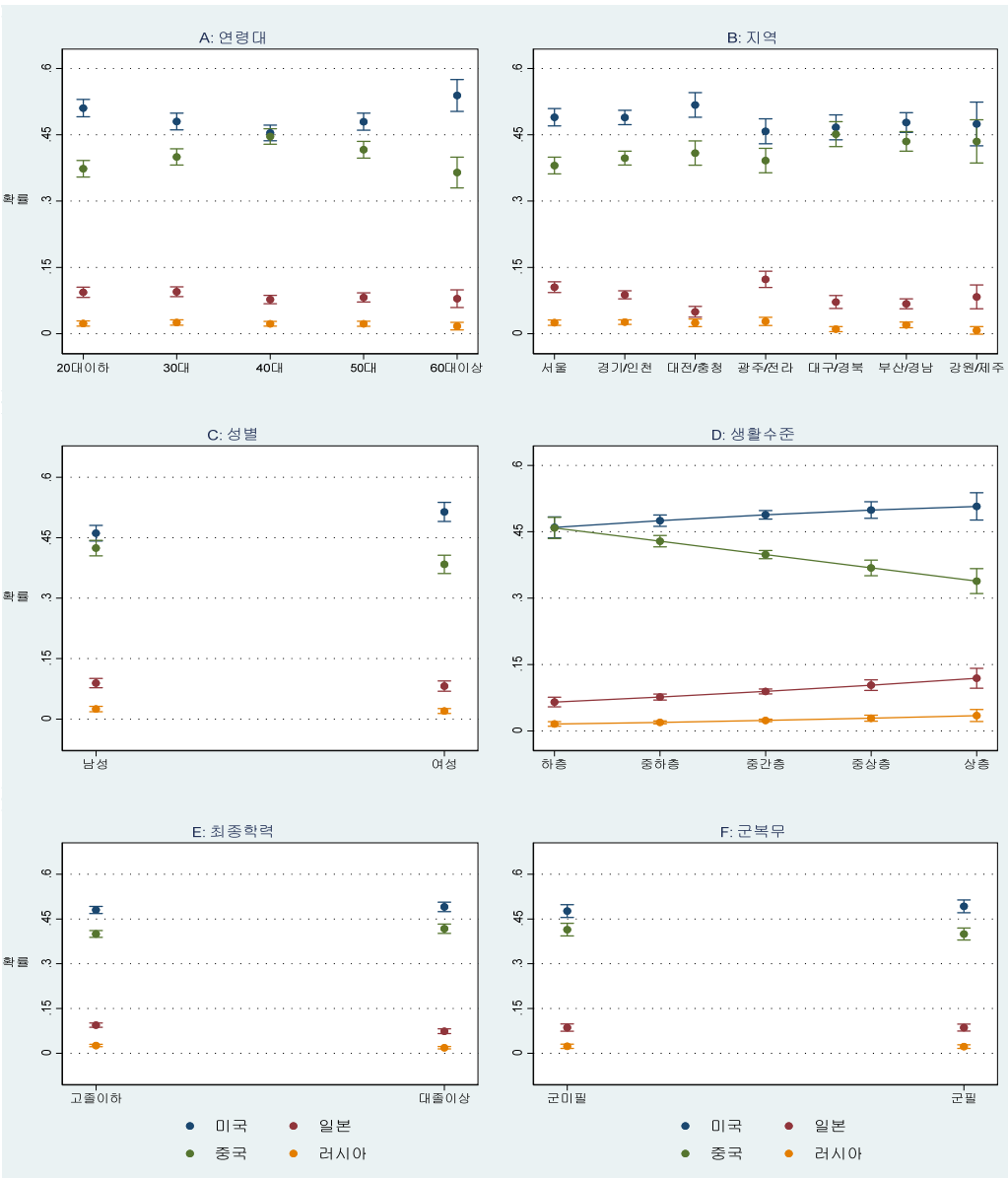
-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일본이 가지는 중요도가 소득수준의 하층과 상층 사이에 약 5%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상층으로 갈수록 일본이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응답자의 약 10%)을 한다고 보았음.



[그림 3-2]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3.2.3.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그림 3-3]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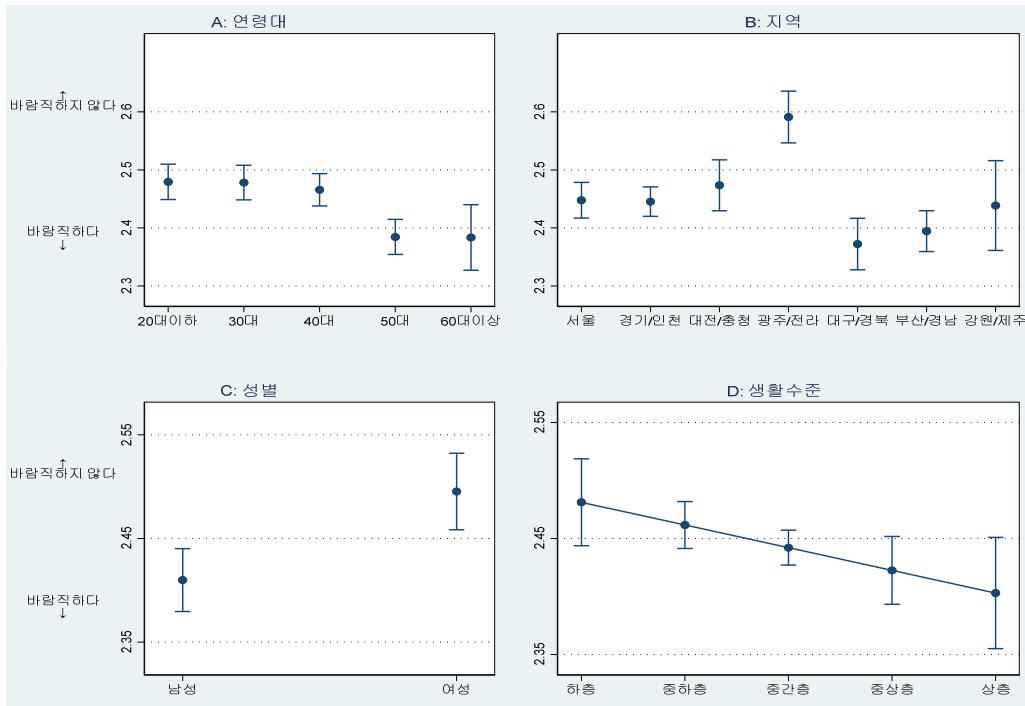
- 안보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의 중요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남.
- 연령, 지역, 성별, 소득수준, 학력, 군복무 여부에 따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약 47% 정도로 나타났음.
- 그러나 미국 이외의 중국의 중요도 또한 전체적으로 약 40~45% 비율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중국과 미국의 중요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한국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45%의 동일 비율을 보였음.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국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낮아져, 상층의 경우 응답자의 약 33%만이 중국이 한국의 경제에 중요하다고 응답했음.
- 연령대 및 성별에 따라서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외부 국가의 영향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60대 이상의 장년층 일수록, 남성 보다는 여성이 약 3~5% 정도 높은 비율로 중국보다 미국을 중요시하고 있음.
- 일본과 러시아는 연령별, 지역별, 성별, 소득수준, 학력 및 군복무 유무의 응답자가 각각 15%미만의 비율로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약 2%정도의 응답자만이 러시아가 한국 경제에 중요하다고 응답했음.
- 요컨대 일반시민들은 러시아가 안보와 더불어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

3.2.4.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

1	매우 바람직하다
2	바람직하다
3	보통이다
4	바람직하지 않다
5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 한·미·일 삼국이 진행하고 있는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연령, 지역, 성별, 소득수준 정도 차이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비교적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 각각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50대 이상의 응답층(예측값 2.39)이 40대 이하의 응답층(예측값 2.47)보다 한·미·일 삼국의 군사협력을 조금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예측값 2.59)이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예측값 2.38)에 비해 한·미·일 삼국 간 군사협력에 대해 조금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성별에 따른 응답에서는 여성(예측값 2.5)보다 남성(예측값 2.4)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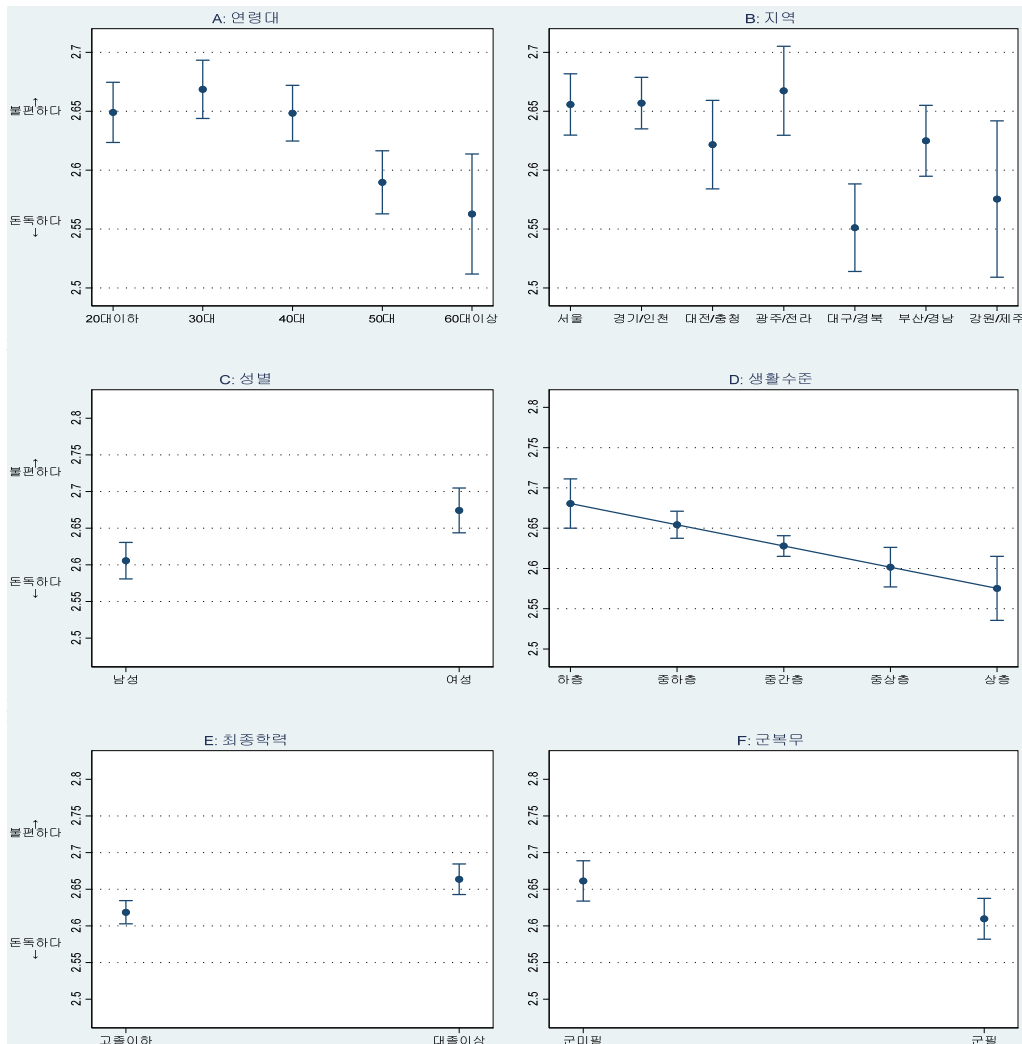
[그림 3-4]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

3.2.5. 한미동맹 관계

1	매우 돈독하다
2	돈독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불편하다
5	매우 불편하다

-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연령, 지역, 성별, 소득수준, 학력, 군복무 여부에 걸쳐 전반적으로 돈독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먼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예측값 2.5)은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하다고 보았으며, 40대 이하 응답자(평균 예측값 2.65)는 50대 이상에 비해 한미동맹이 돈독하다는 반응이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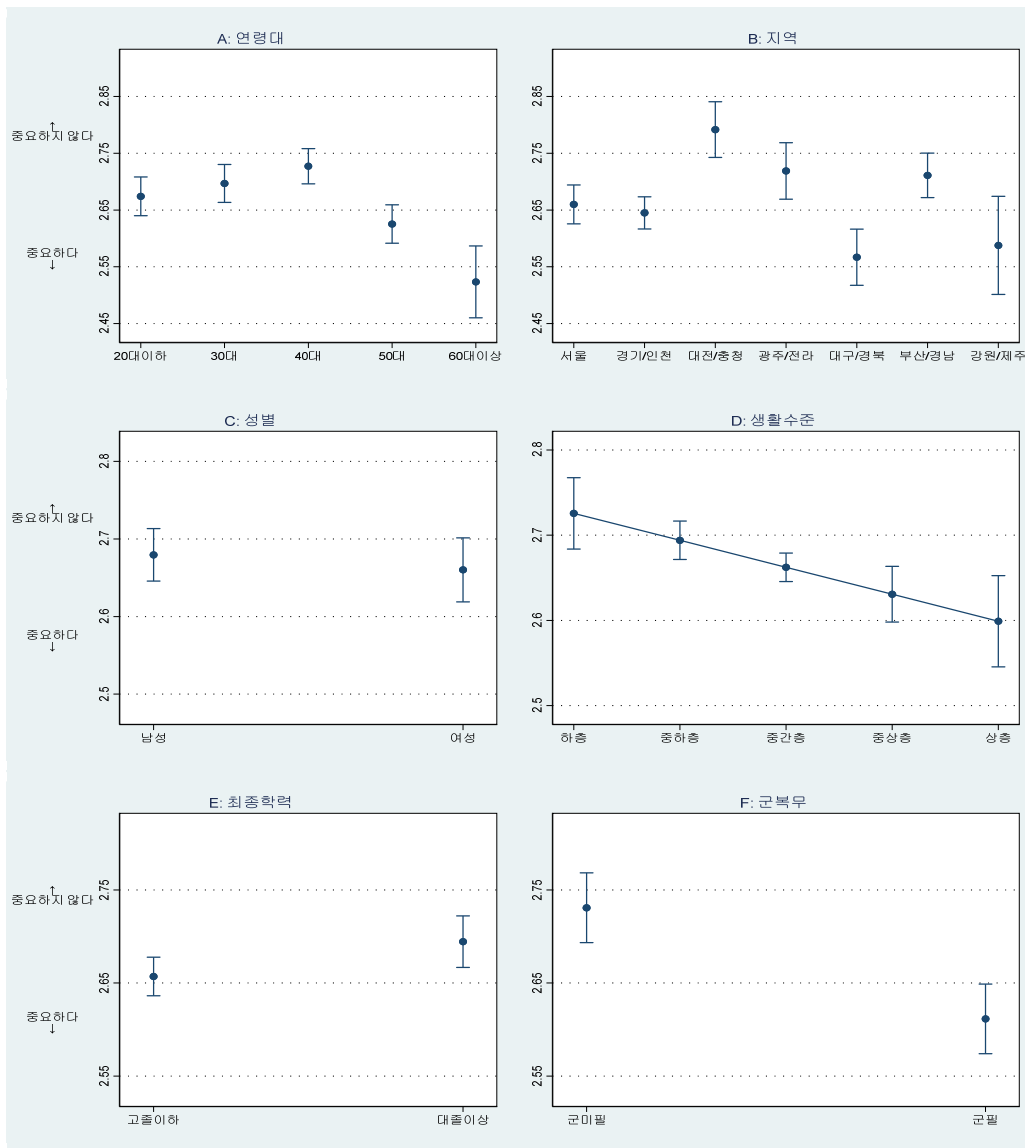
- 지역별 응답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인천, 광주/전라 지역의 응답자(평균 예측값 2.652)가 다른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한미동맹 관계를 불편하게 평가하고 있음.
- 성별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예측값 2.65)에 비해서 남성(예측값 2.61)이 한미동맹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병역 여부에 따라서는 미필자(예측값 2.65)보다 군필자(예측값 2.6)가 한미관계를 더 긍정적인 바라보고 있음. 이는 군 경험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음.
-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예측값 2.6)가 대졸이상보다 한미동맹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평가하고 있음.



[그림 3-5] 한미동맹 관계

3.2.6.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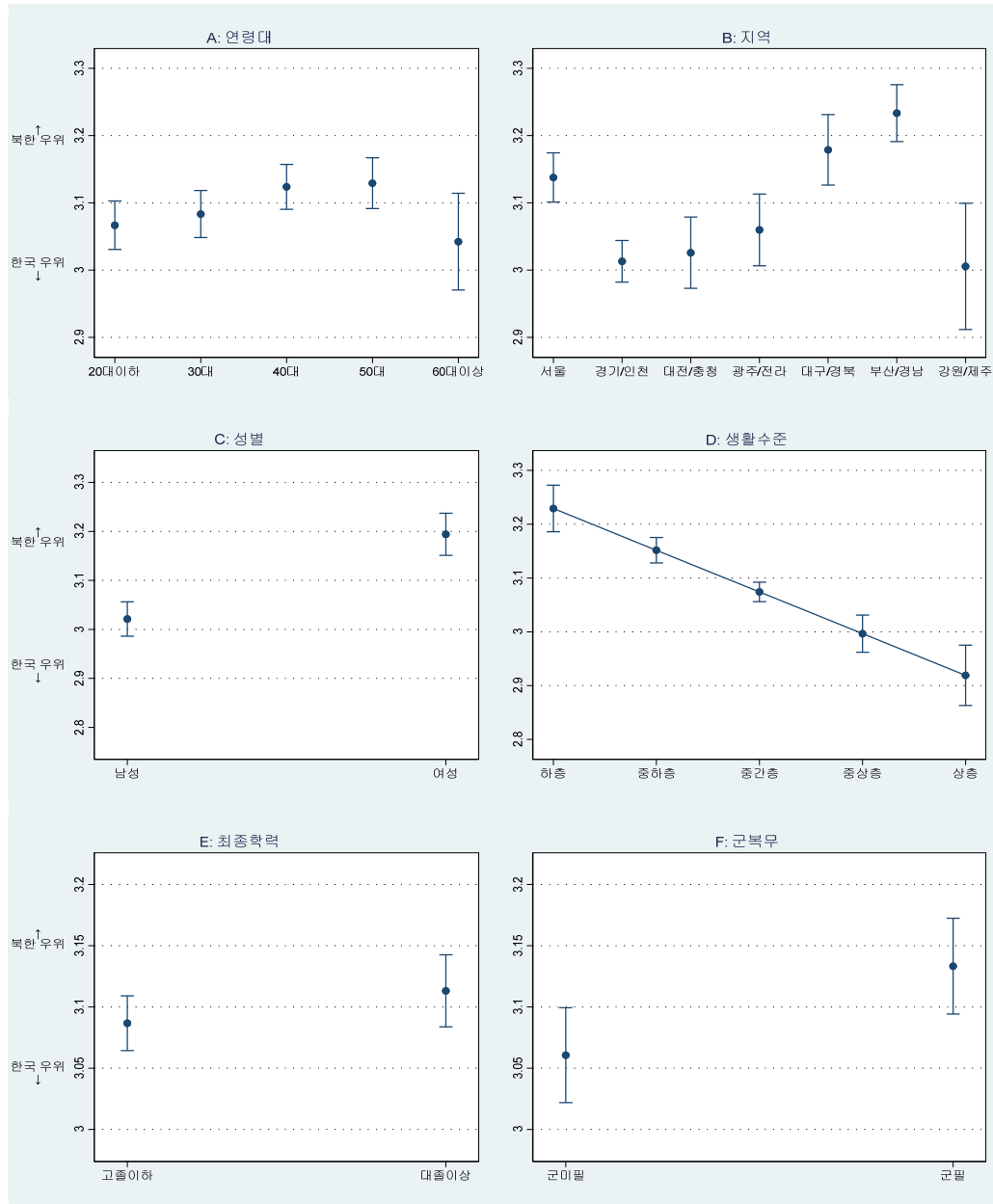
[그림 3-6]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 한국의 안보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결과에서, 연령대별로는 40대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음.
- 반면 40대 이하의 연령(기준값 2.69)일 경우 장년층 보다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함.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강원/제주(예측값 2.57)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대전/충청(예측값 2.8) 지역이 지역별 응답자 가운데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소득수준별 응답자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예측값 2.62) 주한미군에 대한 중요도를 크게 생각하고 있음.
- 학력과 군복무 여부에 따라서는 고졸 보다는 대졸 이상이, 군필 보다는 미필(예측값 2.73)일 경우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함. 단, 성별에 따른 응답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음.

3.2.7.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1	한국이 훨씬 우위
2	한국이 다소 우위
3	비슷하다
4	북한이 다소 우위
5	북한이 훨씬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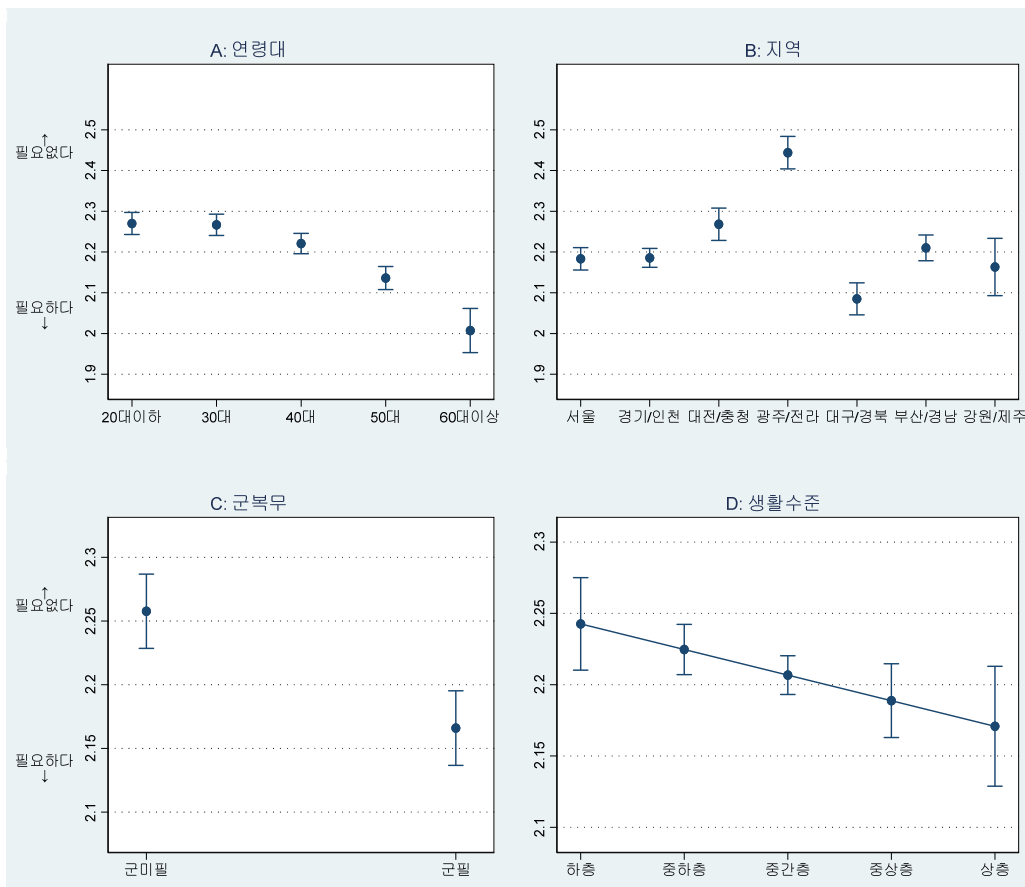
-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 대한 설문결과에서, 연령에 따른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응답자(예측값 3.05)가 50대 이하보다 한국의 군사력을 조금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지역별 응답자를 살펴보면 서울, 대구/경북, 부산/경남의 거주자들(평균 예측값 3.1)이 다른 지역 응답자들(평균예측값 3.01) 보다 '북한 우위'의 평가를 하고 있음.
- 성별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군복무 여부에서는 미필자(예측값 3.07)보다는 군필자(예측값 3.18)가 북한의 군사력 우위에 더 무게를 두었음.
- 소득수준의 경우, 상층(예측값 2.9)으로 갈수록 '한국의 군사력 우위'를 더 인식하고 있음.



[그림 3-7]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3.2.8.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필요 없는 편이다
5	전혀 필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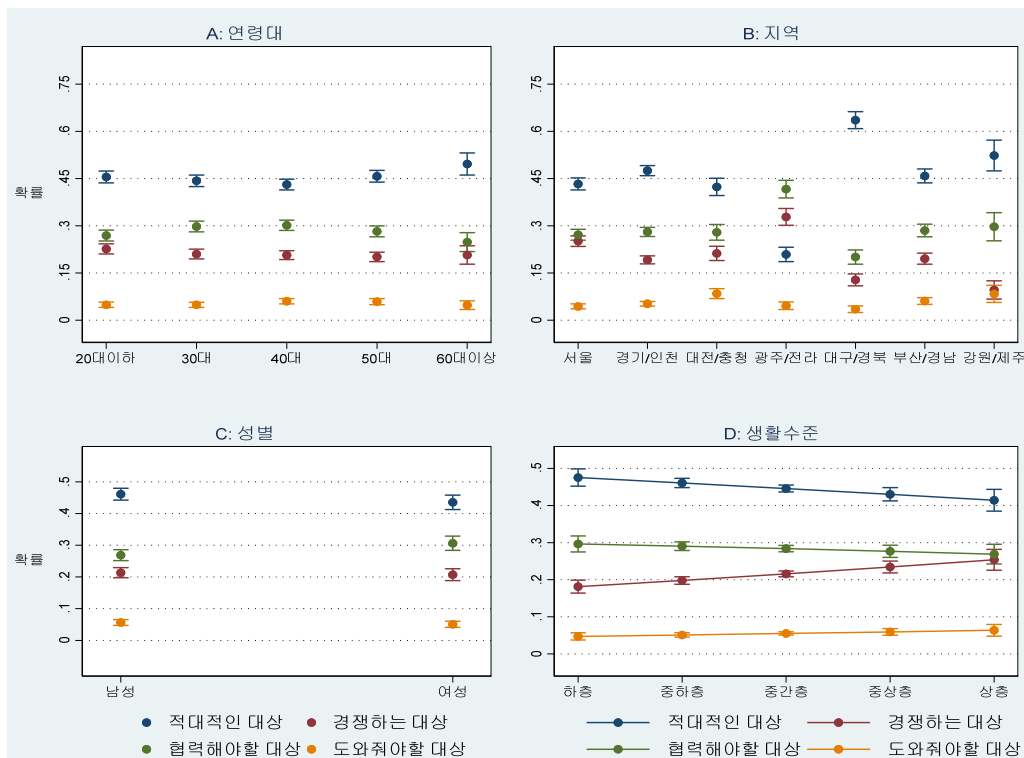
[그림 3-8]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연령대, 지역, 군복무, 소득수준에 걸쳐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음.
- 연령대에 있어서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예측값 2)으로 갈수록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특히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한미연합훈련을 매우 필요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30대 이하(예측값 2.28)는 중장년층에 비해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함. 이는 세대에 따라 연합훈련 지지 여부가 크게 달라짐을 의미함.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예측값 2.1)이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광주/전라 지역(예측값 2.45)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군복무 여부에 따라 미필자(예측값 2.25)에 비해 군필자(예측값 2.16)가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음.
- 응답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중상층을 기준으로 상층의 응답자(예측값 2.18)일수록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중상층 이하의 응답자(예측값 2.23)일수록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둔감한 편이었음.

3.2.9.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

1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2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3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4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그림 3-9]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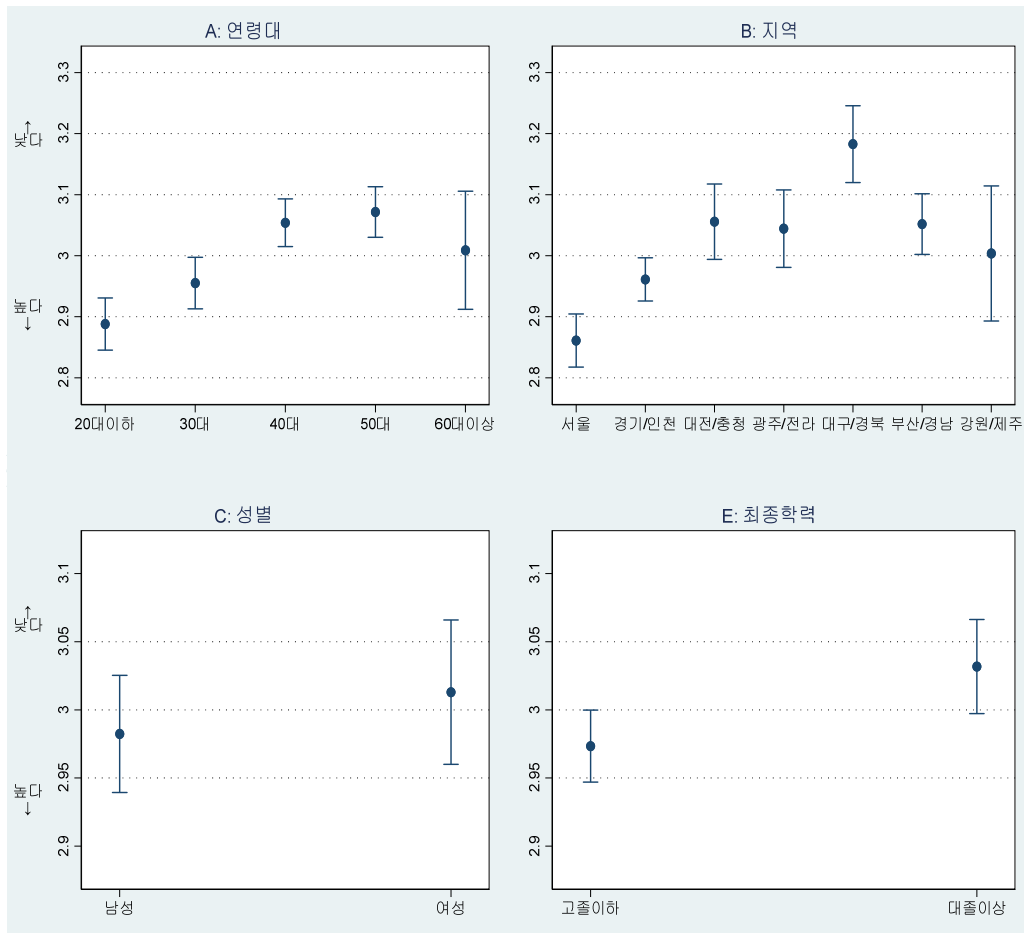
- 북한정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북한정권을 우리의 안정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연령대별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30대와 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
- 북한을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은 전체 연령대 모두 약 1%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의 응답자만이 다른 지역의 응답자들과 달리 가장 높은 비율(40%)로 북한을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약 20%의 응답자만이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
- 지역별 응답에서 북한을 적대적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으로 (광주/전라 지역에 비해 약 40%가 높은) 60%의 응답자가 북한을 적대적 상대로 인식하고 있음.
- 소득수준별 응답자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북한을 적대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비율은 약 48%로 소득수준이 높은 상층의 약40% 비율보다 8%정도 높게 나타났음.
- 북한을 경쟁상대로 봐야 한다는 대답의 경우, 하층에서는 약 18%가 상층에서는 이보다 약 10%정도 높은 28%의 응답자가 북한을 경쟁상대로 인식했음.

3.2.10.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1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가능성이 높다
3	보통이다
4	가능성이 낮다
5	가능성이 매우 낮다

-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일반시민은 무력 도발 가능성을 높지도 낮지도 않은 보통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예측값 2.89)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음. 이는 20대 이하 청년들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함.
- 지역별 응답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지역(예측값 3.19)이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에 대해 다른 지역에 비해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지역의 응답자(예측값

- 2.85)는 지역응답자 가운데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
- 학력별 응답의 경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예측값 3.04)는 고졸이하의 응답자(예측값 2.97)에 비해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성별에 따른 응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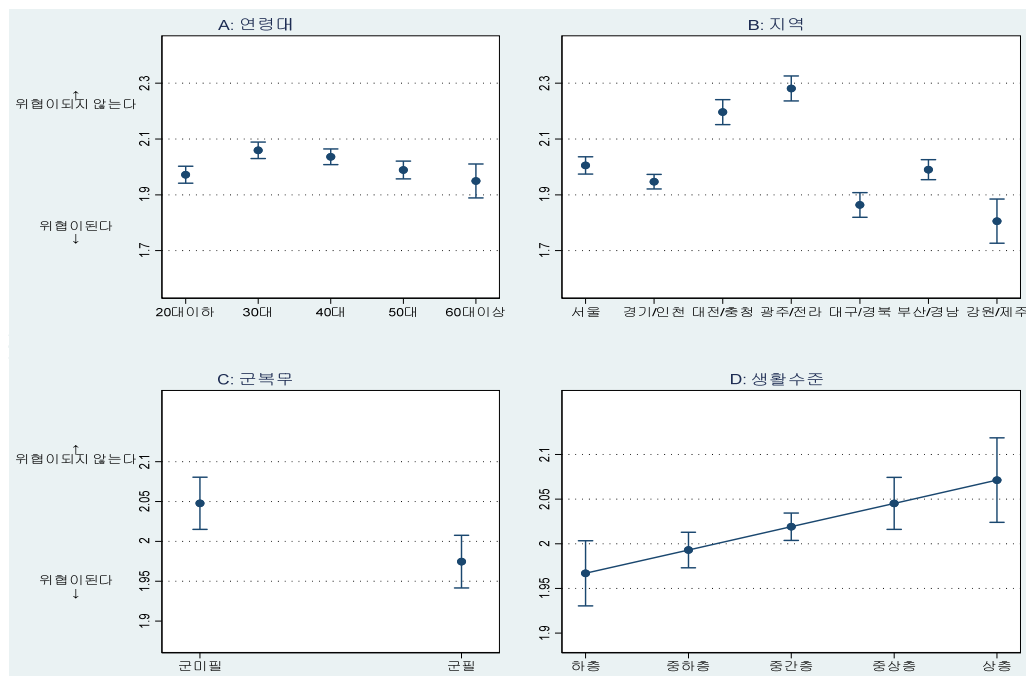


[그림 3-10]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3.2.11.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1	매우 큰 위협이 된다
2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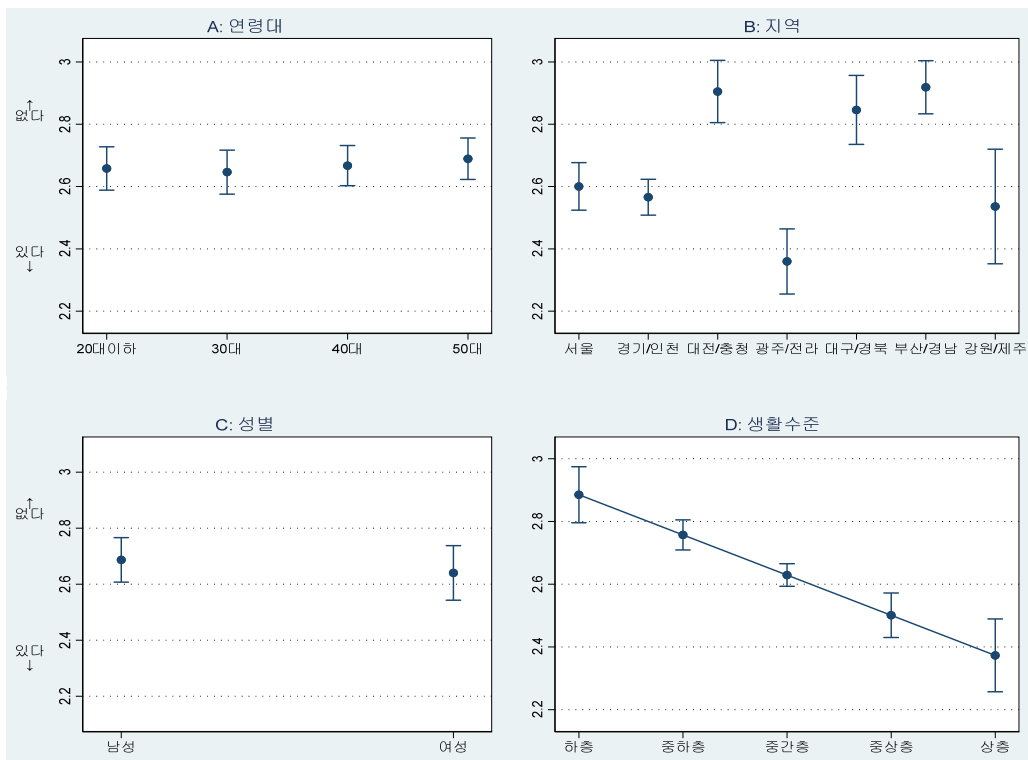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위협성에 있어서 연령대별 응답을 살펴보면, 30/40대 연령(예측값 2.03)은 다른 연령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함. 그러나 20대와 50대 이상은(평균 예측값 1.98)은 북한의 핵이 한반도의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지역별 응답의 경우 대전/충청, 광주/전라(예측값 2.245)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북한의 핵에 민감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으나, 대구/경북과 강원/제주(예측값 1.84) 지역은 지역별 응답자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가장 큰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음.
- 군복무 여부에 따라서는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보았음.
-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하층이하일 수록(예측값 1.98)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3-11]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3.2.12. 북한 핵·미사일 폐기의 진정성

1	진정성이 확실히 있다
2	진정성이 있는 편이다
3	진정성이 없는 편이다
4	진정성이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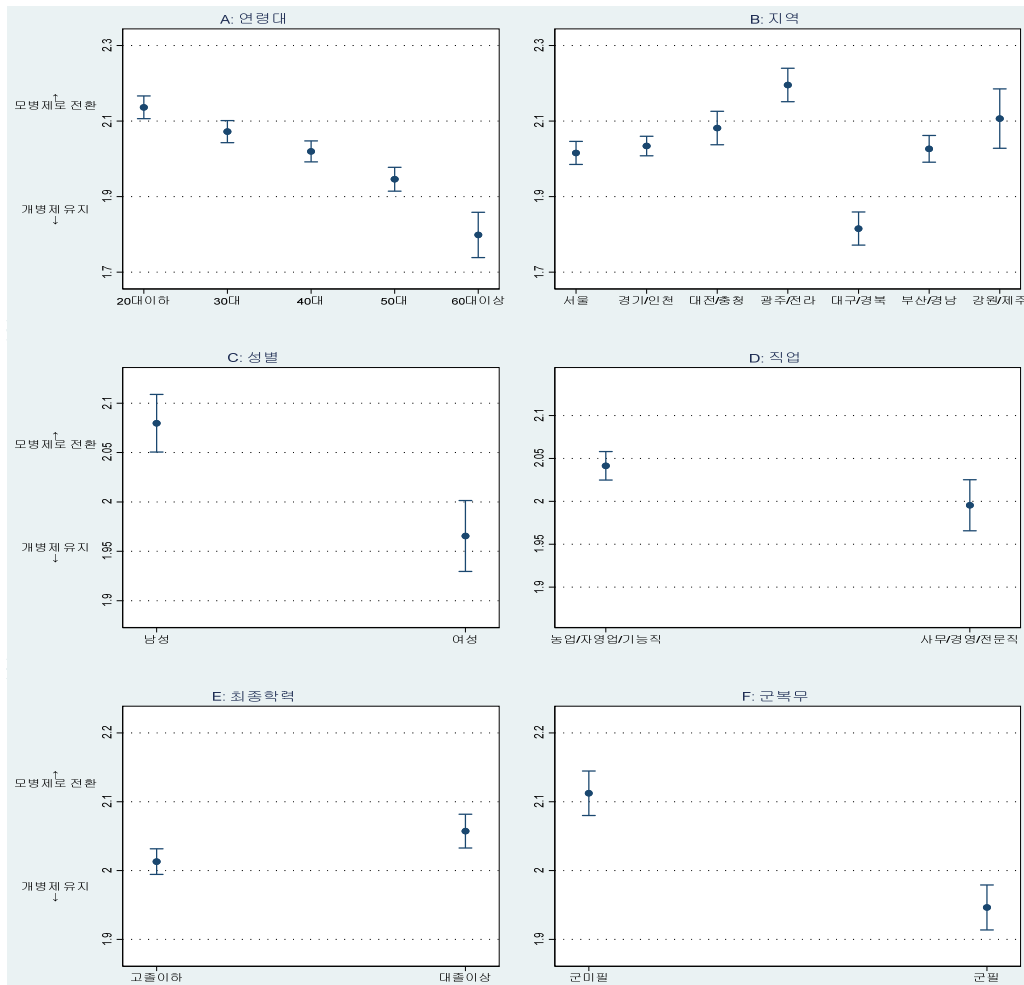


[그림 3-12] 북한 핵·미사일 폐기의 진정성

-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의 진정성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예측값 2.87)은 타 지역에 비해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봤으며, 광주/전라 지역(예측값 2.38)의 응답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에 진정성이 있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응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3.2.13.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1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2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한다
3	점진적으로 지원 병제를 도입해야한다
4	전면적인 지원 병제로 전환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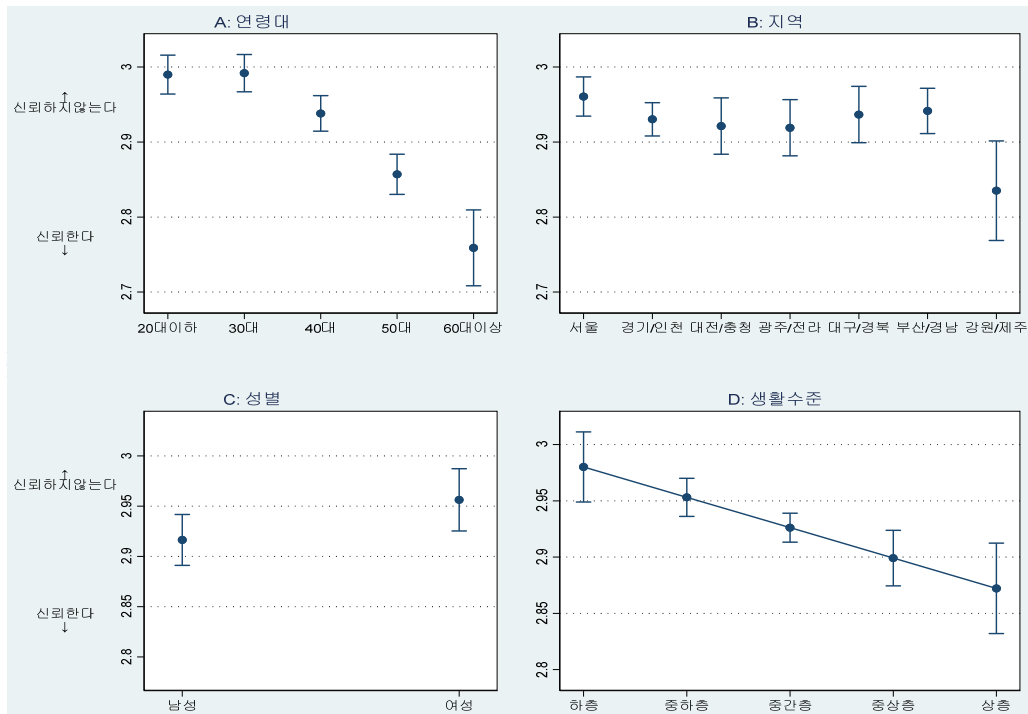
[그림 3-13]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개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연령이 가장 낮은 20세 이하의 연령(예측값 2.12)에서는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음.

- 지역별 응답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예측값 1.8)이 개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전라 지역(예측값 2.2)은 개병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았음.
-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개병제 유지에 찬성하고 있음.
- 직업별 응답에서는 사무직 또는 전문직(예측값 2.0)일수록 개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 반면 자영업 또는 기능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예측값 2.04)일수록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문직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음.
- 학력별 응답의 경우 대졸 이상의 응답자가 고졸 이하의 응답자에 비해 개병제 보완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군복부 여부에 따라서는 이미 군대를 다녀온 군필(예측값 1.95)의 경우 개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군미필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음.

3.2.14.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1	매우 신뢰한다
2	신뢰하는 편이다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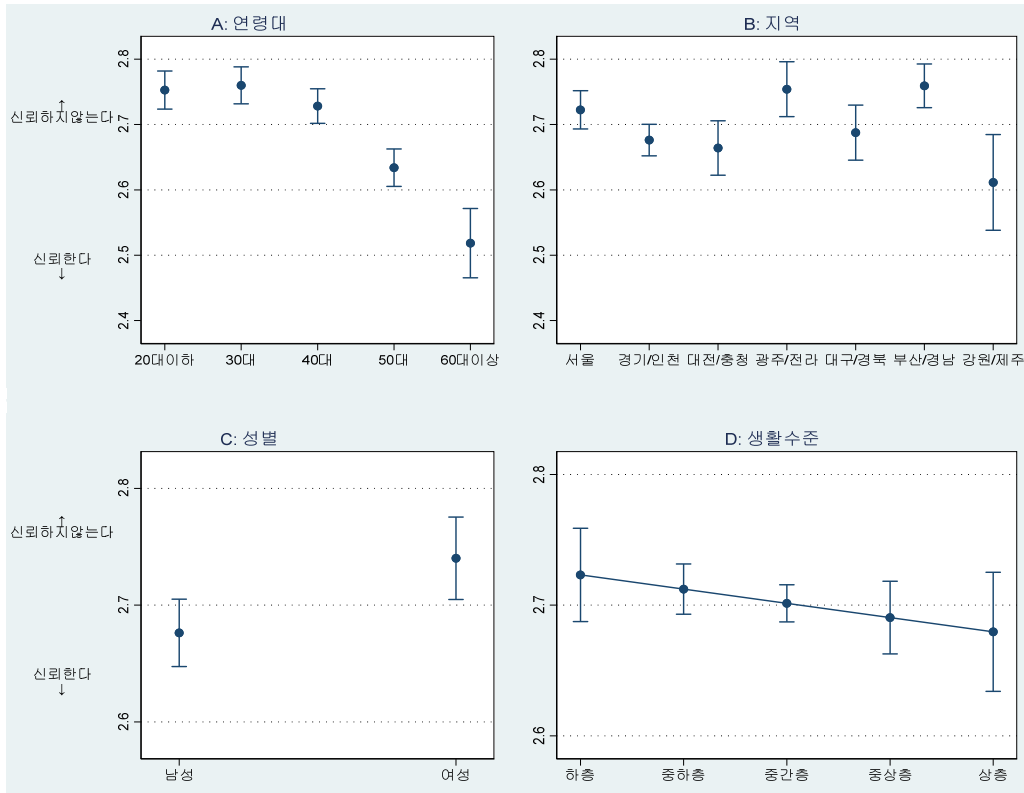
[그림 3-14]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에 관해서는,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예측값 2.81)이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는 편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40대 이하의 응답자(평균 예측값 2.9)는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예측값 2.85)의 응답자가 국방부 발표에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강원/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국방부 발표를 그리 신뢰하지 않았음.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강원도의 지리적 조건이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됨.
-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소득수준이 중산층 이상일 경우 국방부 발표에 대해 신뢰성을 보였으나, 중하층 이하 응답자는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있지 않았음.
- 성별에 따른 응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3.2.15. 우리나라 군에 대한 신뢰도

1	매우 신뢰한다
2	신뢰하는 편이다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우리나라 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성별은 30대 이하의 청년층일수록 군을 신뢰하지 않는 반면, 60대 이상의 노년층(예측값 2.52)은 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임.
- 지역별 응답의 경우 강원/제주 지역(예측값 2.6)에서 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음. 반면 광주/전라 지역과 부산/경남 지역(평균 예측값 2.75)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성별에 따른 응답률을 살펴보면, 군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많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군을 더 신뢰하고 있었음.
-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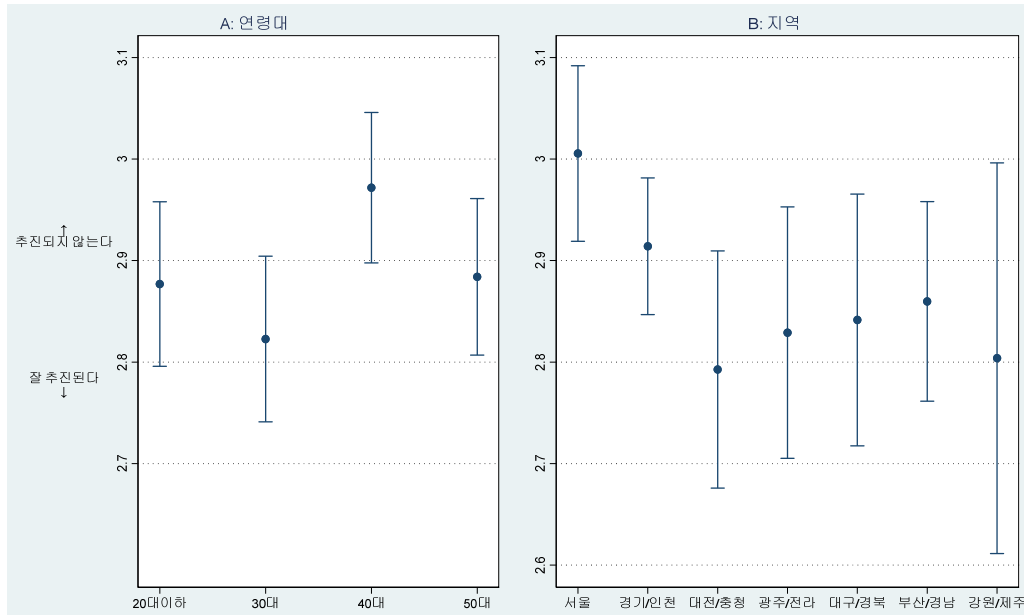


[그림 3-15] 우리나라 군에 대한 신뢰도

3.2.16.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의견

1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
2	잘 추진되고 있다
3	보통이다
4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해서는 2019년 한해에 대한 설문조사만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전 연령대에 걸쳐 국방개혁 추진성과가 '보통이다'는 의견이 우세했음.
- 지역별로는 서울시민들이 국방개혁 2.0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기타 변수들에 따른 응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못함.



[그림 3-16]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의견

3.2.17. 소결

- 안보의식 결정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한·미·일 군사협력,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지역 간의 인식차가 크게 나타났음.
 - 특히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주민들의 인식은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차이를 보임.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의 60%가 북한을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는 광주/전라 에 비해 약 40%나 높은 수치임.
 - 모든 지역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대북정책 추진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 둘째,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남북 간 군사력 비교,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군에 대한 신뢰 등의 이슈에서 남녀 간 인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군과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국방 관련 이슈도 젠더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셋째, 전 연령층이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
- 넷째, 20대 이하 청년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이는 20대 청년들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
- 다섯째, 20/30대 청년들과 여성들이 (장년층과 남성에 비해) 우리 군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함.
- 여섯째, <국방개혁 2.0>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음. 일반국민들이 국방개혁 2.0의 내용을 평가하기엔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1.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현황

4.1.1. 안보의식

-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불안정하거나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특히 3~4년 정도의 간격으로 안보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으로 일반시민이나 전문가 모두 북한의 군사위협과 체제불안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그러면서도 2019년 조사에서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연령, 성별, 학력, 거주 지역, 생활수준 등을 떠나 국민들이 미국을 안보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로 꼽았다는 점에서 튼실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 및 시민들의 높은 기대가 잘 드러난 조사결과라고 생각됨.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보통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즉, 전문가들은 일반인에 대한 안보인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보았으나, 최근 5년 동안에는 일반인의 안보의식이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음.
 - 이는 2010년 이후부터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적극적이고 활발해졌고, 그러한 최근의 상황이 조사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하여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017년에 매우 낮았으나, 2018년에 매우 높아졌음.
 - 이러한 응답은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반복되었던 2017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
 - 더불어 2018년에는 북미대화 및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등의 정치적 사건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 요인으로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국내 요인은 국내 정치의 불안, 국내 경제의 불안, 사회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국민 안보의식 해이 등을 꼽았음.

- 그러나 최근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북한정권을 위협의 요인으로 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추세이며, 북한주민을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북한의 핵실험 반복 등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와 한미관계가 화해무드로 귀결된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4.1.2. 국방정책인식: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국방부 신뢰도, 징병제 등

- 우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요 어젠다로 부상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일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을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높게 조사되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 함.
- 이는 비록 최근 과거사 문제로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단기적으로 한일 간 군사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상한 사실과는 별도로 다수 국민들이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한일 간 군사협력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50-60대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지역 보다는 영남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 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주한미군 주둔의 한반도 안보 유지 측면에서의 가치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미 연합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비해, 20-30대 젊은 층이나 호남지역, 그리고 군미필자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감감이 다소 낮게 나타난 만큼, 그러한 편차의 존재 이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을 모색할 수 있음.
-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주제별로 다양함. 대다수의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은 국민개병제에 대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입을 모았음.
 - 다만, 최근 국방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현대전의 양상이 변화하는 추세로 인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경우 2010년 전후로 개병제 유지 의견이 다소 하락한 반면,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20-30대 젊은 층이 60대 이상 노년층 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종종 드러내온 호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고

- 국방의 의무를 지닌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장기적 연구는 필요할지라도 아직 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이 모병제보다 개병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와 일반인들 모두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했으며, 군 내 인권 보장정도에 대해서도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군 복무 환경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 이유는 투명성에 대한 문제부터 소통부재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 있었음.
 -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는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낮게 조사되었는데, 실제 국방과 직접 관련이 높은 청년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 및 국방부에 대한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역설적이게도 가족, 친지 등이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답변의 비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한 만큼, 군과 국방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잠재적 인식은 결코 나쁘지 않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음.
 -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군대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메우기 위해 국방홍보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
 - 이번 조사에서 국방홍보 매체에 대한 접촉빈도가 비단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서도 높지 않게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전문적 고찰 작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안보와 보안을 중시하는 군의 특성상 국방홍보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매체나 내용을 차별 또는 분리해서라도 군 내부 인사와 별도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홍보 전략 수립을 통해 일반시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첨단무기 체계 확보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일반국민들은 첨단무기 체계 확보에 대한 의견도 높았으나, 여전히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군은 향후 국방력의 첨단화와 동시에 G20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현대식 장병복지 시설 도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임.
 - 끝으로 우리 군의 해외파병에 대해 과반수의 국민들은 국제평화 증진, 국가이익 창출 기반 강화라는 명목 하에 찬성하고 있음.

- 흥미로운 사실은 다수의 응답자들이 해외 파병이 가져올 안전상의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한국군 파병이나 평화유지활동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을 축소하거나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훨씬 더 높게 조사되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제고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한국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음.

4.2. 「국방개혁 2.0」에 대한 국민 인식 평가

- 국방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안보상황과 동시에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저하, 높은 수준의 국방운영 요구 등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불확실한 안보상황과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하였음.
- 특히, 한반도는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높아진 국민의식 등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장 환경과 안보상황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음.
-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동과 전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시대적 소명이라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군은 단순한 변화로서의 개혁을 넘어 새롭게 창군한다는 신념과 각오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해가야 할 것임.
- 「국방개혁 2.0」은 3대 목표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그리고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을 수립하였음.
- 우선,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은 북한의 위협, 잠재위협 그리고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전방위적으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둘째, 하드파워인 군 구조와 방위사업 부분을 4차 산업, ICT 등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두어 부대 및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자 함.
- 이러한 개혁 작업의 지향점은 결국 우리 군이 소프트파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 민군 융합, 인권·복지 구현 등 선진국방운영과 병영문화를 수립하여 궁극적으로는 미래 선진 국가에 걸맞은 국방력 수준을 갖추는 것임.
- 그러나 2019년 「국방개혁 2.0」과 그 추진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약 35%가 「국방개혁 2.0」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다소 부정적 조사 결과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 추가적으로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인들의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약 25%, 부정적인 응답은 약 14%였으며, ‘보통’은 60.3%였음.
- 전문가 역시 일반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으나, ‘보통’이 70.3%으로 일반인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음.
- 이러한 「국방개혁 2.0」에 대한 미진한 시민 인지도와 인식은 향후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국방부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며, 「국방개혁 2.0」의 추진 필요성과 추진 경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추가 홍보 작업이 필요함.

4.2.1. 전장 및 안보환경 변화 대응

- 한반도는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하고 도전적인 안보상황에 처해있음.
- 국제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 심화되는 미·중간 패권경쟁은 역내에서 힘의 외교 논리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또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함.
- 이러한 역내 안보 불안정성의 증대는 궁극적으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위협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의 잠재적 안보 위협의 증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주지의 사실임.
- 또한 동북아 지역의 심화된 전략 경쟁의 결과로 군비증강, 재난과 테러 그리고 사이버 테러 등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위협의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사실 또한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현실적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랜 조사 기간을 통틀어 응답자들은 한반도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적 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일관되게 꼽았음.
-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 및 북미관계 악화 등도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미동맹 관계 약화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2018년에는 27.8%였으나, 2019년 40.8%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비군사적인 안보문제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전문가들은 10명 중 9명이 비군사적 안보문제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2017년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고조되던 전쟁위험이 불식되고,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그리고 북한의 비

- 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진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과 그것의 현실적 실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존 위협 및 잠재적인 미래 위협 요인 등 군사위협이 성격이 다변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함.
 - 이처럼 급격하게 변동하는 안보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방어해 낼 수 있는 강한 군대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해 기존의 개혁과는 수준을 달리하는 「국방개혁 2.0」의 추진이 요구됨.
 - 국외적으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강력한 국방태세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여 군사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함.
 -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를 묻는 질문에서 대해 압도적 숫자의 시민들이 미국을 꼽았으며, 전문가들의 대답도 마찬가지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를 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미국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은 미국이 남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과 남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2019년에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미국이 남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전년도 절반의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2019년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응답 또한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최근 한미동맹의 견고함과 그 실질적 역할에 다소 의문을 갖는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한미동맹의 강화 노력은 비단 한미 우호 관계와 군사협력의 강화 노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지난 7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우리 군은 미국과 더욱 긴밀한 정보공유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 주변의 전방위 군사 위협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군사적 도발과 안보 위협 요인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 위기관리 시스템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군사협력을 다변화하여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및 역내에서 부상하는 잠재적 안보 위협 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 억제 능력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함.

- 또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되, 우리 군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안보위협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문항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남북 교류협력 확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 한미동맹체제 강화 등을 언급하였음.
 -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조사가 실시된 대부분의 연도에 걸쳐 우리 국민들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이 가장 중요한 안보 확립 방안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 한미동맹체제 강화 순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우선적으로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나가되, 그러면서도 동시에 강력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의 유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방어능력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리고 우리 군은 최근 부상하는 재난과 테러 등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테러부대를 보다 강화하고 첨단 장비 및 물자를 보강하여 그들의 임무수행 능력을 지원하고 또한 해외 재난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체제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구조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 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이와 같이 강건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통하여 전환기적인 안보상황에 대비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군사적인 뒷받침을 통해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

4.2.2.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전장 환경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함.
- 노동집약적인 사회에서 스마트 사회로의 변환은 우리 군에게 첨단화와 정예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군으로 하여금 첨단 무기 중심의 현대전, 그리고 나아가 미래 전장에서의 효율적 작전 수행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 그렇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군사능력 및 운영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노력과 집중이 요구됨.
- 따라서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현존 위

- 협을 포함한 다양한 전방위 위협요인에 동시다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고도로 기술집약적인 미래지향적인 군대 구조로 전환을 지향해야 할 것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이러한 첨단정예화를 지향하는 국방개혁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 감소의 과제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다 과학화된 군사능력의 보강은 우리 군이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그렇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우리 군이 신속하게 적응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과업만은 아님.
 -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기간 동안의 연 평균치 값에서 ‘첨단무기 체계 확보’가 33.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동일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보면, ‘첨단무기 체계 확보’를 선택한 비중이 50.7%에 달해 조사에 참여한 절반 가까운 전문가들이 향후 국방비의 우선 투자 분야로 첨단무기 체계 확보를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어서 크게 보서는 첨단 무기체계 확보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이라고 응답한 전문가 비중이 21.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첨단무기 및 기술개발 등에 국방비를 투자하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에 서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방개혁은 관련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개혁 추진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은 향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과 ICT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어 군의 정예화를 추진하되, 이러한 개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장 적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군사 교육훈련 및 병영 환경 개선 과정에서 지능형 과학훈련체계,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등 ICT 신기술을 적용시키고, 이를 통하여 효율성 높은 스마트한 국방운영을 실현시켜야 할 것임.
 - 또한 급변하는 첨단과학기술을 국방개혁에 접목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을 구현하고, 병력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의 저하를 방지하고 예비전력의 내실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구현해야 함.
 - 네트워크의 확대 및 강화, 국방 R&D 역량 확보 등 미래지향적인 인프라를 조성하여 군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음.
 - 군사력의 첨단화, 과학화는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 등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으며, 전투의 첨단화, 기동화, 그리고 지능화를 통해 병력절감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4.2.3. 미래지향적 선진 군대 육성

- 국내정세를 살펴보면 인구감소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탈 물질적인 가치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면서 군대 내에서도 병사 인권보장 및 복무환경 개선 등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개혁 및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즉, 한국의 국방여건은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해있고, 촛불혁명 이후에 높아진 국민의 참여와 인권의식 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어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군대 및 국방 분야가 보다 선진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지원병제보다 국민개병제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세히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일반인의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8년간의 평균치를 보면 ‘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답변(34.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의 비율(33.7%)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 답변을 지원병제와 개병제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모병제보다 현 개병제의 원칙을 선호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같은 기간 국민개병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도 일반인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음.
 - 특히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유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65.9%로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률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였음.
- 즉, 인구감소로 인하여 상비 병력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원병제보다 개병제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물론, 모병제 보다 국민개병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군의 첨단정예화의 필요성이 결코 감소되는 것은 아님.
- 우리 군은 궁극적으로는 병력집약적인 구조를 지양하고,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정예화된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동시에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포함하여 국가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상비 병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를 변화시키되, 전투력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단적인 예로 예비군의 활용을 들 수 있음. 2019년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예비군 제도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문성을 갖춘 예비군 및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을 확대하여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를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야함.

- 또한 국민의 높은 수준에 맞추어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함께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조성해야할 것임.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된 우리 군대 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관한 일반인들 의식을 연 평균값으로 살펴본 결과, 벨 커브(Bell Curve)의 형태가 관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부터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다섯 개의 보기 중에서 중앙에 위치한 보통이라는 응답이 42%에 달했음.
 - 그 외에 ‘잘 보장되는 편이다’와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26.6%와 26.4%를 기록했고,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가 각각 2.1%와 3.0%로서 보통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평균값이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2014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답변과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라는 답변의 응답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아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전문가들의 인식도 일반국민들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군 내 인권 보장 정도가 ‘보통’이라고 답한 연평균 응답률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 다가 30.4%, ‘잘 보장되는 편’이 다가 25.9%를 기록하였음.
- 특이점은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잘 보장되는 편이라는 응답보다 약 4% 가량 높게 나타났지만,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군 내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전문가들 역시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해서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소프트파워라 할 수 있는 국방운영과 병영문화 분야에서 국민들은 선진 국가에 걸맞은 선진화된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첨단무기 체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그 다음 순으로는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도별 추세를 보면 ‘첨단무기 체계 확보’에 대한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속적 국방개혁 추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

- 민군 융합의 효율적 국방인력 운영,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인권·복지 구현 등을 중점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향후 군의 정치적인 중립이 안정적으로 확립되고 제도화되어, 군대 내 병사들이 급변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도 인권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 그러한 제도와 관행들이 성실히 준수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군대 내 의식 개선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임.
 -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높아졌으며,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함께 시민들의 보편적 인권의식도 상당 수준 이상으로 제고되었음.
 - 이런 이유로 인권의식이 투철한 시민들, 나아가 잠재적 병역 자원들을 중심으로 복무환경 및 복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군대 내에서도 시민의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대되어 왔음.
 - 따라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의 심화에 따른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군대 내 인권 및 복지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에 따라 개인의 희생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군 복무 문화는 지양하고, 국가에 봉사하면서도 개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복무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선진민주주의 군대를 지향하는 국방개혁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이 신뢰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우리 군대가 거듭나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됨.

4.3. 결어

-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인구절벽 등 전환기적 안보상황과 함께 민주주의의 심화에 따른 시민의식의 향상,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방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음.
- 「국방개혁 2.0」은 이러한 개혁 과제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음.
- 우리 군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비증강과 강대국 간의 경쟁, 그리고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의 증대로 역내 안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전환기적 안보환경의 한 가운데 놓여 있음.

- 여기에 우리의 국방여건은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감소 문제에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기반의 급격한 전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등 다양한 제약 요건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도전적인 안보상황과 정책여건의 제한 속에서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개혁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러한 목표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함.
- 특히, 최근 촛불혁명 이후 급격히 높아진 국민의 참여의지와 시민의식 등을 고려해 본다면, 국방개혁의 성공적 수행은 결코 하향식의 일방적이며 밀어붙이기 식의 개혁 드라이브로는 수행될 수 없음.
- 따라서 심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방개혁의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방개혁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국방개혁의 성격이 군사 안보 문제로 보안 및 기밀 유지 사항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제약 사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보안수준의 정도에 따라 일반국민, 전문가, 그리고 군 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각기 차별화된 수준에서 적극 알리고, 추진 경과를 홍보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 작업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국방개혁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소통의 노력은 결국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군대 및 국방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신뢰도를 크게 제고할 것이며, 이렇게 제고된 군에 대한 신뢰를 통해 우리 군은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관호, 김순태 (2014) 국민 안보의식 변화에 대한 연구: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결과 (1989년~2013년)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7(3): 121-147.
- 김계동 외 (2016) 현대외교정책론(제3판). 명인문화사
- 김용현, 박영주. (2011).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학생의 안보의식 실태 및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1): 187-213.
- 김재홍 (2012) 국민의 안보의식과 국가방위에 관한 연구. 「군사발전연구」, 6(1): 63-81.
- 신용도 (2005). 국민안보의식 변화추세와 안보의식 제고 방안. 「정책연구보고서: '05 국민 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 11-44.
- 손병권, 김민아 (2016). 한미동맹의 불신과 갈등의 원인: 노무현 행정부시기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4(2): 263-286.
- 이동수, 전상조 (2014). 대학생의 안보의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3(2): 31-60.
- 이옥연 (2004) 안보의식의 성별 차에 대한 담론. 「국방연구」, 47(2): 199-222.
- 정병삼, 조상근 (2011) 안보의식의 구성요인 탐색: 사관생도용 안보의식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방연구」, 54(1): 147-168.

연구진

연구책임 최현진(경희대학교)

연구원 이재묵(한국외국어대학교)

박지연(전북대학교)

이수훈(고려대학교)

강지연(한세대학교)

연구보조 최민진(경희대학교)

이주혁(경희대학교)
